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길 정 아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길 정 아

길정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박 찬 욱 (인)

부위원장 강 원 택 (인)

위 원 박 원 호 (인)

위 원 하 상 응 (인)

위 원 장 승 진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를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정치적 쟁점들에 있어 그들의 당파성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형성하는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당파성과 정치적 태도 사이의 조응도가 증가하는 것이 그 집합적인 결과물로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미시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집합적 수준에서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정책적 태도에 조응하는 정당 선호를 갖게 되면서 이념적 재편(ideological realignment) 혹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가 발생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에서의 조응성이 높아지는 것이 양극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가 이념적·정책적 태도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는 것, 즉 “합리적인 유권자(rational voters)”를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당 지지 분포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관찰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의 조응성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높아지는지를 간과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집합적인 분석 수준에서부터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개별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의 실질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이 기존의 갈등 구도를 “재편(realignment)”시키거나 혹은 “대체(displacement)”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갈등 구도에 누적되어 일원적인 갈등의 구도가 강화되는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이 일어난다. 이렇게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확장은 유권자들의 당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적 환경으로 작용한다.

한편, 유권자들의 이념적·정책적 태도가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렇게 유권자들은 정치적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당파적 편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닌,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s)”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은 정책 선호 혹은 이념 거리의 인식 등에 있어 자신의 당파성에 일치하는 방향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당파성과 이념적·정책적 태도에서의 조응도가 높아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갈등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의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 때문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정치적 인식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의 공과(功過)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통해 투표 선택을 함으로써 선거가 정치권에 대한 상벌을 부과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규범적인 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 요컨대, 상술한 바와 같은 과정이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메커니즘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시적 토대가 바로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이라는 것이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당파적 유권자들은 자신의 당파적 성향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선호의 일관성을 높게 형성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일관된 정책 선호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에 반해, 본 논문은 정책 선호에서의 높은 일관성은 당파적 편향의 결과 나타나는 것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신과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 거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 관련되어,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보다, 자신이 정파적으로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조정하는 당파적 편향의 모습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회고적 투표의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의 경험적 근거를 확인하였다.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당파성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따라서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의 당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부 신뢰와 그를 기준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현직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부의 성과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해 불신을 표출함으로써 당파적 갈등이 상존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것이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임을 주장하였다.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기술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험적인 차원에 더하여, 본 논문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적인 요인에 대해 지목하였다. 기성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철회하는 무당파층 유권자들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지표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논문은 오히려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보이는 편향성과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선거의 기능을 퇴색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에 주목한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유권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그 본질적이고 규범적인 함의에 기반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당파적 편향, 양극화, 정책 선호, 이념거리,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학 번 : 2010-3091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	9
제 2 절 한국 정치에서 “갈등의 확장”과 유권자의 양극화	20
제 3 절 정당 태도와 당파적 편향	26
제 4 절 당파적 편향, 양극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	33
제 5 절 논문의 분석틀과 주요 연구문제	37
 제 3 장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42
제 1 절 정책 선호,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42
제 2 절 이념 성향, 정책 선호와 정치 지식	45
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45
2.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정치 지식	49
3. 정치적 동기로서의 정당일체감과 당파적 편향	54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59
제 4 절 분석 결과	66
1.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66
2. 정당일체감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70
3.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73

제 5 절 소결	78
 제 4 장 이념거리 인식의 당파적 편향	81
제 1 절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81
제 2 절 이념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84
1. 이념거리 인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성	84
2. 유권자의 이념과 양극화	87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91
제 4 절 분석 결과	100
1. 교차-지연(cross-lagged) 변수 분석: 19대 대통령선거	100
2.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 ..	103
3.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108
제 5 절 소결	114
 제 5 장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117
제 1 절 유권자의 정부 신뢰와 당파적 편향	117
제 2 절 정부 신뢰에 따른 회고적 투표와 당파적 편향	121
1.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회고적 투표	121
2. 정부 신뢰와 회고적 투표	123
3.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127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132

제 4 절 분석 결과	139
1. 정부 신뢰, 정당 호감도와 투표 선택	139
2. 2014년 지방선거	141
3. 2018년 지방선거	144
제 5 절 소결	152
 제 6 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9
Abstract	186

표 목 차

[표 3-1] 정책 문항	60
[표 3-2] 변수의 조작화 방식	62
[표 3-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63
[표 3-4] 회귀계수의 해석	65
[표 3-5] 진보-보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정치 지식 수준에 따라)	66
[표 3-6]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67
[표 3-7]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라)	69
[표 3-8]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식 수준	71
[표 3-9]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 교차표	71
[표 3-10] 정치 지식 평균비교: t-test	72
[표 3-11] 정치 지식 평균비교: F-test	72
[표 3-12] 진보-보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라)	73
[표 3-13]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74
[표 3-14] 정책 일관성 강도: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기울기 검정	76
[표 4-1] 변수의 조작화 방식	95
[표 4-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96
[표 4-3] 회귀계수의 해석	99
[표 4-4] 이념거리와 호감도의 교차 효과 검증: 19대 대통령선거	101

[표 4-5]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OLS 회귀분석:	
18대 대통령선거	103
[표 4-6]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OLS 회귀분석:	
19대 대통령선거	106
[표 4-7] 응답자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 효과:	
18대 대통령선거	108
[표 4-8] 응답자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 효과:	
19대 대통령선거	111
[표 5-1] 변수의 조작화 방식: 2014년 지방선거	134
[표 5-2] 변수의 조작화 방식: 2018년 지방선거	135
[표 5-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014년 지방선거	136
[표 5-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018년 지방선거	136
[표 5-5] 회귀계수의 해석: 2014년 지방선거	138
[표 5-6] 회귀계수의 해석: 2018년 지방선거	138
[표 5-7] 투표 선택에 따른 정부 신뢰 평균	139
[표 5-8] 피어슨 상관계수	140
[표 5-9] 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014년 지방선거	142
[표 5-10] 투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2018년 지방선거(기본모형)	145
[표 5-11] 스몰-샤오 검정(Small-Hsiao test)	146
[표 5-12] 왈드 검정(Wald test)	146
[표 5-13] 투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2018년 지방선거(상호작용 모형)	148

그림 목 차

[그림 2-1] 기존 연구의 분석틀: 집합적 수준	38
[그림 2-2] 본 논문의 분석틀: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	39
[그림 3-1] 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값: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	70
[그림 3-2] 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값: 그룹별	75
[그림 4-1]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8대 대통령선거	104
[그림 4-2]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9대 대통령선거	107
[그림 4-3]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8대 대통령선거	109
[그림 4-4]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9대 대통령선거	112
[그림 5-1] 투표 선택 예측확률: 2014년 지방선거	143
[그림 5-2] 투표 선택 예측확률: 2018년 지방선거	149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 상이한 정치적 관점, 이념, 사상이 공존하며 그러한 다양성은 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경쟁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정치적 경쟁이 양극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위수 유권자를 향한 경쟁을 말하던(Downs 1957) 미국 정치에서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지역주의에 호소할 뿐 정당 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이 거의 없었던 한국 정치에서도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현상에 주목한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아브라모비츠와 손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Abramowitz and Saunders 2008)를 위시하여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Hetherington 2001; Fiorina et al. 2010; Levendusky 2009a; Mason 2015; Pew Research Center 2014/06/11). 정치권이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유권자들 차원에서도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치의 이념적 재편과 대중의 양극화를 주장하는 아브라모비츠와 손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에 보다 조응하는 정당으로 지지를 변경하는 점진적 재편(secular realignment)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와 이념적 성향의 조응도(congruity)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로 인해 중도적 유권자가 사라지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진영으로 양분된 유권자 집단

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피오리나 외(Fiorina et al. 2010)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더 잘 반영하는 정당으로의 지지 변경을 통해 당파적으로 “분류(sorting)”되었을 뿐, 여전히 중도적 유권자들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며 대중 차원의 양극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중의 양극화에 대한 위의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결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집합적인 차원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이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이들은 정파적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앞에서 지적한 두 관점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도층이 사라지고 유권자 집단이 양극화 되었다거나, 혹은 현상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보일 뿐 중도층이 여전히 많다는 주장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논의된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주장은 대부분 집합적 수준(aggregate-level)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치적 맥락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에서의 양극화는 미국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진영의 변화는 양극화를 초래할 만큼 근본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제3당 혹은 제3의 후보가 등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인해 진보 진영이 분열함과 동시에 보수 진영은 집결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유승민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젊은 보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분화되는 동시에 진보 진영은 집결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각 정파에 대한 결집과 분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제3의 후보가 등장했던 당시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단기적 요인 외의 근본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념 진영의 분화와 대중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현상 사이에는 논리적인 간극이 있다.

둘째, 새로이 등장한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정당들이 보다 명확한 스탠스를 표명함으로써 재편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유권자 차원의 양극

화를 초래한다는 기존 이론은 기존의 쟁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대체(displacement)”될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념균열 및 세대균열 등의 새로운 갈등의 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쟁점들은 기존의 정파적 구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파적 구도 내에서 해석되고 갈등이 누적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즉,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중첩되면서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이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파적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Layman and Carsey 2002).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념균열은 기존의 정당 갈등 구도 내로 흡수되었고, 이후 등장하는 정치적 갈등 또한 기존 구도의 재편을 초래하기보다는 기존의 정파적 갈등의 프레임에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합리적 유권자에 대한 가정의 적실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권자의 이념과 정책 선호에 따른 정당 선호의 강화를 주장하는 기존 이론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Fiorina et al. 2010)은 이념과 정책 선호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을 띠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를 구조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었고(Converse 1964),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이념적 정향이 서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진보-보수의 이념적 개념에 대해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Erikson and Tedin 2015). 오히려, 유권자의 이념과 정책 선호는 가변적이며,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에 의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는 경험적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Bartels 2002; Carsey and Layman 2006; Feldman and Conover 1983; Layman and Carsey 2002). 따라서 이념에 따른 정당 선호의 강화로 인해 양자간의 조응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파적 유권자들이 갈등의 확장 내에서 정파적 태도의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당파적 편향성(partisan bias)이 양극화의 기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분포 및 비율에 대한 관찰, 즉 당파적 분류의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파적 유권자들의 편향적 태도를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 즉,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의 모습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확장”에 주목한다. 다양한 갈등이 누적되고 중첩되어 일원화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갈등의 확장의 상황에서, 당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한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된 태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상대 정파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와 같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집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individual-level) 차원에서부터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집합적 관점을 통해서만 양극화가 지닌 종단적(longitudinal) 속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 양극화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천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관점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간과하고 단지 양극화의 “현상”과 양극화의 “원인”을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집합적인 차원에서 정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이 진단된다면, 그러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어떠한 특성이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원인과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으로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 수준의 차원에서, “횡단적(cross-sectional)” 성격으로서의 양극화에 주목하여 이를 초래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설명(explanation)”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은 “합리적 유권자(rational voters)”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당파적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하거나, 혹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당파적으로 편

향된 해석을 하는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s; Achen and Bartels 2016; Lodge and Taber 2013)”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당파적 편향에 기반한 정치적 태도가 이념성향과 정당 선호의 조응도를 보다 높이는 양극화 혹은 분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당파적으로 편향된 태도들의 집합적인 결과로서 정파적 갈등의 심화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듯, 당파적 유권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갈등의 심화와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경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질과 선거의 기능이라는 규범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권의 공과(功過)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능을 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상벌을 가하는 기제로 개념화된다(Fiorina 1981; Key 1966). 그러나 당파적 관점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성과에 무관하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며, 정치적 성과에 대한 판단 자체에서도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보이게 되어 투표의 정치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당파층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처럼 무당파층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핵심이 아니라(Keith et al. 1992; 소순창·현근 2006; 동아일보 2011/12/03; 시사인 2011/09/29),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편향성과 그로 인한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당파적 편향이라고 하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러한 개인의 편향이 이념, 정책, 회고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유권자 차원의 정파적 대립과 양극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집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양극화의 현상을 “기술(description)”했을 뿐, 그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explanation)”은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합적 차원에서 여전히 중도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갈등이 양극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치적 행태가 야기하는 양극화에 주목하고자, 이들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그리고 이들이 정부에 대해 나타내는 신뢰와 그를 바탕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에서의 당파적 편향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양극화에 관한 논의가 주로 집합적·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음으로 인해 그를 초래하는 유권자 차원의 미시적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궁극적으로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된 태도가 그들의 정파성과 이념 및 정책 선호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그동안 “합리적 유권자” 및 이념과 정책 선호가 합리적 속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리화하는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이 집합적인 차원에서 유권자 차원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논증한다.

3장, 4장, 5장은 경험적 분석을 다룬다. 각각의 장은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이 정책 선호, 이념거리, 그리고 회고적 평가라는 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즉,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이 이들의 갈등을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에 대해 분석한다. 일관된 정책 선호를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했던, 따라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이들에게서 이러한 일관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던 일군의 기존 연구들과, 이념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이 당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또 다른 기존 연구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요컨대, 정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과 그로 인한 강한 정책적 선호는 그 집합적 결과물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살펴본다. 먼저, 당파적 유권자들의 양극화 혹은 이들이 나타내는 분류(sorting), 즉 당파적 태도와 이념적 태도의 높은 조응도(congruity)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말하는 두 요인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현상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유권자의 당파성과 이념이 가지는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서 이념이 정당 선호를 추동하는 것인지, 정당 선호가 이념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는 이념의 속성이 합리적인지 혹은 당파적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함께 수반한다. 요컨대, 정파적 유권자들은 이념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당파성과 이념의 높은 조응도는 합리적인 과정의 결과라기보다는 합리화하는 과정의 결과임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이념의 당파적 속성은 그 집합적 결과물로서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회고적 투표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양극화의 지표로서 상대 정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이 지적되고 있는데(Abramowitz and Webster 2016), 특히 현 정부의 이념 성향과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현 정부의 정파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의 내용에 관계없이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목되고 있는데(Hetherington and Rudolph 2015),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유권자들은 자신과 다른 정파적·이념적 속성을 가진 정부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높다면 이들은 선거에서 회고적 투표 선택을 추동하여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유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본래 제도적인 정부에 대한 신뢰로 개념화 되는 정부 신뢰가 당파적 편향의 속성을 나타낸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당파적 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신뢰로 인한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이 유권자의 당파성에 의해 차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파 간에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의 갈등이 상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회고적 투표가 가진 상벌(reward and punishment)의 기능이 퇴색되며,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즉, 정부 신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이러한 당파적 행태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주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경험적 분석의 결과 주요한 발견점을 정리한다. 이후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논의한 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는 유권자들의 당파성과 정책적·이념적 성향에서의 조응도가 증가하면서, 양 극단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정치에서 그 현상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최근 학계 및 언론계를 중심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Abramowitz and Saunders 2008; Hetherington 2001; Fiorina et al. 2010; Levendusky 2009a; Mason 2015; Pew Research Center 2014/06/11).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양극화가 실제로 발견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에서의 양극화인지, 그 수준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과거에 비해 양극화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는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양극화가 정치영역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양극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방이 필요한지 등의 학술적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Galston and Nivola 2006). 그러한 가운데,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양극화의 수준 및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양극화의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정치 엘리트 수준 혹은 대중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엘리트 차원에서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Fleisher and Bond 2001; Hetherington 2001; McCarty et al. 2006; 이내영 2011; 이재묵 2014), 유권자 수준에서도 이러한 양극화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먼저 대중 차원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유권자들이 이념적

으로 재편(ideological realignment)되었고 그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주장하는 아브라모비츠와 손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양당이 지니는 이념적 위치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위치가 점차 양극화되면서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간의 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보다 조응하는 정당으로 지지를 변경하는 점진적 재편(secular realignment)의 과정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양극화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이념적 성향의 조응도(congruity)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후속 연구에서, 아브라모비츠(Abramowitz 2010; Abramowitz 2013)는 미국 사회에는 중도적 유권자가 사라지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진영으로 양분된 유권자 집단만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는 달리, 피오리나 외(Fiorina et al. 2010)의 주장은 양극화는 엘리트 수준에서만 존재할 뿐이며, 선거에서 두 개의 선택지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선거의 결과는 양극화된 정당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의 분포 상에서 여전히 중도적인 이들의 비율이 높고 무당파 유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표면적으로는 대중 수준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처럼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대중 수준의 양극화는 정치권과 언론들에 의해 과장된 “신화(myth)”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과 후속 연구들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에서 극단의 이념적 위치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의회 양극화가 유권자에게 당파적 단서(partisan cue)를 제공하면서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더 잘 반영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보다 더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중도적인 유권자들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념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당 선호의 강화로 인해 양 정당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념적으로 균

질적인(ideologically homogeneous) 구성을 나타내게 되는 당파적 분류의 과정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Fiorina et al. 2008; Fiorina et al. 2010; Fiorina and Abrams 2008; Levendusky 2009a).

대중 수준의 양극화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정당이 보다 명확한 이념적 위치를 표명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당파적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재편을 통해 유권자의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 사이에 조응도가 높아지거나(Abramowitz and Saunders 1998),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파적 분류가 일어났음을 주장한다(Fiorina et al. 2010). 이들은 유권자들의 집합적인 정당일체감과 이념적 분포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중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대중 수준의 양극화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공히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엘리트 단서에 주목하고 있으며(Carmines and Stimson 1989; Hetherington 2001; Zaller 1992), 정당 지지와 이념 성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유권자의 속성에서부터가 아닌, 이들이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대중의 양극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새로운 정치적 쟁점의 등장하면서 유권자가 이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조응하는 정당 선호를 가지게 된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로 귀결되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요컨대, 이들의 관점은 집합적 차원에서 중도적 유권자들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에 따라 모든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으로 귀착되고 있지만, 당파적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갤스턴과 니볼라(Galston and Nivola 2006)는 양극화와 당파적 분류는 이론적으로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일지라도, 두 현상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점차 어려워졌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국이 유권자 차원에서 재편 혹은 양극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연구들 또한 이들의 이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내영(2011)의 연구는 유권자들의 집합적인 분포 상에서 여전히 중도적 유권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중 차원에서의 양극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도 유권자가 줄어들고 보수 및 진보적 성향을 띤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시각에서 개념화 된 양극화는 결국 중도 유권자들이 이념의 분포 상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에 의해 반박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수주의자들의 비율과 진보주의자들의 비율이 늘었다는 근거는 미약하며, 따라서 대중 차원의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보다 격화되어 양극화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강원택 2019; 김성연 2015; 임현진 2010; 정동준 2018; 문화일보 2018/11/01). 2000년 이전만 해도 지역주의가 거의 유일한, 주요한 정치적 갈등 구도로 작용하였었는데, 이 시기에는 정당 간의 차별성이 없이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일원적인 대립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주의 갈등은 단순히 지역적 연고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일 뿐 정책적 내용에서의 차이가 갈등의 구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비판을 받았다(강원택 2018). 이 시기의 한국의 정당 정치에 있어, 파넬비앙코(Panbianco 1988)가 말하는 정당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집단적 유인(collective incentive)은 지역이었다(이정복 2011).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념이 주요한 정치적 균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유의미한 정치적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주장한 다수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강원택 2003; 박찬욱 2009; 조성대 2008; 최준영·조진만 2005). 즉, 이러한 이념 갈등이 정치권의 주요한 갈등의 축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정파적 대립이 가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균열의 등장은 정치적 경쟁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정책 의제가 다양화되고 정치세력간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찬욱 2009). 그러나 점차 정파간의 이념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는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가 제기될 만

큰 정당들은 당파적 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의 보다 명확해진 당파적 단서(partisan cue)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Carmines and Stimson 1989; Nie et al. 1976; Shafer and Claggett 1995; Sniderman et al. 1991; Zaller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념 균열의 가시화,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격화를 통해 유권자들 또한 점차 그들의 당파성과 이념적, 정책적 선호에 있어 일관된 태도를 강화하게 되며, 대중 차원에서도 정파적 대립이 보다 명확하게 관찰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또한 무당파층 유권자와 중도 유권자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양극화 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들은 정파적 유권자들 사이의 정치적 견해와 태도가 서로 극단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의 갈등이 보다 격화되어 서로간의 반감이 증대되고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양극화로서 개념화하고 있다(Abramowitz and Webster 2016; 길정아·하상웅 2019; 정동준 2018). 즉, 특히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당 선호에 조응하는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점차 명확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극화의 과정을 재편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Abramowitz and Saunders 1998)과 분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Fiorina et al. 2010)이 종국적으로 당파적 유권자들이 이념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도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당파성과 이념적 태도의 조응성 증가와 그로 인한 양극화가 발현되는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념성향에 따른 정당 지지의 변화, 즉 유권자 지지 연합의 변화라는 집합적인 관점에서 양극화를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유권자 진영의 변화는 대중의 양극화를 그

결과물로 상정하는 재편의 관점에서 설명되기 어렵다.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남부의 재편은 1930년대 형성된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를 종식시키고 공화당 우위의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지지 구도의 재편 외에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지지 연합의 수적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한국에서도 또한 단기적으로 지지 연합의 수적 변화를 겪고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정파의 정당이 승리한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파의 유권자 집단이 결집 및 분열의 모습을 보인 것은 재편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변화하였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제3의 후보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오현주·길정아(2013)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유로 언급되었던 보수의 집결과 안철수 후보로 인한 진보의 분열이라는 현상을 각 이념 집단이 나타내는 정치적 태도의 강도 차이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편, 강원택·성예진(2018)의 연구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젊은 보수 유권자들을 지적하며 보수의 분화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각 정당의 지지자가 증감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재편이라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즉, 양당제를 기반으로 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에 맞는 정당을 찾아가게 된다는 개념의 이념적 재편이나 당파적 분류의 관점에서는 선거마다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대중 차원의 양극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선거의 시기마다 각 이념 진영의 유권자들이 왜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해당 정파에 대한 강한 결집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제3의 후보가 등장했던 당시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단기적 요인 외의 근본적인 설명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을 탈당한 세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바른미래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복귀할 것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시사위크 2019/03/21), 현재의 정당 구도는 근본적인 재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중의 이념적 재

편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양당제 내에서의 변화를 그 핵심으로 하는 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각 선거에서 제3의 후보로 인해 각 이념 진영에서 분화를 겪은 사실과 대중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현상 사이에는 논리적인 간극이 있다.

둘째, 양극화를 다루고 있는 이론들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과 정당 선호에서의 조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재편되거나 혹은 분류되는 것은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정당들이 보다 명확한 스탠스를 표명할 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1932년 형성된 민주당 우위의 뉴딜 정당체계는 주로 경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점차 사회적 문제들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였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본래 뉴딜연합을 구성하던 핵심 지지층인 남부의 백인과 백인 노동자 계층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신들의 보수적 이념성향에 맞는 공화당으로 지지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한편, 한국에서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균열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이념균열 및 세대균열 등 새로운 갈등의 요인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강원택 2003; 박찬욱 2009; 박찬욱 외 2008; 정진민 2010; 조성대 2004; 조성대 2008; 최준영·조진만 2005). 이러한 다양한 균열의 등장은 정치적 경쟁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정책 의제가 다양화되고 정치세력간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찬욱 2009). 이렇듯, 다수의 연구들은 지역주의라는 일원적인 정치 균열을 넘어서서 새로운 균열의 등장을 지적하며, 재편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이정진 2007; 조성대 2008).

그러나 새로운 쟁점들은 기존의 정파적 구도를 완전히 대체(displacement; Schattschneider 1960; Sundquist 1983)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파적 구도 내에서 해석되고 경쟁을 이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중첩되어,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을 통해 정파적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ayman and Carsey 2002).

구체적으로, 갈등의 확장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복합적인 갈등의 구조를 형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갈등을 대체하여 이러한 새로운 쟁점이 지배적인 갈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기존의 갈등과 더해지며 이분법적인 갈등의 구조가 오히려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 또한 그러하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주의의 타파를 주장하는 노무현 후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이념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구도는 이후 열린우리당의 실패로 인해 기존의 정당체계를 완전히 재편하지 못하였다(강원택 2011a). 오히려, 이후 이념 균열이 기존 정당의 갈등구도 내로 흡수되면서, 1990년의 3당 합당 이래로 형성된 양당제적 속성을 가진 기존의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갈등이 축적된 모습으로 나타났다(강원택 2019). 문우진(Moon 2005), 백준기 외(2003), 그리고 조성대(2008)의 연구는 지역주의적 대립에 이념적 대립이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보였는데, 특히 조성대(2008)는 정책 이슈 중 유권자의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어 온 대북 및 안보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선호는 지역주의적 균열과 평행하게 나타난다는 것, 즉 대북 및 안보를 중심으로 한 균열과 지역주의 균열은 동일한 차원을 공유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당일체감의 안정성과 이념 및 정책 선호 등의 정치적 태도의 가변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화되어 온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장기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애착감(attachment)으로서, 그 자체는 안정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과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로 상정된다(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Miller and Shanks 1996).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치적 쟁점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주의적 시각의 연구들과(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Zaller 1992), 정치적 쟁점에 대한 평가들의 총합(running tally)으로서 정당일체

감을 선택하게 된다는 수정주의적 시각의 연구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Fiorina 1981; Franklin and Jackson 1983),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 그리고 카시와 레이먼(Carsey and Layman 2006)의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당파심에 일치하도록 정책 선호와 이념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또한 정당일체감이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박원호·송정민 2012; 박원호·신화용 2014; 허석재 2014).¹⁾ 한편, 유권자들이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를 구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Converse 1964), 단지 정치적인 지식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세련화 된 유권자들만이 이념적 태도에 있어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Converse 1964; Jacoby 1988; Jacoby 1991; Jacoby 1995). 에릭슨과 테딘(Erikson and Tedin 2015)의 연구는 정당에 대한 애착심과 이념적 정향이 서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며, 좌-우의 개념에 대해 차별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에릭슨 외(Erikson et al. 2002)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신념이 특정한 이념적 구조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또한, 유권자들의 이념적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고(류재성 2012), 이념성향이 정치적 태도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한정훈 2016). 이념이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서도 가변적이며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자신의 이념 거리를 보다 가깝게

1) 한국정치에서는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정당일체감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정당일체감이 안정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체계는 큰 틀에서 민주당 계열,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거쳐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당 계열로 나누어지는 양당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되어 왔다(강원택 2018; 강원택 2019).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정당일체감이 상당히 안정성을 띠는다는 점을 주장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다(박원호·신화용 2014). 이렇듯, 본 논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 선호, 이념 거리, 그리고 정부 신뢰와 같은 정치적 태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당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속성을 띠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식하게 되는 투사효과(projection effect) 및 설득효과(persuasion effect)가 나타난다는 것이 검증되기도 하였다(강신구 2013; 이내영·허석재 2010). 또한, 유권자들의 지지 연합에 있어서도 각 이념 진영들이 집결하고 분열하는 모습이 각 선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강원택·성예진 2018; 오현주·길정아 2013).

양극화를 집합적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변화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론들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는 등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과 정책적 입장에 보다 조용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서 이념 및 정책적 입장과 정당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다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Fiorina et al. 2010). 이는 이념의 안정성과 합리적 속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피오리나(Fiorina 1981)는 정당일체감을 주어지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들의 총합(running tally)으로 개념화하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유권자들의 이념, 정치적 태도, 그리고 그 결과물인 정당 선호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치적 정향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주의적 맥락에서 이념과 정당 선호의 조용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피오리나 외(Fiorina et al. 2010)의 이론은 유권자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정당일체감을 선택하게 되는 분류(sorting)인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념과 정책 선호가 가변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며 당파적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경험적 근거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양극화를 집합적·종단적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적인 갈등 또한 정파적 대립 내에서 해석되고 갈등이 누적되어 일원화된 경쟁의 구도를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당파성과 이념적 정향의 조용도가 높아지고 보다 명확하게 분류된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하여, 결국 정당 선호의 상대적 안정성과 이념 혹은 정책 선호 등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가변성과 같은 유권자들의 특성에서부터 정파적 갈등이 격화되는 현

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적이고 집합적인 관점(aggregate-level), 그리고 시간에 따른 양극화 수준의 변화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의 격화되는 정파간 갈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집합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지지 분포의 변화 혹은 분류가 대중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양극화의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explanation)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양극화를 집합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은 양극화의 “종단적(longitudinal)” 성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로 그러한 양극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화되어 왔는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현상에 대한 관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극화에 대한 집합적·종단적 연구들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는 등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그 속성상 일반화할 수 있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양극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결과론적인 해석에 그치게 되기 쉬우며, 본질적인 설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정파적 유권자들이 양극화된 갈등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유권자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간과된다. 현재 강한 정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의 갈등이 진단된다면, 이들의 어떠한 특성이 갈등의 심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은 정치적 맥락과 환경 자체가 아닌, 그러한 환경 하에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행위자인 유권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가 하는 사실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individual-level)에서, “횡단적(cross-sectional)” 성격으로서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유권자의 태도의 기저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한국 정치에서 “갈등의 확장”과 유권자의 양극화

이에 본 논문은 갈등의 확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내에서, 유권자들의 당파적 태도의 강화를 초래하는 당파적 편향성이 양극화의 기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분포 및 비율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의 당파적 성향과 정치적 태도의 조응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이들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대중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를 밝히고자 한다. 즉,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인식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갈등의 요소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경쟁 구도를 명확하게 변경시켰다기보다는 이러한 갈등들이 기존 정당의 갈등 구도 내로 흡수되면서, 1990년의 3당 합당 이래로 형성된 양당제적 속성을 가진 기존의 정당체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갈등이 축적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정파적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강원택 2019). 예컨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제기된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객관적으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이슈가 정파적인 틀 내에서 해석되고 투표 선택에 대해 작용하였다(송진미·박원호 2014; 장승진 2013). 이러한 경제민주화 이슈는 본래 좌파적 이슈로 상정되어 왔는데,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에서 이를 선점함에 따라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 이슈에 대해 찬성할수록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본래 재난의 발생과 그 책임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인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이념적 혹은 당파적 대립의 핵심을 형성하여 격렬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었고, 정당뿐 아니라 유권자 사이에서도 당파적인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강원택 20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을 중첩된 정치적 갈등구도를

의미하는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 하에서 당파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정치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갈등이 대체되고 재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갈등과 더해지는 갈등의 확장이 일어나는 가운데, 특히 당파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의 일관성이 정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갈등의 대체(conflict displacement) 혹은 이념적 재편(ideological realignment)은 기존의 쟁점과 새로운 쟁점 사이의 긴장 관계를 상징한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들의 태도가 쟁점의 영역마다 서로 구분될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갈등의 대체와 이념적 재편의 근거는 희박하며, 정치 엘리트들은 다양한 이슈 영역을 포괄하여 일원적인 이념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다. 강한 정치적 정향을 지니고 있는 유권자들은 정치 엘리트의 단서(cue)를 보다 잘 받아들인다는 점이 밝혀져 온 바(Zaller 1992), 이렇게 양극화된 정당간의 갈등에 의해 특히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들은 보다 강하고 일관된 이념적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일관된 정치적 태도는 인식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나아가 집합적 차원에서 정파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요컨대, 이들의 연구는 집합적 수준(aggregate-level)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에서의 분석을 통해 갈등의 확장과 유권자의 양극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정파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정파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이들이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이념, 각 정책적 쟁점에 대한 선호,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 및 상대 정당에 대한 평가 등에서 일원화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서 유권자들의 당파적 태도 및 인식의 양극화의 심화, 나아가 이들 사이의 당파적 대립이 양극화 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한국의 정당 체계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적 경쟁의 구조를 띤 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후 이념이나 세대와 같은 다원적인 경쟁의 요소들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두 개의 주요 정당에 의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강원택 2018; 강원택 2019). 이념 및 세대 등 다양한 균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당 체계의 재편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이정진 2007), 재편의 가능성을 타진할 뿐 정당 체계의 변동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정당일체감의 선택이나, 투표선택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념 균열이 지역 균열의 지배적 위세를 넘어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구축된 패널 데이터 등 적절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유권자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을 통한 재편의 직접적인 검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이렇게 일원화된 경쟁의 구도가 유지되는 정치적 환경에서, 당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한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된 태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인식의 양극화가 강하게 표출되는 과정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균열들의 등장으로 인해 다원적인 정치적 경쟁이 구조화된다면, 다양한 정책 의제가 제시되고 당파간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박찬욱 2009). 그러나 새로운 정치적 갈등, 예컨대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등장한 이념 균열 및 세대 균열과 같은 새로운 균열이 기존의 당파적 갈등에 누적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원화된 경쟁 구도가 오히려 강화된 “갈등의 확장”의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가운데,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다양해진 정치적 쟁점마다 자신의 당파적 선호에 조응하는 태도를 표출하는 것이 유권자 차원의 대립과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집합적인 차원에서 유권자의 이념적 분포를 관찰하는 경우, 중도적 유권자와 무당파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이유로 인해 대중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갈등의 심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집합적 수준의 연구들은 유권자의 지지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그동안 이념 혹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태도가

주로 거시적인 균열 이론의 프레임에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Lipset and Rokkan 1967; Rae and Taylor 1970; 강원택 2011b). 그러나 유권자 수준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격화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기저에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이 놓여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찰을 요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유권자 차원에서, 이들의 어떠한 특성이 양극화된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Levendusky 2009b). 당파적 유권자들의 인식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한 소수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성우(2011)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배열(partisan sorting)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정동준(2018) 또한 유권자의 당파성과 이념 및 쟁점 입장의 배열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정농단 사태 이전인 2015년에 비해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인(descriptive) 관점에서 유권자의 당파성과 이념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왔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 무엇이 이러한 일관성을 강화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정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이념적 속성의 강화를 지적인 아브라모비츠와 손더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그리고 피오리나 외(Fiorina et al. 2010)의 연구 또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통해 그 양상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엘리트가 제공하는 당파적 단서(partisan cue)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 지지와 이념적 성향 간에 조응도가 높아지도록 하였다는 이들의 관점은 유권자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당파적 단서의 영향을 받고 정파적 태도를 강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속성에서부터 그들의 태도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논문이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특히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당파적, 이념적으로 일관된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는 원인에 대한 것이다. 김장수(2005), 김성연(2015), 그리고 길정아·하상웅(2019)의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이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당파적 편향이 인식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양극화로 이르는 기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들은 미시적 접근을 통해 유권자들이 가진 정치적 태도의 집합적인 결과물로서의 양극화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김장수(2005)는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정태적 차원에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이들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치적 의견에서 분열을 보이는 인식의 양극화를 보여주었다. 김성연(2015)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인식이 양극화 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당파적 편향이 그 원인이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길정아·하상웅(2019)은 여야간 갈등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유권자들이 서로 상대 정당에게 미룸으로써 당파적 책임귀속(partisan blame attribution)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유권자들의 당파적인 행태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미시적인 과정임을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양극화의 기저에는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념적 태도와 인식에 있어 유권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당 선호에 근거하여 정치적 태도를 편향되게 형성하는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의 행태와 인식의 양극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정당일체감의 안정성과 그 영향력(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그리고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정치적 정향(predisposition)으로 인해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들을 고려할 때(Achen and Bartels 2016; Lodge and Taber 2013),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당파성과 이념적 태도, 그리고 정책 선호 등 정치적 태도에서의 조응도가 높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합리화 과정과 당파적 편향의 태도를 포착하는 데 가장 적실한 개념은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 3 절 정당 태도와 당파적 편향

미시간 학파의 연구자들은 *The American Voter*(Campbell et al. 1960)에서부터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화되어 온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장기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애착감(attachment)으로서, 그 자체는 안정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과 태도의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로 상정된다(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Miller and Shanks 1996). 정당일체감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 및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담보할 수 있으며(Campbell et al. 1954; Campbell et al. 1960), 이러한 정당 정치의 제도화는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유지시키며 개선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Mainwaring 1999).

한편, 정당일체감은 특정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소속감의 표현으로서, 범주간에 상호 배타적일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개념 하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는 공화당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른 정당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에 대한 태도는 특정한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반감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당에 대한 태도로서 정당 호감도의 개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마조토와 피어슨(Maggiotto and Piereson 1977)이 미국 유권자의 지지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유권자가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적대심을 정당 태도로 개념화한 2차원 모델이나, 와이즈버그(Weisberg 1980)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기존의 미시간 모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차원적인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거나 혹은 상호 배타적인 범주 내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공화당 지지, 민주당 지지, 그리고 무당파 성향이 각각 다른 차원을 구성한다고 제시한 3차원 모델은 상술한 정당일체감의 이론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호감도 개념의 유용성은 최근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됨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주장한 아이엔가 외(Iyengar et al. 2012), 그리고 아브라모비츠와 웹스터(Abramowitz and Webster 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정권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닌 한국의 지방선거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일체감에 대신하여 정당 호감도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 태도임이 경험적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오현주 외 2014).

이렇듯,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정당에 대한 태도는 투표 선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어 왔다. 정당 태도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더하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형성에 대해 유권자가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 태도가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정당 태도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정당일체감 혹은 정당 호감도에 근거한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논문이 주목하는 당파적 편향의 태도로 개념화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을 포함한 정당 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ing; Campbell et al. 1960; Markus 1982; Zaller 1992)로 작용한다. 에반스와 앤더슨(Evans and Andersen 2006), 그리고 맥도널드와 히스(Macdonald and Heath 1997)는 경제적 인식보다 정당일체감이 선행하는 요인임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유권자의 정당 선호는 정치적 태도 및 선택에 있어 당파적 편향을 초래하게 된다. 정당을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다수의 연구에서 그 경험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젤러(Zaller 1992)는 정치 엘리트가 대중에게 던지는 새로운 이슈의 정보에 대해 유권자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그 정보에 내재된 당파적 성향을 판단의 근거

로 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태도가 정당의 입장으로 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바텔스(Bartels 2000)와 헤더링튼(Hetherington 2001)은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다른 정치적 태도에 대해 정당일체감이 선행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바텔스(Bartels 2002)의 연구는 유권자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각 정보들을 독립적인 것으로 인식(Bayesian update; Bullock 2009)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편향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치적 정향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 김성연(2015)은 2012년 대통령선거 시기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태도와 인식이 그들의 정당 지지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당파적 입장이 유지 혹은 강화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정동준(2018)은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당파적 성향과 이념, 그리고 이슈에 대한 태도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점차 높아졌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속성을 띠며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온 바, 유권자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의 하나로 개념화되었다(Green et al. 2002; Greene 1999; Greene 2004). 이렇게 정당일체감을 유권자들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내집단(in-group)으로 상정하는 반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을 외집단(out-group)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듯,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서는 지지하는 정당을 기준으로 한 집단중심 편향(group-serving bias; Miller and Ross 1975; Taylor and Doria 1981)이 나타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표출하거나(Iyengar et al. 2012), 정치적 책임 소재의 귀속에 있어 당파적 편향을 띠게 된다. 이에 더하여, 유권자의 이념이나 정책 선호 등이 그들의 정당 선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Feldman and Conover 1983; Martinez 1988).

먼저, 유권자가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당파적 편향이 개입된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Bellucci 2014; Bisgaard

2015; Rudolph 2003; Tilley and Hobolt 2011). 심지어 자연재해 및 국가적 재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당파적으로 귀속시키는 행태를 보인다(Achen and Bartels 2016; Healy et al. 2014; Malhotra 2008; Malhotra and Kuo 2009). 한편 나와라(Nawara 2015)의 연구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인식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국 자료를 분석한 이 연구는 거시 경제적 상황과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 좋아졌다고 인식할수록, 이에 대한 공(功)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점차 상승했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이 확률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경제 상황과 전황이 나빠졌다고 인식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묻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는 이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선거연구의 경우, 오현주 외(2014)는 지방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행태가 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아 유권자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두 개의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계없이 그들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를 선택한 반면, 두 정당에 대한 선호가 무차별한 유권자들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회고적 투표행태를 보였다. 또한, 길정아·하상웅(2019)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여야간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 정당에게 미룸으로써 여야간 갈등에 대한 인식과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반면, 여야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만을 강화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맥락에서 형성된 후보들에 대한 이미지가 개별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후보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짐으로써 유권자들의 인식에 당파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며(Goren 2002), 유

권자의 평가가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의해 후보의 평가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다(Marsh and Tilley 2010). 정치인의 부패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또한 그 정치인이 속한 정당이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부패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였다(Anduiza et al. 2013).

한편,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념에 기반하여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공간모형(spatial model)으로 이론화되었는데, 이는 유권자가 인식하는 자신과 정당 및 후보자 사이의 이념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권자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유권자가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Downs 1957; Enelow and Hinich 1984; Hinich and Munger 1994). 이렇게 이념적 근접성에 기반한 투표선택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공간모형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 및 각 정당과 후보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다수의 연구들은 이러한 이념적 근접성의 인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지닌 당파적 성향에 의해 유권자가 정당 혹은 후보자와의 이념 거리를 편향되게 인식할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Achen and Bartels 2016; Dinas et al. 2016; Feldman and Conover 1983; Jessee 2010; Markus and Converse 1979; Martinez 1988). 제세(Jessee 2010)와 시마스(Simas 2013)의 연구는 투표선택에 있어서도 정당 지지자들이 당파적으로 편향된 공간투표 행태(partisan biased spatial voting)를 나타내는 것과, 무당파 유권자들의 편향되지 않은 공간투표 행태(unbiased spatial voting)를 구분하여 보여주었다. 에이큰과 바텔스(Achen and Bartels 2016)의 연구는 이슈의 위치에 따라 정당 지지를 바꾸는 것보다, 정당일체감에 따라 유권자가 자신의 이슈 위치를 합리화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당에 대한 선호가 선행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의 경우 또한, 강신구(2013), 이내영·허석재(2010), 장기영·박지영

(2018)은 자신이 지지하거나 혹은 정서적인 호감을 가진 정당 및 후보에 대하여 자신과의 이념적 거리를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당파적 유권자들의 합리화하는 태도를 밝혔다.

정리하면,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혹은 정당 호감도로서 이론화되어 온 정당 선호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속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던 정책 선호 및 이념거리 인식 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정당 선호와 정치적 태도 사이의 조응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편향성을 보임으로써, 이들은 “합리적 유권자(rational voters)”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당파적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하거나, 혹은 주어진 정보에 대해 편향된 해석을 하는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s)”이다(Achen and Bartels 2016; Lodge and Taber 2013). 유권자들의 이러한 합리화 과정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닌 정치적 경향성(prior political predispositions)에 근거하여 정보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동기화된 사고(motivated reasoning; Kunda 1990)로 인해 나타난다. 동기화된 사고는 사람들이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성과 조응하는 의견을 자신의 경향성과 상충하는 의견보다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전 태도 효과(prior attitudes effect),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향성과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반면, 자신의 경향성과 조응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확증 편향(disconfirmation bias),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향성과 조응하는 정보만을 찾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으로 대별될 수 있다(하상웅 2016). 정치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기화된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당파적 경향성을 보다 강화하게 되므로 이는 인식과 태도의 양극화로 귀결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당파적 편향은 유권자의 정당 선호와 좌-우 이념성향 간의 상관관계를 점차 강화하거나(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혹은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유권자가 공화

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가 보다 명확한 패턴을 나타내도록 만듦으로써(Fiorina et al. 2010; Levendusky 2009a) 정파간의 대립이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와 이념 성향 등의 정치적 태도에서의 조응성이 증가하는 양극화 혹은 당파적 분류에 대한 기존 이론들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일치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를 가지게 되는 패턴이 보다 명확해져 양 정당이 이념적으로 균질적인(ideologically homogeneous)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Fiorina et al. 2010).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은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등의 정치적 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을 가진다는 것, 즉 “합리적 유권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편향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정치적 인식의 과정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파성과 정치적 태도의 조응도 증가, 즉 양극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찰을 요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양극화가 당파적 편향, 즉 자신의 당파적 선호에 근거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제 4 절 당파적 편향, 양극화,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이렇듯, 본 논문은 양극화에 대한 이해는 유권자들이 가진 이러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성은 경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및 그 기능과 같은 규범적 차원에서도 또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60)는 *The Semisovereign People*에서 민주주의를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로 상정한다. 사회 내에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필연적이며 그러한 갈등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중 어떤 갈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로 전환된다. 따라서 복합적인 갈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이익을 집약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하는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기구가 된다. 요컨대, 대의민주주의는 정당들은 제도적으로 상호간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그리고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를 수용하고 (한국의 경우) 5년간의 정권을 겪으면서 정치권의 공과(功過)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선거를 통해 묻게 될 것을 그 요체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따라서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를 기준으로 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선택(retrospective voting)은 현직자의 공과에 대한 상벌(reward and punishment)의 기능을 하게 되며,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로 하여금 유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반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기능하게 된다(Fearon 1999; Ferejohn 1986; Fiorina 1981; Key 1966; Kinder and Kiewiet 1979).

그런데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 등 유권자의 정당 태도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ing; Campbell et al. 1960; Zaller 1992)로 작용한다. 또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태도 혹은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성과 인식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Bartels 2002). 이러한 경우, 유권자는 자신의 정당 선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현 정부 여당의 성과를 왜곡하여 인식하게 되거나 혹은 현 정부 여당의 공과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선택을 하게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거가 지니는 정치권에 대한 상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정당일체감 이론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보 처리 과정이 합리적이고 정치적 정보가 보다 객관적으로 주어진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공과에 대한 판단에 기반하여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지지 및 지지의 철회를 하는 회고적 투표를 함으로써 유의미한 상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길정아·하상웅 2019). 이러한 경우,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파적 관점에서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즉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은 현직 정부 여당의 정치적 성과와 무관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선호를 표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회고적 투표가 가진 정치적 기능이 약화되며,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Achen and Bartels 2016).

이렇듯, 당파적 유권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당파적으로 귀속시키는 행태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정치적 상황에 대해 서로 상대 정당의 탓을 하거나(길정아·하상웅 2019), 혹은 여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보다 크게 인식하며 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하상웅 2016). 책임의 소재가 정부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인식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은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정파적 입장에 따라 편향되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선거의 결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한 경우에

정파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표하기도 한다(Abramowitz and Webster 2016; 하상웅 2016). 이러한 유권자의 태도는 당파적 편향에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합적인 차원에서 대중의 양극화로 귀결되어 서로간의 반목을 심화시키며 타협의 여지를 줄어들게 만든다..

한편, 무당파층의 특성과 정치적 태도, 그리고 정당 정치에 있어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은 그동안 무당파층의 증가가 정당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지표라는 점을 지적해왔다(Keith et al. 1992; 소순창·현근 2006; 동아일보 2011/12/03; 시사인 2011/09/29). 이들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유권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기성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당파층 유권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 지지의 유동성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것이다(Keith et al. 1992; 박원호·송정민 2012). 이와 같은 우려는 무당파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정치에 참여도 잘 하지 않는 이들인 것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이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무당파 유권자들 중의 상당수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apolitical) 유권자가 아닌, 인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당파 유권자(cognitive apartisan)라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Dalton 1984; Dalton 2007; Dalton 2012; Dalton 2013; 강원택 2012; 박원호 2013; 박원호·송정민 2012; 정진민·길정아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당파층의 증가가 정치적 불안정이나 정당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달튼(Dalton 1984; Dalton 2013)의 관점은 보다 적실성이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무당파층의 증가는 기존 정당의 성패와는 별도로, 대중들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정치적 정보 환경의 발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또한, 박원호·송정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일단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으며, 또한 무당파층은 선거 국면에서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결정적 이슈나 기타 정치적 요인이 있을 경우 당파성을 띤 유권자 집단에 못지않게 정당 정치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무당파층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인지적 동원의 과정을 겪는, 능동적 유권자임을 의미한다. 정당 정치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무당파층이 가지는 함의는 이들이 선거에 불참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인데, 무당파 유권자 중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무당파층의 존재가 정당 정치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성급한 해석을 경계하게 한다.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된 저작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위기의 주요한 징후로 지적하고 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결국, 무당파층이 아니라 오히려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편향성과 그로 인한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저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Achen and Bartel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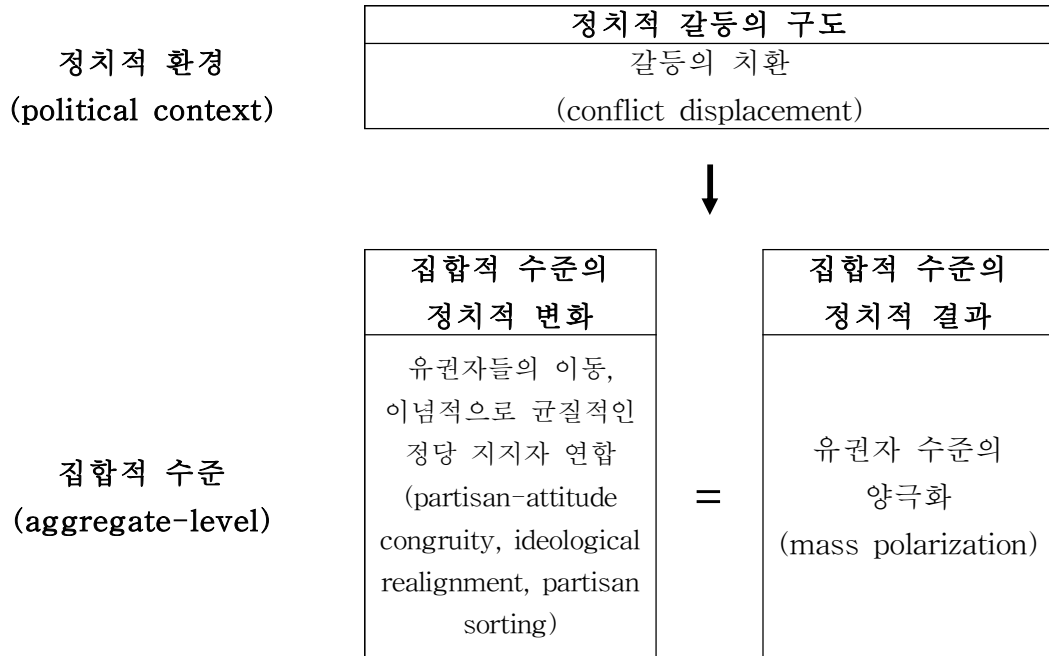
요컨대, 정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된 태도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최근 무당파층과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증가하여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Abramowitz and Webster 2016; Dalton 2007), 유권자 사이의 양극화와 정치적 갈등이 보다 양극화된 형태로 표출되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다.

제 5 절 논문의 분석틀과 주요 연구문제

이렇듯, 본 논문은 당파적 대립이 격화되고 보다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 당파적 유권자들의 특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적 행태,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 수준에서 발현되는 행태가 집합적인 수준에서 양극화로 귀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나타낸 [그림2-1], 그리고 이에 비해 본 논문이 구성한 분석틀을 나타낸 [그림2-2]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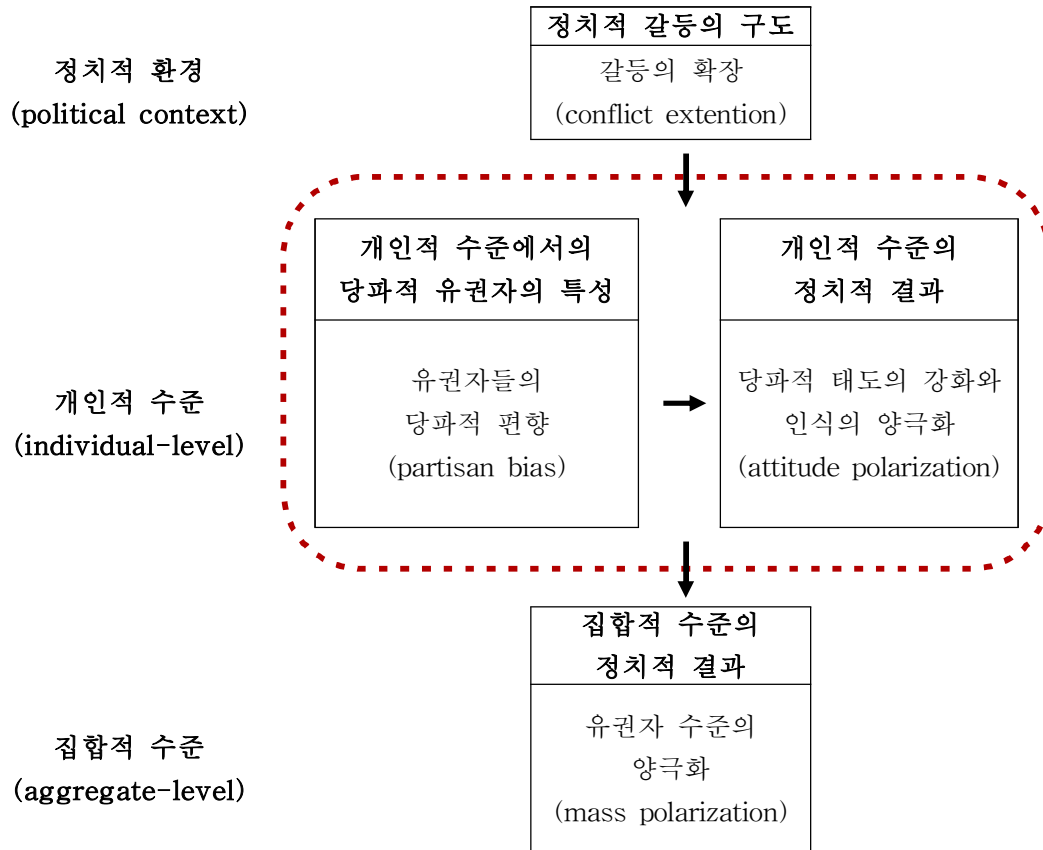
[그림2-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 차원의 양극화를 바라보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집합적 수준에서 양극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새로운 갈등적 쟁점이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보다 조용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동함으로써 이념적으로 보다 균질적인 정당 지지자 연합을 이루었으며, 당파적 성향과 이념적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이 “이념적 재편(ideological realignment)” 혹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로 귀결되어 대중의 양극화를 초래한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기존의 정파적 구도 내에서 해석되어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집합적 수준의 관점에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유권자들의 행태에 대한 메커니즘의 설명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집합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중의 양극화의 원인이 아닌 양극화의 현상에 대한 기술이다. 궁극적으로, 집합적 관점에서의 관찰을 통해서는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그림2-1] 기존 연구의 분석틀: 집합적 수준



다음의 [그림2-2]는 본 논문이 대중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하는 분석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갈등의 확장을 거쳐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정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은 당파성, 이념적 성향, 정책 선호, 정부에 대한 신뢰 등에서 높은 조응성을 보이며 양극화된 정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당파적 태도에 기반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 즉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그 집합적 결과물로서 대중 사이에서 정파적 갈등의 격화와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2-2] 본 논문의 분석틀: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에 대해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분석틀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유권자 차원에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 정치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무당파층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켜 양극화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요컨대, 본 논문은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인식의 양극화가 대중 차원에서 타나나는 정치적 양극화의 본질임을 지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당파적 편향과 그로 인한 인식과 태도의 양극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적 분석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유권자의 정책 선호, 이념 거리, 회고적 투표 선택 등의 요인들은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 기대되었다. 즉,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당파적 사고에 기반해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각 요인들은 당파적 편향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 요인들에 있어 당파적 선호와의 조응성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양극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살펴본다. 본래 유권자의 이념 성향에 일치하도록, 각 정책 영역을 가로질러 일관된 정책 선호를 가지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도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관된 정책 선호가 반드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정책 영역별로 독립적인 차원을 형성할 수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당파적 성향에 기반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념과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일관되고 강한 태도는 합리적인 것이 아닌,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정파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첨예한 찬반의 대립이 심화되고 이것이 양극화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 거리를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살펴본다. 이념 근접성과 관련된 이론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자신과 모든 정당 및 후보들의 이념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에 따라 이념 거리의 인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념 거리 인식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당파성이 개입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념 거리 인식과 정당 선호가 상호적인(reciprocal) 관계임을 고려할 때, 양자 간의 방향성과 상대적 영

향력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념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하는 것으로 인해 정당 및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당 및 후보와 보다 가까운 이념적 거리를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이는 유권자들이 지닌 당파적 편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편향성이 유권자들 사이의 이념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회고적 투표 선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의 관계를 논한다. 본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부로서의 제도가 민주적이고 성공적으로 작동될 것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직 정부 여당임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는 그들의 당파성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정부 신뢰가 당파적 사고에 기반하여 형성될 때,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파가 집권했을 때 정부의 성과에 관계없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조건적인 반감을 보일 우려가 있다. 이렇듯,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내는 정부 신뢰와, 정부와 다른 정파에 속한 유권자들이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해 보이는 반감의 대립이 정파간의 갈등과 양극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 신뢰가 현직 정부 여당을 그 대상으로 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다면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신뢰가 정부의 성과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총체로서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 신뢰는 유권자들에게 회고적 투표 행태를 추동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가 유권자의 당파성에 의해 편향되게 형성되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정부 신뢰가 당파적 고려 하에 있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에 주목하고, 정부 신뢰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이 유권자들 사이의 대립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 3 장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제 1 절 정책 선호,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대중의 양극화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특히 정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태도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대표적으로,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는 정당들이 점차 각 이슈 영역에서 일관성이 증대(growing consistency)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에 정파적인 유권자들은 각 이슈에 있어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스탠스에 일치하는 정책적 선호를 보다 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지니면서 이들이 이슈 스탠스에서 나타나는 정당간의 차이를 보다 잘 인지하는 경우, 이들은 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일차원적인 좌-우의 이념 차원과 보다 조용시킨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호의 일관성에서 정파적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이 대중 차원에서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파적 유권자들의 강하고 일관된 정책 선호가 양극화의 지표로서 이해된다.

한편, 유권자의 이념을 정의하는 연구들은 이념을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개념화되는 정치적 정향성(political orientations)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정책에 대한 태도의 함으로 간주한다. 이 가운데, 많은 연구들은 양자 간에 일관된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정치 지식 혹은 정치 세련도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정책들의 이념적 스탠스를 올바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자신의 이

념 성향에 조응하는 일관적인 정책 선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Converse 1964;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따라서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정책 태도가 보다 일관성을 띠고 나타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며, 혹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상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이념과 정책 선호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상술한 두 이론들은 “일관된 정책 선호”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가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강하고 일관된 선호를 유권자 차원의 정파적 갈등을 촉발시켜 양극화의 지표로 상정하는 주장들을 고려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 결국 인지적 자원으로써의 정치 지식이 가지는 규범적인 함의(Luskin 1990)와 모순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합리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바라보며 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일관된 선호가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온 오랜 연구 경향과, 유권자의 이념 및 정책 선호에 당파적 편향성(partisan bias)이 있어 그러한 일관된 선호가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의 결과들이 주장하는 바가 상충됨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이후의 연구들은 정책들이 가지는 이념적 스탠스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이슈 혹은 각 정책마다 다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Feldman and Johnston 2014; Weber and Federico 2013).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해 잘 알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일관된 태도를 가지도록 추동한다는 기존의 연구 경향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태도의 조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식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러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치 지식의 인지적 능력을 강조했던 기존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Feldman and Johnston 2014).

정책들의 스탠스에 대해 잘 아는 이들도 다양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경험적 근거, 또한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에게서 보다 강하고 일관적인 정치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연구의 결과들은 인지적 능력만이 일관된 선호의 유일한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이렇게 기존 연구들의 대립되는 결과들은 일관된 선호가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일관되고 강한 정치적 선호는 유권자의 당파적 태도에 근거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partisan)인” 속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지식은 정책들의 스탠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일 뿐, 이로 인해 반드시 일관된 선호를 가지도록 추동하는 것은 아니며, 당파적 유권자들이 편향된(partisan-biased)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일관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요컨대, 정파성을 띤 유권자들에게서만 이러한 이념과 정책 선호의 높은 조응성이 나타나, 정당 일체감을 위시한 당파성이 보다 강한 일관적 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유권자들의 이념과 정책 선호를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이것이 당파적인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Bartels 2002; Carsey and Layman 2006; Feldman and Conover 1983; Layman and Carsey 2002; Markus and Converse 1979; 강신구 2013),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과 그로 인한 강한 정치적 태도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임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당파적 성향과 일관된 정책 선호 사이의 조응성이 높아지는 것은 그 집합적 결과물로서 종국적으로 유권자 사이의 양극화로 귀착되기 때문이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Fiorina et al. 2010).

제 2 절 이념 성향, 정책 선호와 정치 지식

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정치 이념이란 규범적인 가치 및 사회의 올바른 질서에 대한 신념의 집합이며, 동시에 그러한 규범과 질서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아우르는 개념이다(Denzau and North 1994; Erikson and Tedin 2015; Gerring 1997). 이는 동일한 신념을 지닌 개인들이 정치 및 사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유하는 프레임으로 기능하게 된다. 일찍이 대중의 정치 이념에 대해 “신념체계(mass belief system)”라고 명명한 컨버스(Converse 1964)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정치 이념이란 유권자들이 상호 연관된 이슈에 대해 지니는 정치적 태도의 배열(configuration)로 개념화 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래로, 정치 이념은 주로 일차원적인 좌-우 정향성(left-right orientations) 상에서 구분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는 18세기 말 프랑스 의회에서 현 상태(status quo)에 대해 옹호하는 이들이 회의장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왼쪽에 자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연유하였다(Carlisle 2005; Jost et al. 2009). 한편,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 이념의 이러한 좌-우(left-right)의 차원이 점차 진보-보수(liberal-conservative)의 차원으로 대체되며, 이러한 진보-보수 차원 상에서의 구분은 현 상태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지 혹은 현 상태의 안정성에 대해 찬성하는지와 관련되어 발전되어 왔다. 결국, 정치 이념은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변화를 지지하는 태도에서부터 현 상태의 유지를 지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의 일차원적인 연속선(unidimensional continuum)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Erikson and Tedin 2015; Fuchs and Klingemann 1990; Lipset and Raab 1978; McClosky and Zaller 1984; Rathbun 2007). 따라서 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위치지어 질 수 있는 정치 이념은 대중의 정치적 태도 및 관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유용한 분석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Jacoby 1988; Miller et al. 1976; Stokes 1963; Wyckoff 1980; Zaller 1992). 이에 정치 이념, 특히 정치적 정향으로서 개념화되는 이념은 각 국가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 및 그 결과 형성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게 된다(Lipset and Rokkan 1967; Rae and Taylor 1970).

예를 들면,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치 이념과 정당 지지의 편성(partisan alignment)은 특히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균열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에서의 이념은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에 계급을 기반으로 한 투표 행태가 유럽 선거 정치의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Brooks et al. 2006; Crewe 1993; Evans 1999; Knutsen 2006; Nieuwbeerta and Ultee 1999).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균열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정치 이념의 범위 또한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편이다. 그 이유는 미국 사회는 봉건제(feudal system)의 역사가 부재하여 이념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기반 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Hartz 1955). 게다가, 유럽의 노동자들에 비해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찍이 투표권이 주어졌다(Lipset and Rokkan 1967). 따라서 미국에서는 사회 계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유럽 국가들에서만큼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다(Clark and Lipset 1991; Lipset 2001). 오히려, 미국에서는 정치 이념과 관련된 논쟁은 주로 정부 역할의 범위에 관한 관점이나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Fiorina et al. 2010; Jost et al. 2008). 예컨대, 조스트 외(Jost et al. 2008)의 연구는 미국 시민들이 응답하는 이념적 정향성(self-reported political ideology)은 주로 전통적인 사회적 이슈들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진보적 시민들은 정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 반면, 보수적 시민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Bardes and Oldendick 2012; Mayer 1992).

한편,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균열 혹은 정부 역할의 범

위에 대한 이슈보다는, 분단 및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이념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들은 한국에서는 정치 이념이 주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 및 북한에 대한 태도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Steinberg and Shin 2006; 강원택 2003; 강원택 2005; 김무경·이갑윤 2005; 류재성 2012; 박경미 외 2012).

이렇듯, 정치 이념을 주로 일차원으로 개념화 될 수 있는 정치적 정향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좌-우 혹은 진보-보수의 연속선상에서 개별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위치 짓는(self-report) 상징적(symbolic) 형태의 개념화 방식을 취한다. 한편, 이러한 일차원의 정치 이념이 대중의 여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이념을 보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혹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념을 실질적인(operational) 차원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Ellis and Stimson 2012; Free and Cantril 1967; Page and Shapiro 1992). 이러한 관점은 이후 이념이 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축소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구체적인 이슈에 따라 독립적인 차원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였다. 셰퍼와 클라게트(Shafer and Claggett 1995), 클라게트와 셰퍼(Claggett and Shafer 2010), 그리고 펠드만과 존스톤(Feldman and Johnston 2014)은 유권자의 이념이 최소한 두 가지 차원, 즉 상호 독립적인 경제적 이념 차원과 사회적 이념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정치 이념은 서로 다른 동기적 기반(motivational foundations)을 갖는데, 듀킷 외(Duckitt et al. 2002; Duckitt 2006)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이념은 사회지배성향(social dominant orientation)과 연관되며, 사회적 이념은 우파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밝히며, 유권자가 정치 이념을 처리하는 데는 이중의 과정(dual-process)이 개입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유권자들이 여러 정책 영역에 속하는 이슈들이 하나의 척도 상에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Feldman and Johnston 2014; Layman and

Carsey 2002).

정치 이념을 정치적 정향과 정책 선호의 합으로 개념화 하는 이러한 두 시각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정향과 구체적인 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조율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념적 정향의 휴리스틱(heuristics)의 기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개인이 모든 정치적 정보에 대해 접근하는 것과, 이들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좌-우 혹은 진보-보수로 단순화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게 된다고 보았다(Hinich and Munger 1997; Lau and Redlawsk 2001). 개인의 이념적 정향이 개별 정보들을 구조화하여 정보 처리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Hamill et al. 1985; Hamill and Lodge 1986), 이러한 일차원의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사회를 해석하는 인지적인 구조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Jacoby 1991).

이러한 일차원의 이념적 정향성이 여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향성이 유권자의 이슈 태도 혹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해 왔다. 시어스와 그 동료들의 연구(Sears et al. 1979; Sears and Citrin 1983)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위치가 구체적인 이슈들에서 나타나는 태도마다 일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유권자들만이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정책적 선호에 있어 일관된 응답을 하고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들의 응답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Jacoby 1986; Knight 1999; Luttbeg and Gant 1985). 요컨대, 이 연구들은 “일반 유권자들은 이념적 렌즈(ideological lens)를 통해 정치를 해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컨버스(Converse 1964)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는 신념체계(belief system)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신념체계에서 개인은 보다 추상적인 틀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좌-우 혹은 진보-보수로 규정되는 이념적 정향(left-right ideological orientations)이다. 컨버스는 이러한 이념적 정향과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를 연관시키는 것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명명하였는데, 개인의 이념 혹은 신념체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잘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며(Converse 1964; Lipset 1960; Shils 1968), 정치적으로 세련된(sophisticated) 혹은 정치적 지식이 높은 일부의 유권자들에게서만 추상적인 차원의 이념적 정향에 조응하는 일관된 정책 태도(congruent policy attitudes)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Jacoby 1988; Jacoby 1991; Jacoby 1995; Sniderman et al. 1991).

2.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정치 지식

이념과 정책 선호의 조응성에 대해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된 이래로, 많은 후속 연구들은 사람들의 이념적 정향에 조응하는 정책 선호의 일관성(policy congruence)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정치 지식(political knowledge)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정치 지식이란 또 다른 말로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 혹은 정치적 전문성(political expertise)이라고도 하는데, 정치 지식은 주로 정부 시스템, 정치 이슈, 후보자에 대한 정보, 혹은 이러한 여러 쟁점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로 정의된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캠벨 외(Campbell et al. 1960), 그리고 컨버스(Converse 1964)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 지식이 높고 보다 세련된 이들에게서 이념적 정향과 정책 태도 사이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정치 지식이 낮은 이들은 일관된 정치적 태도 및 신념체계를 결여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렇게 높은 정치 지식을 가진 유권자들은 정책적 이슈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별 정책들을 이념적으로 올바르게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다 자신의 정치적 정향에 조응하는 일관적인 정책 선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Luskin 1990; Zaller 1992). 로와 레드로브스크(Lau and Redlawsk 1997; Lau and Redlawsk 2001)는 정치 세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 휴리스틱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²⁾ 즉, 이념적 정향으로부터 정책 이슈에 대한 일관된 선호를 이끌어 내는(deduce) 것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능력(cognitive ability) 혹은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선호에 대한 정치 지식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념과 정책 선호를 합리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상정하며, 이에 일관된 선호를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스킨(Luskin 1990)은 집합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세련도의 분포는 민주 정치의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 지식은 이슈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moderator)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운스 이론의 프레임(Downsian framework) 하에서, 투표 선택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정책 선호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행태로 개념화 된다(Downs 1957). 유권자들은 이념 혹은 이슈 공간에서, 정당들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 이슈들을 비교한 결과 자신의 정책 선호에 가장 가까운

2) 유권자들이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휴리스틱(heuristics), 즉 정보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Popkin 1994; Lupia and McCubbins 1998; Sniderman et al. 1991). 이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제한된 정보(limited information; Lupia and McCubbins 1998)”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Simon 1985)”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휴리스틱이 나름의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로와 레드로브스크(Lau and Redlawsk 2001)의 실험 연구는 주로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휴리스틱을 보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휴리스틱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Brody and Page 1972). 이러한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나 경험적 결과의 측면에서 모두, 이슈에 근거한 투표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보다 세련되었고 정치적 정보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다시 말하면,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스탠스에 상응하는 투표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민스와 스티imson(Carmines and Stimson 1980)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한 투표 선택의 확률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어려운 이슈(hard issues)”의 경우 이러한 조건적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쉬운 이슈(easy issues)”에 대해서는 정치적 정보의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요컨대, 정치 지식 혹은 정치적 세련화에 관한 이론들은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여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유권자들의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과 자원(resources)을 강조해 왔다(Lau and Redlawsk 1997; Lau and Redlawsk 2001).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향으로과 조응하는 일관된 정책 선호는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능력(cognitive ability)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에 있어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책 일관성이 항상 높은 정치적 세련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Goren 2004). 첫째로, 프리와 캔트릴(Free and Cantril 1967), 그리고 엘리스와 스티imson(Ellis and Stimson 2012; Stimson 2004)은 미국의 유권자 중 상당수는 그들 자신을 보수라고 표명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에 대해 저자들은 “원칙에 있어서는 보수주의자(conservatives in principle)이나, 운영상에 있어서는 진보주의자(operational liberals)”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부 연구들은 이념적 요소들의 구조적 다양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보여 왔다(Conover and Feldman 1981; 박원호 2012). 하이트(Haidt 2012)의 연구와 웨버와 페데리코(Weber and Federico 2013)의 연구는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근원(moral foundations)에 따라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이념적 선호의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혔다. 셰퍼와 클라게트(Shafer and Claggett 1995), 클라게트와 셰퍼(Claggett and Shafer 2010), 그리고 펠드만과 존스톤(Feldman and Johnston 2014)은 최소한 두 개의 직교하는 이념적 차원이 있음을, 즉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사람들의 정책 선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이념의 다차원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게다가, 펠드만과 존스톤(Feldman and Johnston 2014)의 연구는 각 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들이 일차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거나, 정치적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 일관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들은 정치적 세련도의 수준에 관계없이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념적 정향은 사회의 현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변화시켜야 한다는 연속선상에서 위치시킬 수 있는 유권자들의 태도 및 의사와 관계되므로, 이념적 정향은 불가피하게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게 된다(Lipset and Rokkan 1967; Rae and Taylor 1970). 따라서 이념적 정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들은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사람들은 이러한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부차적인 이슈들에 대한 태도가 더해지는 다양한 조합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정치적 이슈들을 가로질러 일관성 있는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Feldman 1988; Feldman 2003). 또한,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이

반드시 정치 지식과 정치 정보를 포함하는 정치적 세련화 수준과 직접으로 연관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념과 정책 선호는 당파적인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Bartels 2002; Carsey and Layman 2006; Feldman and Conover 1983; Layman and Carsey 2002; Markus and Converse 1979; 강신구 2013).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를 통해 이념과 정책 태도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가 보고한 이념적 정향(self-reported ideological orientations)에 조응하는 정책 태도의 일관성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인지적 요인과는 별개로 유권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대한 질문을 촉발한다.

고렌(Goren 2004)은 정치적 세련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활용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치적 세련도가 그 영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에 앞서, 러스킨(Luskin 1990)과 버넷(Bennett 1995)은 이념이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기회(opportunity), 동기(motivation), 그리고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정치 이슈를 이해하고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정치 지식과 정치적 세련화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왔다(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Jacoby 1988; Jacoby 1991; Sniderman et al. 1991).

3)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은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기(motivation)는 정치에 대한 관심 등 해당 사안이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도록 하는 요인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한편, 기회(opportunity)는 정치적 정보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권자의 속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요인은 아니며 본 연구가 주목하는 당파적 편향과 직결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3. 정치적 동기로서의 정당일체감과 당파적 편향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의 이념을 이론화함에 있어 주로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으로 일관된 선호를 가지는 것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해 왔던 연구의 경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이념의 구조적 다양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제기되어 왔고, 또한 이념과 정책 선호는 가변성을 띤다는 점이 밝혀져 왔다. 따라서 이념과 정책 선호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정치 지식의 영향력 외의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즉, 정치적 사안에 대한 처리를 보다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연적으로 일관된 정치적 선호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정치적 동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렌(Goren 2004)의 연구는 정치적 세련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활용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선호를 형성할 동기(motivation)가 있을 때 추상적인 정향과 일관되는 선호를 형성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⁴⁾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페데리코와 슈나이더(Federico and Schneider 2007)는 정치적 전문가들(political experts)이 이념적으로 보다 일관된 이슈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사회적 사안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strong motivation)”를 가진 이들에게서만 이러한 일관된 태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

4) 구체적으로, 고렌(Goren 2004)에 따르면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인 유권자들은 각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에 보다 연관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추론(deduce)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주로 그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들이 가진 원칙에 근거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 이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선호를 형성할 상황과 동기가 있다면 정치적 영역의 이슈에 대해서 이념적 정향에 조응하는 선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다. 유권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정치적 동기로서 이해되기에 적합한 요인은 유권자들의 당파성, 즉 정당일체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책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념적 정향과 정책 태도 사이의 관계가 나타내는 강도는 정치 지식(인지적 능력 요인)과 당파성(partisan attachment; 정치적 동기 요인)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이하고자 하며,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높은 일관성이 유권자가 특히 이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과 정치적 동기로서의 당파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당파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당파성은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Campbell et al. 1960; Miller and Shanks 1996). 특히, 정당에 대한 이러한 유대감은 정치적 관심, 세련도 및 정치 참여의 수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정치 지식은 정당일체감을 가진 이들에게 선행적으로 높았을 수 있고, 이들의 일관된 정치적 태도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유권자의 태도와 그 집합적 결과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집단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이유로서 유권자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 선호의 형성은 유권자의 인식에 차이를 초래하는 당파심이나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정당일체감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데 정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단순화시켜주는 단서(cue)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유권자가 정치적 정보를 접할 때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작용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왔다(Campbell et al. 1960). 예를 들면, 에반스와 앤더슨(Evans and Andersen 2006), 그리고 맥도널드와 히스(Macdonald and Heath 1997)는 유권자의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파적 정향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몇몇의 실험 연구들은 당파적 유권자들이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Jerit and Barabas 2012; Lodge and Taber 2000; Redlawsk 2002; Taber and Lodge 2006). 즉, 유권자들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 관점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이다(Jerit and Barabas 2012).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후보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하며 (Marsh and Tilley 2010), 정치적 과오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및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도 당파적 편향의 과정이 작동한다(Achen and Bartels 2016; Healy et al. 2014; Malhotra 2008; Malhotra and Kuo 2009; 길정아·하상웅 2019).

이에 더하여, 이념 및 정책 태도에 가변성이 있다는 것과, 이들이 당파적 편향성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Bartels 2002; Layman and Carsey 2002). 랫지와 해밀(Lodge and Hamill 1986)은 유권자의 당파적 관점이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편향(consistency bias)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의 연구는 당파성을 가진 유권자들이 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일원적인 좌-우의 차원과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일관된 정치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당파적·이념적·정책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높은 일관성이 가져오는 집합적인 결과로서 유권자 사이의 정파적 갈등이 격화되고 양극화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정책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당파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이 그들의 선호를 정당의 정책 입장에 보다 가까운 쪽으로 조정해 가는 것을 촉진시키는 당파적 편향에 의해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당파 유권자들에 비해, 특정한 정당에 대해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들의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에서의 일관성이 강한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는 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정치 지식이 높은 유권자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보를 처리할 인지적 능력을 갖추므로써 각 정책들이 가지는 스탠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한편,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념 성향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호를 형성할 동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다차원적인 정책 영역에 있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온 바, 결국 보다 강하고 일관된 스탠스를 나타내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당파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당파적 유권자들은 정치적 사안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향(political predisposition)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Bartels 2002; Goren 2002; Jerit and Barabas 2012; Lodge and Taber 2000; Redlawsk 2002; Taber and Lodge 2006). 결국,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당파적 속성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강한 정파적 태도와 그 집합적 결과물로서 이들 간의 당파적 대립이 심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이념적 일관성의 태도는 정당 엘리트들의 이념적 입장이 양극화되면서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한 당파적 단서(partisan cue)를 제공받게 되면서 나타난 것임을 주장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9; Nie et al. 1976; Shafer and Claggett 1995; Sniderman et al. 1991; Zaller 1992). 그러나 레이먼과 카시(Layman and Carsey 2002)의 연구는 정당으로부터의 당파적 단서에 대해 모든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유권자들의 일관된 선호는 유권자가 정당 엘리트의 스탠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유권자가 강한 당파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당파적 단서의 영향을 받게 되어 보다 강하고 일관된 선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권자 차원에서 양극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partisan)

인” 속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지식은 정책들의 스탠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일 뿐, 이로 인해 반드시 일관된 선호를 가지도록 추동되는 것은 아니며, 당파적 유권자들이 편향된(partisan-biased)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일관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요컨대,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에게서만 이러한 이념과 정책 선호의 높은 조응성이 나타나,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당파성이 보다 강하고 일관된 정책 태도를 가지게 하는 요인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우, 강하고 일관된 정책 선호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당파적 속성을 띤 정치적 태도로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정파적 편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유권자들의 이념과 정책 선호가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님을 밝힐 수 있으며,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파적 태도와 편향성은 결국 이들 간의 차이와 대립으로 귀착되어 대중 차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당파심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이념적 정향과 조응하는 정책 선호의 일관성을 추동하는 보다 본질적인 요인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경험적 분석을 위한 연구 가설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무당파 응답자의 경우, 정치 지식은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의 일관성이 조응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2]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정치 지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의 일관성이 조응하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 무당파 응답자에 비해,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이념적 정향과 정책 선호의 일관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 직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 질문과 관련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특히 정치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책 선호 일관성(진보-보수)이다. 위의 설문조사 데이터에는 다음의 [표3-1]에서와 같이 대외/대북 이슈, 경제 이슈, 그리고 사회 이슈라는 세 가지의 정책 영역에 따라 각각 세 가지씩의 세부적인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은 본래 매우 반대=1, 반대=2, 찬성=3, 매우 찬성=4의 척도 상에서 조사되었다.⁵⁾ 본 연구의 질문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를 진보-보수의 연속선상에서 응답자가 얼마나 일관된 정책적 선호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변량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정책 문항들이 모두 진보-보수의 일관적인 방향성을 가지도록 일부를 역코딩하였다.⁶⁾ 그 후, 본래의 척도를 매우 진보=-2, 진보=-1, 보수=+1, 매우 보수=+2로 새로운 값을 부여하여, 정책 선호의 이념적 속성이 일관적인 경우에 절댓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은 선호로 응답하여 혼재된 경우에는 그 값을 서로 상쇄하도록 조작화 하였다. 따라서 음(-)의 방향은 진보적인 정책 선호인 것으로, 양(+)의 방향

5) 미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정책적 쟁점의 영역(issue domain)이 최소한 두 가지 차원, 즉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Claggett and Shafer 2010; Feldman and Johnston 2014; Shafer and Claggett 1995).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유권자의 진보-보수의 이념 성향을 결정짓는 데 대외/대북정책 등의 정치적 태도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강원택 2003; 김무경·이갑윤 2005; 류재성 2012; 박경미 외 2012). 따라서 대부분의 설문 문항은 대외/대북 정책이라는 정치적 이슈, 경제 이슈, 사회 이슈라는 세 가지 차원을 정책 태도로 포함하고 있고, 본 연구 또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정책 선호 변수를 구성하였다. 박원호(2012)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 문항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6) 1번, 4번, 5번, 7번 문항에 해당한다.

은 보수적인 정책 선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절댓값의 크기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하게 된다.

[표3-1] 정책 문항

정책 영역	정책 문항	N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소값
대외/대북 정책	① 한미 동맹관계 강화	2,043	0.520	1.059	+2	-2
	② 국가보안법 폐지	2,039	0.318	1.152	+2	-2
	③ 한미 FTA 폐기	2,038	-0.001	1.192	+2	-2
경제 정책	④ 복지보다 경제성장	2,044	0.294	1.229	+2	-2
	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자율	2,041	-0.254	1.199	+2	-2
	⑥ 정부가 생필품값 직접 관리	2,045	-0.532	1.139	+2	-2
사회 정책	⑦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	2,041	0.525	1.128	+2	-2
	⑧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허용	2,036	0.592	1.202	+2	-2
	⑨ 사형제 폐지	2,042	0.422	1.213	+2	-2

본 연구의 주요한 독립변수는 유권자의 이념 성향(진보-보수)으로, 이 변수는 가장 진보적인 0점에서부터 중도적인 5점을 거쳐 가장 보수적인 10점에 이르는 범위에서 자기 보고(self-placement)한 응답자의 이념 성향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는 응답자의 정치 지식이다.⁷⁾ 정치 지식의 측정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주요 정치인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Krosnick and Milburn 1990; Lodge et al. 1989; Luskin 1987; McGraw and Pinney 1990; Zaller

7) 최근, 바라바스 외(Barabas et al. 2014)는 정치 지식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치 지식의 측정도구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정치 지식은 사안이 이미 정립된 것인지 혹은 최근의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것인지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최소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들은 이러한 유형들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데이터 또한 그 한계로 인해 서로 대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담고 있지 않다.

1990),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류재성(2012)의 연구 또한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⁸⁾ 여기에서도 제시된 문항들에 대해 올바르게 대답한 개수로 정치 지식을 조작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상호작용항을 조작화 하였다. 먼저, 이념성향×정치 지식 변수이다. 그리고 다음은 정치 지식과 당파성의 조합이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응답자를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다항 범주형 변수이다. 먼저 정치 지식 문항에서 2점과 3점을 기록한 응답자들을 정치 지식이 높은 집단으로, 0점과 1점을 기록한 응답자들을 정치 지식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정당일체감이 있는 응답자와 무당파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 그룹1: 낮은 정치 지식과 무당파층, (2) 그룹2: 높은 정치 지식과 무당파층, (3) 그룹3: 낮은 정치 지식과 정당 지지자, (4) 그룹4: 높은 정치 지식과 정당 지지자이다. 이 네 개의 그룹과 이념성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조작화 하였다: 이념성향×그룹1, 이념성향×그룹2, 이념성향×그룹3, 이념성향×그룹4이다. 이 중, 기준범주인 그룹4와 그룹4×이념성향 변수는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밖에,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성별(남성=1), 교육수준, 가구소득, 지역(7개의 가변수)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고, 이들은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코딩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화 방식은 하단의 [표3-2]에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3-3]과 같다.

8) 정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주관식)
- ②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 ③ 현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구입니까? (객관식)

[표3-2] 변수의 조작화 방식

주요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정책선호(진보-보수)	3개의 정책 영역, 9개의 정책 문항에 대한 일관된 선호 가장 진보=-18, 가장 보수=+18
독립변수	
이념성향(진보-보수)	가장 진보=0, 중도=5, 가장 보수=10
정치 지식	최소 0점, 최대 3점
정당일체감 유무	정당일체감 있음=1, 무당파=0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민주통합당 정당일체감, 무당파 3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무당파)
네 개의 그룹	그룹1: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0 그룹2: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0 그룹3: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1 그룹4: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1 4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그룹4)
상호작용항 1	이념성향×정치 지식
상호작용항 2	이념성향×그룹1, 이념성향×그룹2, 이념성향×그룹3, 이념성향×그룹4 4개의 상호작용항 (기준범주: 이념성향×그룹4)
통제변수	
연령	남성=1, 여성=0
성별	최소 19세, 최대 88세
교육수준	무학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서열형 변수
가구소득	최소 100만원 미만, 최대 800만원 이상의 서열형 변수
거주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7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서울)

[표3-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	사례수	평균(점)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정책선호(진보-보수)	2,021	1.88	4.55	15	-14
이념성향(진보-보수)	2,045	4.97	1.88	10	0
정치 지식	2,047	1.21	0.88	3	0
정당일체감 유무	1,941	100.00	-	-	-
정당일체감 있음	1,207	62.18	-	-	-
무당파층	734	37.82	-	-	-
정당일체감	1,941	100.00	-	-	-
새누리당	686	35.34	-	-	-
민주통합당	521	26.84	-	-	-
무당파	734	37.82	-	-	-
그룹: 4집단	1,941	100.00	-	-	-
그룹1: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0	555	28.59	-	-	-
그룹2: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0	179	9.22	-	-	-
그룹3: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1	829	42.71	-	-	-
그룹4: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1	378	19.47	-	-	-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1]

정책 선호(진보-보수) =

$$\alpha + \beta_1 \times \text{이념성향} + \beta_2 \times \text{정치 지식} + \beta_3 \times \text{이념성향} \times \text{정치 지식}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위의 [모형1]은 응답자의 이념성향이 일관된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치 지식이 차등화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α 는 상수(constant)를, 각 β 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를, 각 γ 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의미하며, ε 는 오차항(error term)을 의미한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과 무당파 응답자들을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한다. 정치 지식에 따라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관된 정책 선호

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호작용항인 β_3 의 유의미성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모형2]

정책 선호(진보-보수) =

$$\alpha + \beta_1 \times \text{이념성향} + \beta_2 \times \text{그룹1} + \beta_3 \times \text{그룹2} + \beta_4 \times \text{그룹3} + \beta_5 \times \text{이념성향} \times \text{그룹1} + \beta_6 \times \text{이념성향} \times \text{그룹2} + \beta_7 \times \text{이념성향} \times \text{그룹3}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한편, [모형2]는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조합이 이념성향과 정책선호의 관계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도 또한 α 는 상수, 각 β 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며, 각 γ 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를, 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세 개의 상호작용항이 가지는 회귀계수인 β_5 , β_6 , 그리고 β_7 을 추정하였는데, 이들은 기준범주인 그룹4에 비해 각 그룹이 추가적으로 가지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β_1 은 기준범주인 그룹4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회귀계수로, 정치 지식 수준이 높고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에게 있어 이념성향이 종속변수인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beta_1 + \beta_5$ 는 그룹1, $\beta_1 + \beta_6$ 은 그룹2, 마지막으로 $\beta_1 + \beta_7$ 은 그룹3의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이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룹4의 응답자들에게서 이념성향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β_5 , β_6 , 그리고 β_7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결과여야 한다. 그리고 각 집단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β_1 , 그리고 $\beta_1 + \beta_5$, $\beta_1 + \beta_6$, $\beta_1 + \beta_7$ 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이 각각 통계적으로 0과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각 회귀계수의 부호와 계수들의 선형결합이 나타낼 영향력은 다음의 [표3-4]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표3-4] 회귀계수의 해석

	Coef.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부호(sign)
그룹1: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0	$\beta_1 + \beta_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그룹2: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0	$\beta_1 + \beta_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그룹3: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1	$\beta_1 + \beta_7$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그룹4: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1	β_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이념 성향 변수의 영향력	$\beta_1 + \beta_7 < \beta_1$	

제 4 절 분석 결과

1.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이념 성향에 근거한 정책 선호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응답자의 정치 지식이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다. 먼저, 아래의 [표3-5]는 이념성향과 정책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응답자의 정치 지식 수준별로 구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 지식이 높은 응답자들에게서 양자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3-5] 진보-보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
(정치 지식 수준에 따라)

	피어슨 상관계수	p-value
정치 지식 낮음	0.2087	0.0000
정치 지식 높음	0.3590	0.0000
전체	0.2623	0.0000

다음의 [표3-6]은 정책선호를 종속변수로, 이념성향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정치 지식을 조절변수로 포함한 [모형1]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념 성향×정치 지식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p < 0.001$),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치 지식이 높은 이들에게서 정책선호에 대한 이념성향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들과 동일한 맥락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Jacoby 1988; 류재성 2012).

[표3-6]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수: 정책 선호(진보-보수)	Coef.	Std. Err.
이념성향	0.107	0.096
정치 지식	-0.751*	0.305
이념성향×정치 지식	0.215***	0.057
연령	0.031***	0.009
남성(=1)	0.332	0.204
교육수준	-0.214*	0.105
가구소득	0.283***	0.064
인천/경기	-0.761**	0.285
대전/충남/충북	-1.189**	0.394
광주/전남/전북	-1.396***	0.394
대구/경북	0.236	0.371
부산/울산/경남	0.949**	0.327
강원/제주	-0.840	0.508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0.922***	0.248
민주통합당	-0.683**	0.253
상수	-0.563	0.935
N	1,076	
R-squared	0.1834	
adj. R-squared	0.1719	

*** $p < 0.001$, ** $p < 0.01$, * $p < 0.05$ (양측검정)

한편, 다음의 [표3-7]은 응답자들을 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이념성향이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치 지식이 차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정당일체감이 있는 응답자들에게서만 이념성향×정치 지식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나타내($p < 0.001$),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무당파 응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념성향과 정치 지식 변수가 모두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무당파 응답자들은 이념 성향에 조응하는 정책 선호를 가지지 않으며, 이 가운데 정치 지식이 개입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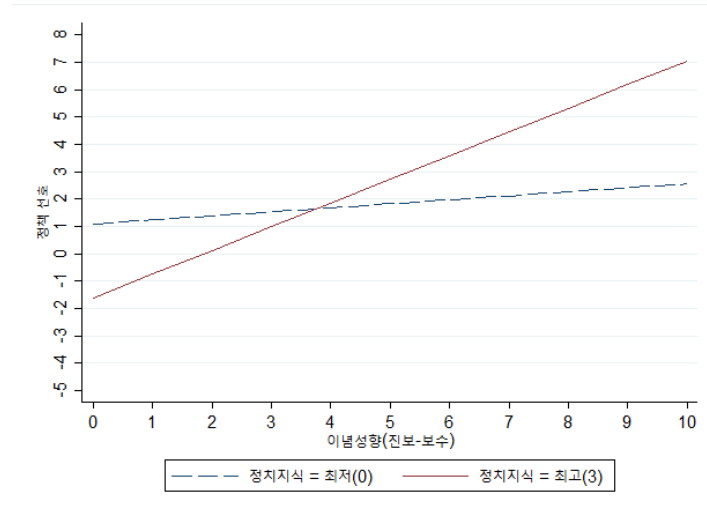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동기로서의 정당일체감을 갖춘 응답자들에게서만 이념성향과 정책선호의 관계에 대한 정치 지식의 차별화 하는 효과가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그림3-1] 참고).

[표3-7]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 (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라)

종속변수: 정책 선호 (진보-보수)	정당일체감 있는 응답자	무당파층 응답자
이념성향	0.147 (0.118)	0.116 (0.165)
정치 지식	-0.903* (0.358)	0.116 (0.589)
이념성향×정치 지식	0.240*** (0.066)	0.049 (0.113)
연령	0.022 (0.011)	0.041** (0.014)
남성(=1)	0.401 (0.259)	0.325 (0.329)
교육수준	-0.126 (0.132)	-0.407* (0.173)
가구소득	0.271** (0.082)	0.292** (0.101)
인천/경기	-0.804* (0.351)	-0.702 (0.481)
대전/충남/충북	-1.853*** (0.507)	-0.338 (0.625)
광주/전남/전북	-0.305 (0.502)	-2.863*** (0.636)
대구/경북	-0.056 (0.446)	0.721 (0.660)
부산/울산/경남	0.474 (0.409)	1.530** (0.544)
강원/제주	-1.140 (0.612)	-0.311 (0.891)
민주통합당	-1.874*** (0.289)	-
상수	0.445 (1.223)	-0.280 (1.541)
N	1,184	719
R-squared	0.1926	0.1280
adj. R-squared	0.1829	0.1119

*** $p < 0.001$, ** $p < 0.01$, * $p < 0.05$ (양측검정), 괄호 안은 표준오차

[그림3-1] 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값: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



[그림3-1]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일체감을 지닌 응답자들 중에서 정치 지식이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자들이 나타내는 그래프(대시선)는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바, 이들은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를 연결 짓는 태도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정치 지식이 가장 높은 응답자들의 그래프(실선)는 명확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은 자신이 위치시킨 이념 성향에 조응하는 형태로 일관된 정책 선호를 가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 정당일체감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응답자의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표3-8]을 통해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지식 또한 미국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류재성 2012).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한 개의 문항에만 옳은 응답을 하였으며, 주어진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약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한국 유권자의 정치 지식 수준

정치 지식 (정답의 개수)	빈도(명)	비율(%)
0	381	18.61
1	1,083	52.91
2	349	17.05
3	234	11.43
전체	2,047	100.00

한편, [표3-9]는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의 여부와 정치 지식 수준을 교차표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가 예측한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은 비율이 무당파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9]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 교차표

정치 지식 (정답의 개수)	정당일체감이 있는 응답자 (%)	무당파 응답자 (%)	전체 (%)
0	203 (55.77)	161 (44.23)	364 (100.00)
1	626 (61.37)	394 (38.63)	1,020 (100.00)
2	211 (63.55)	121 (36.45)	332 (100.00)
3	167 (74.22)	58 (25.78)	225 (100.00)
전체	1,207 (62.18)	734 (37.82)	1,941 (100.00)

두 집단의 평균값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3-10]과 [표3-11]에 나타나 있다. [표3-10]을 통해 지지하는 정당을 가진 응답자들의 정치 지식

평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t=4.38$, $p=0.0000$), 이어서 [표3-11]을 통해 새누리당 지지자와 민주통합당 지지자 사이에는 정치 지식의 평균값이 거의 유사하였으며, 무당파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이 두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F=9.59$, $p=0.000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의 유무에 따라 정치 지식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3-10] 정치 지식 평균비교: t-test

	정치 지식 평균	diff=0.18 t=4.38 p=0.0000
정당일체감이 있는 응답자	1.28 (n=1,207)	
무당파 응답자	1.10 (n=734)	
합계	1.22 (n=1,941)	

[표3-11] 정치 지식 평균비교: F-test

	정치 지식 평균	F=9.59 p=0.0001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1.29 (n=686)	
민주통합당 정당일체감	1.28 (n=521)	
무당파 응답자	1.10 (n=734)	
합계	1.22 (n=1,941)	

따라서 정당일체감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정치 지식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 지식이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는 상당 부분이

이들의 당파성에 근거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표 3-12]는 정당일체감과 정책선호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사이의 조응하는 관계는 무당파 응답자에 비해 두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응답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3-12] 진보-보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의 피어슨 상관계수
(정당일체감 유무에 따라)

	피어슨 상관계수	p-value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0.2568	0.0000
민주통합당 정당일체감	0.1708	0.0001
무당파 응답자	0.1199	0.0012
합계	0.2623	0.0000

3.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살펴본 바와 같이, 이념과 정책 선호의 조응성은 인지적 속성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파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형2]에 해당하는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3-13]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표3-13]은 이념성향이 정책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 그룹에 따라 차등화 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세 개의 상호작용항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으며(각각 $p < 0.001$, $p < 0.01$, $p < 0.01$), 모두 (-)의 부호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준범주인 그룹4(정당일체감=1, 정치 지식=1)에 비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세 집단에서 모두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13] 정책 선호에 대한 OLS 회귀분석:

정치 지식과 정당일체감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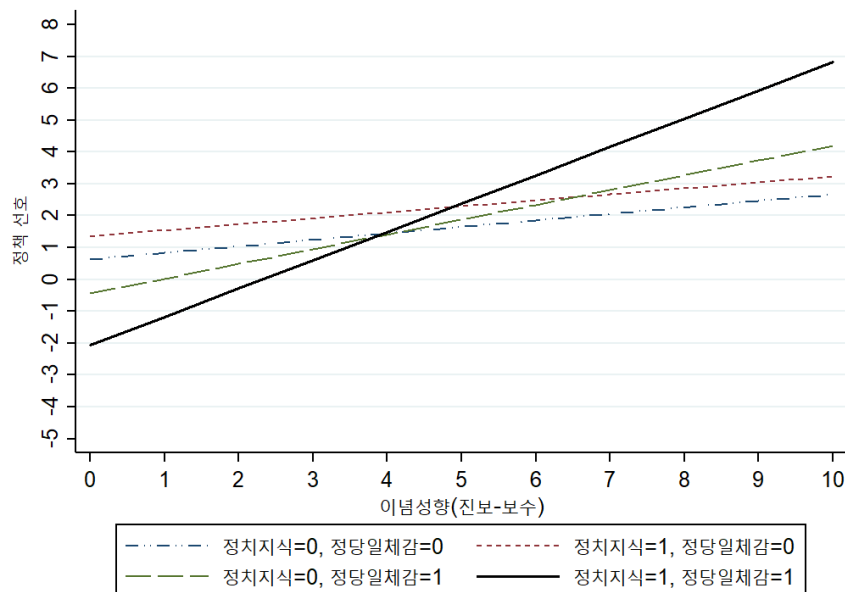
종속변수: 정책 선호(진보-보수)	Coef.	Std. Err.
이념성향	0.888***	0.101
그룹1	2.687**	0.801
그룹2	3.412**	1.113
그룹3	1.614*	0.712
이념성향×그룹1	-0.684***	0.149
이념성향×그룹2	-0.700**	0.207
이념성향×그룹3	-0.424**	0.128
연령	0.037***	0.009
남성(=1)	0.380	0.205
교육수준	-0.217*	0.105
가구소득	0.300***	0.064
인천/경기	-0.846**	0.287
대전/충남/충북	-1.155**	0.397
광주/전남/전북	-1.879***	0.389
대구/경북	0.459	0.372
부산/울산/경남	1.060**	0.329
강원/제주	-0.979	0.512
상수	-3.812***	1.036
N	1,903	
R-squared	0.1467	
adj. R-squared	0.1390	

*** $p < 0.001$, ** $p < 0.01$, * $p < 0.05$ (양측검정)

다음의 [그림3-2]는 응답자를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념성향이 일관적인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정치 지식이 낮은 무당파 응답자(대시·점선), 그리고 정치 지식이 높은 무당파 응답자(점선)의 경우 거의 기울기를 나타내지 않아 그들의 이념성향과 정책선

호 간의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표명하는 진보-보수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각 정책 영역에서 다양한 선호의 조합을 나타냄으로써 진보-보수의 속성이 상쇄된 정책 선호의 총합을 나타냈다. 정치 지식이 낮고 정당일체감을 지닌 응답자들(대시선)은 이념성향에 따라 일관된 정책 선호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 지식이 높고 지지하는 정당을 가진 응답자들(실선)의 경우는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간에 명확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그들이 응답한 이념성향에 조응하는 방향의 정책 선호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각 정책 영역을 가로질러 진보적인 속성의 정책들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세 가지의 정책 영역에 걸쳐 보수적인 속성을 띤 정책들에 대해 보다 높게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림3-2] 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값: 그룹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그래프를 확인한 후, [표3-14]는 각 그룹이 나타내는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무당파 응답자들의 경우, 정치 지식의 정도와 관계없이 그들의 이념성향과 정책선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그룹1, 그룹2). 한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두 그룹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은 이념적 성향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정책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룹3, 그룹4; 모두 $p<0.001$). 그리고 위의 [그림3-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을 지니고 있으면서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은 정책선호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계수값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무당파 응답자는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일관된 선호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와는 달리, 정치적 동기를 지닌 정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정치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이념성향과 정책선호가 조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정도는 인지적 자원을 수반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 보다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14] 정책 일관성 강도: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 기울기 검정

	Coef.	Std. Err.
그룹1: $\beta_1 + \beta_5$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0	0.204	0.112
그룹2: $\beta_1 + \beta_6$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0	0.188	0.182
그룹3: $\beta_1 + \beta_7$ 정치 지식=0, 정당일체감=1	0.464***	0.081
그룹4: β_1 정치 지식=1, 정당일체감=1	0.888***	0.101

*** $p<0.001$ (양측검정)

본 연구가 제시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념 성향에 따라 일관된 정책선호를 추동하는 과정은 인지적 능력과 정치적 동기를 모두 필요로 할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정치 지식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인지가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인지적 능력은 당파성에 의해 활성화 된다. 그리고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서는 정치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념이 정책 선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궁극적으로 일관된 정책 선호가 당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정책 선호의 일관성은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기보다는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적 태도이며,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일관되고 강한 정책 선호는 당파간의 인식의 양극화를 의미하여 이들 사이의 대립의 심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제 5 절 소결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주목하는 많은 연구들은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정책에 대한 선호를 추동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한 편으로, 일군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이 진보-보수의 척도 상에서 자가 보고한 이념 성향이 그들의 정책 태도에 일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단지 소수의 유권자들만이 그들의 이념 성향에 따른 안정적인 정책 선호를 보인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반된 결론은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념 성향과 일관된 정책 태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은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정치 지식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정치적 지식이 높고 보다 세련화 된 유권자들만이 그들의 이념 성향에 조응하는 일관된 정책 선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강하고 일관된 정책 선호가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일관된 정책 선호가 반드시 높은 정치 지식과 높은 세련도 수준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을 지적해 왔다. 그 이유는 유권자의 이념적 견지에서서의 정책 선호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기도 했다.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정치 지식과 세련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던 기존 연구들은 이념과 정책 선호를 합리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데,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속성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은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일관성이 유권자 사이의 대립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강한 일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당파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정치적 동기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partisan)인” 속성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치 지식은 정책들의 스탠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능력일 뿐, 이것이 반드시 일관된 선호를 가지도록 추동하는 것은 아니며, 당파적 유권자들이 편향된(partisan-biased)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일관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장의 분석 결과 주된 발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당파 유권자들에 비해, 특정한 정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 지식 수준이 보다 높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그들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속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정책 선호에 있어서 보다 강하고 일관된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 사이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일체감이 당파적 단서를 제공하고 인식의 선별기제로 작용하여,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당파성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일관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심리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에게서, 그들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관된 정책 선호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이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강하고 일관된 정치적 태도는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속성보다, 당파적인 속성에 기반한 결과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는 인지적이고 합리적인 요인이 아닌, 당파적인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함으로써, 정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과 그로 인한 강한 정책적 선호는 그 집합적 결과물인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판단과 정치적 동기의 영향력,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개별 유권자 수준에서의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그들의 태도의 합이 나타내는 집합적 결과와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제 4 장 이념거리 인식의 당파적 편향

제 1 절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이념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는 신념체계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유권자들은 (특히 인지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경우) 좌-우 혹은 진보-보수로 일차원 상에서 규정되는 추상적인 정향을 통해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거나(Converse 1964), 이념적 정향 혹은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후보 및 정당이 취할 것으로 인식하는 위치 사이의 거리를 통해 선거에서 더 높은 효용을 주는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한다고 알려져 왔다(Downs 1957; Enelow and Hinich 1984). 이렇듯, 이념은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는데, 이념이 일관된 정책적 태도로 개념화되는 경우 혹은 정당 및 후보와의 근접성 차원에서 정의되는지의 경우 모두, 이념이 유권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인식에 개입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이념적 거리로 상정되는 근접성(proximity)을 판단하는 데에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와 같은 당파적인 근간이 놓여 있을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Achen and Bartels 2016; Feldman and Conover 1983; Markus and Converse 1979; Martinez 1988).

이념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이한 관점들은 집합적 차원에서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재편으로 인한 양극화(ideological realignment; 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혹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 Fiorina et al. 2010), 즉 정파적 태도와 이념적 태도의 높은 조응도(congruity)의 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가져온다.

우선, 개별 유권자들에게서 이념거리 인식과 정서적 평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그 집합적인 결과물로서 양극화 혹은 이념과 정파성 간의 분류(partisan sorting)가 있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정당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념적으로 균질적인(ideologically homogeneous) 성향을 띠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양극화 및 당파적 분류는 정파적 유권자 사이의 양극화의 지표로 상정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념 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당 선호의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정파성을 띤 유권자들이 보다 강한 이념적 속성을 나타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이념과 정책 태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그 맥을 같이 하며, 후자는 이념과 정책 태도에서 나타나는 가변성과 이들에게 당파적 편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념 양극화에 주목하는 일부 연구들은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 이념적 거리가 서로 멀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념 양극화를 해석하고 있다(이내영 2011; 송진미 2019). 이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술(description)”한 것일 뿐, 그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유권자 수준에서 그들이 나타내는 정치적 행태에 대한 주목을 요한다. 특히, 정파성과 이념이 맺는 관계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혹은 분류(Fiorina et al. 2010)는 이들의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의 조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정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조응도를 설명하거나(조성대 2007), 혹은 양자간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이성우 2011; 정동준 2018). 그러나 본

연구가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유권자의 이념에 대해 당파적, 정서적 영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념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의 격화와 양극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에서 나타나는 조응도는 이념 인식에 대한 당파적 편향 때문이며, 이것이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양극화를 추동하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둘째,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 등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념적 태도에 있어 당파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의 과정에 보다 강하게 개입하는지가 후속 질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념 거리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 사이의 상대적 거리로 측정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가 간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이념적 거리가 산출될지라도 유권자 자신의 이념적 위치로 측정될 수 있는 이념적 강도에 따라 이들이 가진 정파적 속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은 중도적 유권자들에 비해 보다 강한 정파적 속성을 지닐 것이므로,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정파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얻는다면 당파적 유권자들이 보다 강한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당파성과 이념간의 조응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제 2 절 이념 거리 인식, 당파적 편향, 그리고 양극화

1. 이념 거리 인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성

이념이란 사회의 규범이나 바람직한 질서에 대한 신념의 집합을 의미한다(Denzau and North 1994; Erikson and Tedin 2015). 특히, 컨버스(Converse 1964)의 고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념이란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는 신념체계(belief system)이다. 이러한 신념체계에서 개인은 보다 추상적인 틀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좌-우 혹은 진보-보수로 규정되는 이념적 정향(left-right ideological orientations)이다. 컨버스는 이러한 이념적 정향과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를 연관시키는 것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라고 명명하였는데, 개인의 이념 혹은 신념체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잘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며(Converse 1964; Erikson and Tedin 2015; Lipset 1960; Shils 1968), 정치적으로 세련화 된(sophisticated) 혹은 정치적 지식이 높은 일부의 유권자들에게서만 추상적인 차원의 이념적 정향에 조응하는 일관된 정책 태도(congruent policy attitudes)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Delli Carpini and Keeter 1996; Jacoby 1988; Jacoby 1991; Jacoby 1995; Sniderman et al. 1991). 즉, 이념적 정향으로부터 정책 이슈에 대한 일관된 선호를 이끌어 내는(deduce) 것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능력(cognitive ability)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유권자의 태도와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는데, 특히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념에 기반하여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이론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는 특히 공간모형(spatial model)으로 이론화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유권자가 인식하는 자신과 정당 및 후보자 사이의 이념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권자에게 큰 효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유권자가 자신과 이념

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Downs 1957; Enelow and Hinich 1984; Hinich and Munger 1994). 이렇게 이념적 근접성에 기반한 투표선택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공간모형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 및 각 정당과 후보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이 이념에 기반한 투표 선택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이들을 합리적인 유권자라고 평가한 연구 또한 찾아볼 수 있다(김윤실·윤종빈 2014).

요컨대, 이념적 정향에 근거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유권자의 신념체계에 관한 이론과, 후보 및 정당과의 이념적 거리에 대한 인식을 이론화한 공간모형은 공히 유권자의 “합리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추후 다수의 연구들은 유권자의 합리성과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먼저, 라비노위츠와 맥도널드(Rabinowitz and Macdonald 1989)는 다운스의 근접성 이론에 비판을 제기했는데,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요점은 유권자가 자신과 정당 및 후보들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유권자가 일차원 상의 이념 혹은 구체적인 이슈를 대할 때, 제일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은 진보-보수라는 상반된 입장 중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유권자는 주어진 이슈에 관하여 그 이념적 위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슈를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유권자는 자신과 정당 및 후보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결국 이들이 주장한 방향성 이론은 기존의 근접성 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유권자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후보에 대하여 선호를 표시하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근접성 이론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권자가 정당 혹은 후보자와의 이념적 거리를 편향되게 인식할 가능성 또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

당 및 후보가 자신과 더 가까운 이념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투사효과(projection effect)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의 이념적 위치에 맞추어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설득효과(persuasion effect)로 대별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렇게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혹은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호가 유권자의 합리적 인식에 개입하는 과정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Feldman and Conover 1983; Martinez 1988; Markus and Converse 1979).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를 종속변수로 한 일군의 연구들은 지지하는 정당 혹은 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으로 인해 자신 및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를 왜곡되게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디나스 외(Dinas et al. 2016)는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이슈 근접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정서적인 기반(affective roots)이 있음을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을 통한 인과관계 분석(causal inference) 방법을 통해 발견하였다. 에이큰과 바텔스(Achen and Bartels 2016)는 이슈의 위치에 따라 정당지지를 바꾸는 것보다 정당일체감에 따라 유권자가 자신의 이슈 위치를 합리화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에 대한 선호가 보다 선행하는 요인일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투표선택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들은 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 공간투표(partisan biased spatial voting) 행태, 즉 지지하는 정당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여기는 편향이 반영된 근접투표선택과, 무당파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되지 않은 공간투표(unbiased spatial voting) 행태를 구분하여 보여주었다(Jessee 2010; Simas 2013).

최근,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몇몇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념 거리 인식의 편향성(bias)이 있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관적 이념성향을 일차원의 연속선상에서 측정하고 있는데(김성연 2017), 이들의 연구는 이념거리를 통해 투표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유권자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하는 후보의 이념을 자신의 이념과 보다 가깝게 여기는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투사효과와 설득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강신구 2013; 이내영·허석재 2010; 장기영·박지영 2018).

2. 유권자의 이념과 양극화

이렇듯, 본래 합리적인 인식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이념적 근접성에 유권자의 정서적 요인 등 당파성의 영향력이 개입된다는 것이 밝혀져 온 바,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자신과 후보, 그리고 자신과 정당의 이념적 거리를 인식하는 데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정서적 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유권자 차원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가져오는지 그 미시적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혹은 분류(Fiorina et al. 2010)는 이들의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의 조응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권자들이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맞는 정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조응도를 설명하거나(조성대 2007), 혹은 양자간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이성우 2011; 정동준 2018). 이념 성향에 맞는 정당 선호를 갖게 됨으로써 양자간의 조응도가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의 시각은, 이념이 합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의 이념이 당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념이 전적으로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이해하는 것이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대립의 격화와 양극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정당 선호와 이념 성향에서 나타나는 조응도는 이념 인식에 대한 당파적 편향 때문이며, 이것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추동하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념과 정당 선호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유권자가 자신과 정당, 그리고 자신과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유권자가 인식하는 이념적 거리가 이들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더욱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는 한편, 특정한 정당과 후보와 이념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정서적이고 당파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념적 거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념의 당파적 속성과 “합리화하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유권자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횡단자료(cross-sectional data)의 분석을 통해서서는 이러한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로 인한 내생성(endogeneity)과 그에 따른 과대추정(overestimation)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선거 사전·사후의 패널 조사로 수행된 데이터를 통해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과 정서적 평가의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가 제기하는 첫 번째 쟁점은 이념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당 선호와 이념이 맺고 있는 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양극화가 추동되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 즉 이념거리 인식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둘째, 이념적 근접성에 대한 인식에 정서적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들의 경험적 근거는 상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

이 유권자의 인식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 즉 어떠한 경우에 이념거리 인식에 있어 이러한 당파적 편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가이다. 이는 결국 인지적 판단과 정서적 평가의 관계를 차등화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념 거리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와 정당,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 사이의 상대적 거리로 측정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가 간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이념적 강도, 즉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애덤스 외(Adams et al. 2017)는 중도적인 유권자가 투표선택에 있어 후보들의 이념을 고려하는 정도가 강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에 비해 낮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중도 유권자에 비해 후보의 이념을 보다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위치와 정당의 거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나타내는 이념적 위치의 출발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와 동일한 이념적 위치에 있더라도 그 유권자가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경우와, 보다 강한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는 서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강한 위치의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선호와 높은 충성도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수 있다(Jessee 2010; Tausanovitch and Warshaw 2018). 결국, 이는 동일한 이념적 거리를 나타내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념적 위치에 따라서 판단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와의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이들이 가지는 강한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정서적 호감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은 정당 혹은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을 인식하는 데 정서적 요인에 근거하는 정도가 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념적 근접성이라는 상대적인 위치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이념이 중도적인지 혹은 보다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얻는다면 당파적 유권자들이 보다 강한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정파성과 이념간의 조응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념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요인의 관계를 유권자들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그 집합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과 당파적, 정서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1] t-1 시점에서 후보와 이념적으로 가깝게 인식할수록 t 시점에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1-2] t-1 시점에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t 시점에서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할 것이다.

[가설1-3]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인식하는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와 이념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2-1] 정당과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은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가설2-2] 응답자가 인식하는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에 대한 당파적·정서적 평가의 영향력은 응답자의 이념적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도 이념의 응답자에 비해,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응답자는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할수록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가깝게 인식할 것이다.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위와 같은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조사인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사후 유권자 조사인 “EAI 대선패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두 명의 유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졌으며, 따라서 두 후보에 대한 이념적 거리 및 정서적 평가를 상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연구의 간결성 및 18대 대선과의 비교를 위해 정파적인 대립을 주로 형성했던 두 명의 후보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19대 대통령선거의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이므로 응답자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종단적 속성을 살펴보는 것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권자가 인식하는 자신과 정당들, 그리고 자신과 후보들의 상대적 이념 거리이다. 두 명의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이념적 거리 변수는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여, 상대적인 거리로 측정한다.⁹⁾

$$18\text{대 대선: 정당자 상대적 이념거리}_i = (\text{응답자}_i - \text{민주통합당}_i)^2 - (\text{응답자}_i - \text{새누리당}_i)^2$$

$$\text{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_i = (\text{응답자}_i - \text{문재인}_i)^2 - (\text{응답자}_i - \text{박근혜}_i)^2 \quad 10)$$

$$19\text{대 대선: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_i = (\text{응답자}_i - \text{홍준표}_i)^2 - (\text{응답자}_i - \text{문재인}_i)^2 \quad 11)$$

9) 두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에 대한 상대적인 측정은 2차식(Jessee 2010; Joesten and Stone 2014) 혹은 절댓값(Adams et al. 2017)을 계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가 절댓값을 취하여 조절 변수로 포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그로 인한 추정의 효율성 손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이념적 거리를 2차식으로 구성하였다.

10) 18대 대선 데이터는 주요 정당과 후보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1) 19대 대선 데이터는 주요 후보에 대한 이념적 위치에 대한 문항은 사전·사후 조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문항은

응답자와 후보, 그리고 정당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변수는 0점에서부터 10까지의 연속선상에 응답자가 위치시킨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 이념적 위치 변수들을 활용하여 구성된 종속변수는 -10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음수의 값을 가지면서 절댓값이 커지는 것은 18대 대선의 경우 응답자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19대 대선의 경우 응답자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홍준표 후보에 대해 더 가까운 이념적 거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양수의 값을 가지면서 절댓값이 커지는 것은 18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에게,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에 비해 문재인 후보에게 이념적으로 더 근접한 거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유권자가 인식하는 이념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두 정당, 그리고 두 후보에 대한 상대적 호감도를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한다.

18대 대선: 정당간 상대적 호감도_i = 새누리당 호감도_i - 민주당 호감도_i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_i = 박근혜 호감도_i - 문재인 호감도_i ¹²⁾

19대 대선: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_i = 문재인 호감도_i - 홍준표 호감도_i ¹³⁾

이는 두 주요 정당과 두 후보에 대해 응답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0에서부터 100까지로(18대 대선), 0에서부터 10까지로(19대 대선) 나타내도록 한 문항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박근혜 후보 호감도에서 문재인 후보 호감도의 차이(18대 대선), 그리고 문재인 후보 호감도에서 홍준표 후보 호감도의 차이(19대 대선)를 구한 것이다. 따라서 각 변수는 18

사전 조사에만 포함되어 있어, 19대 대선 데이터를 통해 종단적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경우는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만 종속변수로 포함한다.

12) 18대 대선 데이터는 주요 정당과 후보의 호감도에 대한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3) 19대 대선 데이터는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주요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문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대 대선의 경우 -100에서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19대 대선은 -10에서 +10까지의 범위로 구성된다.¹⁴⁾ 18대 대선에서 -100은 박근혜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가장 큰 값을 의미하며, +100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10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경우를 의미하며, +10은 홍준표 후보에 비해 문재인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값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념 거리에 대한 인식은 두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는 바, 따라서 후보들에 대한 당파적·정서적 태도 또한 상대적인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두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호감도 변수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무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선거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변수와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 변수는 각각 사전조사(t-1) 시점과 사후조사(t) 시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화 하였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인식하는 데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을 차등화 하는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응답자의 이념적 강도를 조작화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 이념의 유권자에 비해 이념적으로 극단에 있는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경향을 더욱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라 상대적 이념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평가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가장 중도의 이념 위치인 5로부터 양 극단의 방향으로 이념적 강도가 커짐에 따라 큰 값을 부여하여 이념적 강도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한다. 따라서 가

14) 라비노위츠와 맥도널드(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그리고 아이엔가 외(Iyengar et al. 2012)에서 정당 호감도 변수로서 미국 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 조사한, 두 정당에 대한 감정 온도계(feeling thermometer ratings)를 사용한 바 있다. 한국 선거 연구의 경우, 오현주 외(2014) 및 장승진(2015)의 연구에서 감정 온도계로 측정한 정당 호감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장 중도적인 이념의 유권자는 0의 값을, 가장 극단적인 이념을 나타내는 유권자는 5의 값을 가지게 된다.

$$\text{응답자의 이념적 강도}_i = |\text{응답자 이념}_i - 5|$$

위에서 조작화 한 이념적 강도 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당간 상대적 호감도×이념적 강도와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이념적 강도라는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적으로 조작화 하였다. 이 밖에도, 유권자의 이념과 관련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정당일체감과, 사회경제적 속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지역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한다. 각 변수의 조작화 방식은 [표4-1]에,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4-2]에 정리되어 있다.

[표4-1] 변수의 조작화 방식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상대적 이념거리(t)	18대: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문재인에 비해 박근혜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박근혜에 비해 문재인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19대: 홍준표에 비해 문재인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문재인에 비해 홍준표에 근접한 이념거리=-100
독립변수	
상대적 후보 호감도(t)	18대: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에 높은 호감도=+100,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에 높은 호감도=-100 문재인에 비해 박근혜에 높은 호감도=+100, 박근혜에 비해 문재인에 높은 호감도=-100 19대: 홍준표에 비해 문재인에 높은 호감도=+10, 문재인에 비해 홍준표에 높은 호감도=-10
상대적 후보 호감도(t-1)	상대적 후보 호감도(t)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화
상대적 이념거리(t-1)	상대적 이념거리(t)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화
이념적 강도	중도=0, 가장 극단적=5
상호작용항	정당호감도×이념강도, 후보호감도×이념강도
통제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18대: 최소 19세, 최대 86세 19대: 최소 19세, 최대 88세
교육수준	18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서열형 변수 19대: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의 서열형 변수
가구소득	18대: 최소 100만원 미만, 최대 800만원 이상의 서열형 변수 19대: 최소 100만원 미만, 최대 1,000만원 이상의 서열형 변수
지역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7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서울)

[표4-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8대	정당간 상대적 이념거리	1,115	-2.636	21.587	-100	100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1,113	-1.659	21.080	-100	100
	정당간 상대적 호감도	1,199	2.316	27.195	-100	100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	1,200	6.181	32.437	-100	100
	응답자 이념강도	1,116	1.258	1.330	0	5
19대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t)	1,103	12.772	33.546	-100	100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t-1)	1,358	8.729	35.010	-100	100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t)	1,152	4.382	4.570	-10	10
	후보간 상대적 호감도(t-1)	1,453	2.969	4.981	-10	10
	응답자 이념강도	1,139	1.529	1.492	0	5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1-1]과 [가설1-2]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지연(cross-lagged)” 변수를 조작화 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였다.¹⁵⁾ 이는 다음의 [모형1] 그리고 [모형2]와 같다.

[모형1]

상대적 이념거리_{it} =

$$\alpha_1 + \beta_1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_{it-1} + \gamma_1 \times \text{상대적 이념거리}_{it-1} + \sum \delta_j \times \text{Control}_{ji} + \varepsilon_{1it}$$

[모형2]

후보자 호감도_{it} =

$$\alpha_2 + \beta_2 \times \text{상대적 이념거리}_{it-1} + \gamma_2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_{it-1} + \sum \delta_k \times \text{Control}_{ki} + \varepsilon_{2it}$$

15) 바텔스(Bartels 2002), 그리고 카시와 레이먼(Carsey and Layman 2006)이 정당 일체감과 이슈에 대한 태도간의 동적(dynamic)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교차-지연(cross-lagged)” 변수를 활용한 모형을 분석한 바 있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핀켈(Finkel 1995)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모형1]과 [모형2]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조사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파적 성격을 갖는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어 온 이념거리 인식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α_1 과 α_2 는 상수(constant)를, 그리고 각 δ_j 와 δ_k 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를 의미하며, ε_{1it} 와 ε_{2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γ_1 과 γ_2 는 이념 변수와 호감도 변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회귀계수이다. [모형1]에서 β_1 은 선거 전 시기($t-1$)의 후보자들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가 선거 후 시기(t)의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착한다(가설1-1). 또한, 이 모형에는 선거 전 시기($t-1$)의 이념거리 인식 변수가 통제되어 있으므로, β_1 은 선거 전 시기($t-1$)에서 선거 후 시기(t)에 이르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당파적·정서적 태도가 이념거리 인식을 “변화”시킨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형2]에서의 β_2 는 선거 전 시기($t-1$)의 이념거리 인식이 선거 후 시기(t)의 후보자 호감도를 “변화”시킨 영향력을 의미하는 회귀계수이다(가설1-2). 이 경우 또한, 선거 전 시기($t-1$)의 후보자 호감도 변수가 통제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와의 정서적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 이념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β_1)와,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β_2)를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인과적 방향성이 어느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가설1-3). 그리고 이후에 정서적 평가가 이념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함에 있어 이러한 역 인과관계로 인한 과대추정(overestimation)의 가능성을 통제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정서적 요인이 이념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3]

상대적 이념거리 (정당, 후보자) =

$$\alpha + \beta_1 \times \text{정당 호감도} + \beta_2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모형4]

상대적 이념거리_t (후보자) =

$$\alpha + \beta_1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_t + \beta_2 \times \text{상대적 이념거리}_{t-1}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모형3]과 [모형4]는 이념적 근접성에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려는 [가설2-1]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모형3]은 횡단데이터이면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이념 위치 및 호감도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18대 대선의 경우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4]는 후보자에 대한 이념 위치 및 호감도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19대 대선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특히 인과관계의 양방향성으로 인한 과대추정의 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위해 종속변수의 선거 전 조사(t-1) 시점의 값을 통제하였다. 이를 통제한 후에도 후보자 호감도가 상대적 이념거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5]과 [모형6]은 응답자의 이념적 강도에 따라, 당파적·정서적 요인이 이념 근접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2]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5]

상대적 이념거리 (정당, 후보자) =

$$\alpha + \beta_1 \times \text{정당 호감도} + \beta_2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 + \beta_3 \times \text{이념강도} + \beta_4 \times \text{정당 호감도} \times \text{이념강도} + \beta_5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 \times \text{이념강도}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모형6]

상대적 이념거리_t (후보자) =

$$\alpha + \beta_1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_t + \beta_2 \times \text{이념강도}_t + \beta_3 \times \text{후보자 호감도}_t \times \text{이념강도}_t + \beta_4 \times \text{상대적 이념거리}_{t-1}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 \varepsilon$$

[모형5]는 18대 대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 제시된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 근접성이 가지는 당파적 기반이 응답자의 이념적 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은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의 회귀계수인 β_4 와 β_5 의 통계적 유의미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19대 대선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형6]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식에 포함되어 있는 β_3 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방향성을 확인한다. [가설2-2]를 지지하는 분석 결과를 얻는다면, 회귀계수들의 선형결합(linear combination)의 영향력은 다음의 [표4-3]에서 정리하는 바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변수들간의 다양한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표4-3] 회귀계수의 해석

		Coef.	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부호(sign)
18대 대선 [모형5]	중도적 위치의 응답자	$\beta_1+0\times\beta_4$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beta_2+0\times\beta_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가장 극단적 위치의 응답자	$\beta_1+5\times\beta_4$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beta_2+5\times\beta_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19대 대선 [모형6]	중도적 위치의 응답자	$\beta_1+0\times\beta_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가장 극단적 위치의 응답자	$\beta_1+5\times\beta_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

제 4 절 분석 결과

1. 교차-지연(cross-lagged) 변수 분석: 19대 대통령선거

[표4-4]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후 시점(t)의 이념거리 인식과 후보자 호감도에 미치는 선거 전 시점(t-1)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이념거리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이전 시점의 호감도 변수와 이전 시점의 이념거리 인식 변수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모두 $p < 0.001$),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 호감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도 이전 시점의 호감도 및 이념거리 인식 변수의 계수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각각 $p < 0.001$, $p < 0.01$).

[표4-4] 이념거리와 호감도의 교차 효과 검증: 19대 대통령선거

	종속변수: 이념거리 _t			종속변수: 후보자호감도 _t		
	Coef.	beta	Std. Err.	Coef.	beta	Std. Err.
후보자호감도 _{t-1}	1.501***	0.216	0.277	0.563***	0.594	0.025
이념거리 _{t-1}	0.302***	0.304	0.033	0.010**	0.070	0.003
더불어민주당	8.651**	0.129	2.985	1.731***	0.188	0.262
자유한국당	-11.573**	-0.114	3.737	-1.767***	-0.127	0.329
국민의당	6.344†	0.056	3.642	0.591†	0.038	0.319
바른정당	-5.255	-0.039	4.064	-0.068	-0.004	0.361
정의당	5.210	0.048	3.712	1.588***	0.105	0.326
성별(남성=1)	-3.574*	-0.053	1.681	-0.638***	-0.069	0.148
연령	-0.025	-0.010	0.073	-0.012†	-0.035	0.006
교육수준	0.273	0.005	1.733	-0.180	-0.022	0.151
가구소득	-0.026	-0.002	0.366	-0.026	-0.014	0.032
부산/울산/경남	-0.507	-0.005	2.531	-0.162	-0.012	0.222
대구/경북	1.754	0.015	3.015	-0.098	-0.006	0.263
광주/전라/전북	-0.897	-0.008	3.022	0.395	0.025	0.268
대전/세종/충청	0.993	0.009	2.819	0.134	0.009	0.248
강원/제주	4.623	0.026	4.416	0.504	0.021	0.384
상수	3.053	-	7.236	2.996***	-	0.635
N	998			1,016		
R-square	0.4083			0.7513		
adj. R-square	0.3986			0.7473		

*** p<0.001,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분석의 주요한 두 변수의 스케일과 표준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의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beta)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호감도 변수와 이념거리 변수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계수들([모형1]과

[모형2]에서의 γ_1 과 γ_2)을 살펴본다. 이전 시점의 이념거리가 현 시점의 이념거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0.304였으며, 이전 시점의 후보자 호감도가 현 시점의 후보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0.594인 것으로 나타나, 당파적 속성을 담고 있는 후보자 호감도 변수가 이념거리 변수에 비해 시간에 따라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 효과의 결과([모형1]과 [모형2]에서의 β_1 과 β_2)를 제시한다. 이전 시기의 후보자 호감도가 현 시기의 이념거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0.216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이전 시기의 이념거리 변수가 현 시점의 후보자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0.070이었다. 다시 말하면,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후보와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인식하게 되는 정도가 0.216만큼이라면,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 0.070만큼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본 연구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이념적 근접성과 정서적 호감도에는 양 방향의 인과적 관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념적 거리가 가까운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에 대해 더 가까운 이념적 거리를 인식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에 대한 이념적 거리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식 안에는 상당한 부분 유권자의 당파적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컨대,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에 대한 지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정파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자신의 이념을 조정하는 당파적 편향의 모습을 더 크게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념 성향과 당파성의 조응도가 높아지는 양극화 혹은 당파적 분류(partisan sorting) 현상의 기저에는 이러한 당파적 편향이 놓여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2.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후보자와의 이념적 거리 인식에 대해 정파적 근간이 있음을 보이고자 이하에서는 [모형3]과 [모형4]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4-5]와 [그림4-1], 그리고 [표4-6]과 [그림4-2]를 통해 살펴본다.

[표4-5]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OLS 회귀분석: 18대 대통령선거

	종속변수: 정당간 상대적 이념거리		종속변수: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대적 정당 호감도	0.242***	0.035	0.141***	0.034
상대적 후보 호감도	0.129***	0.028	0.157***	0.028
새누리당	0.700	1.540	1.933	1.523
민주통합당	-1.547	1.733	-3.975*	1.715
성별(남성=1)	-1.162	1.106	-1.191	1.094
연령	0.155**	0.048	0.148**	0.047
교육수준	-0.324	0.553	-0.271	0.547
가구소득	0.327	0.360	-0.470	0.356
인천/경기	-0.679	1.631	-2.081	1.615
대전/세종/충청	-3.744†	2.077	-4.704*	2.053
광주/전라/전북	-4.194*	2.126	-5.160*	2.102
대구/경북	-5.212*	2.116	-2.901	2.093
부산/울산/경남	-2.618	1.770	-2.351	1.749
강원/제주	2.026	2.845	0.055	2.812
상수	-8.252†	4.224	-3.383	4.182
N	1,097		1,095	
R-square	0.3007		0.2852	
adj. R-square	0.2917		0.2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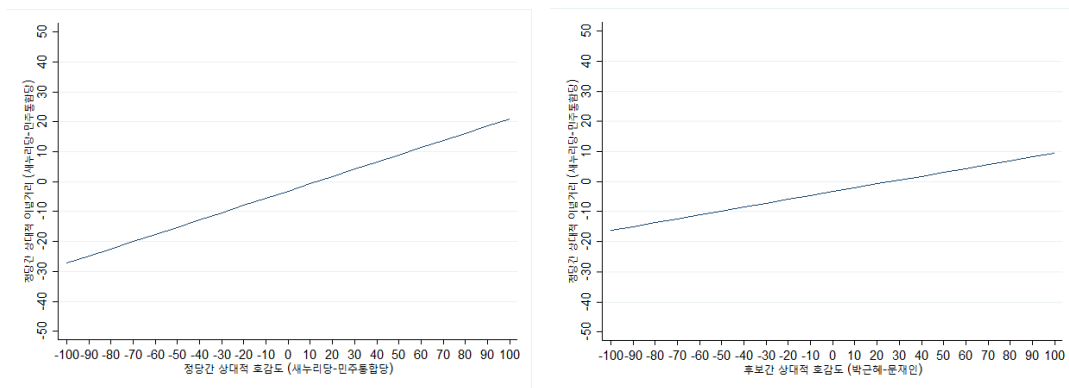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양측검정)

[표4-5]에서 볼 수 있듯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이념거리와 후보에 대한 이념거리에 정당 호감도와 후보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공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 호감도와 후보 호감도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서로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수의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p < 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각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다음의 [그림4-1]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4-1]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8대 대통령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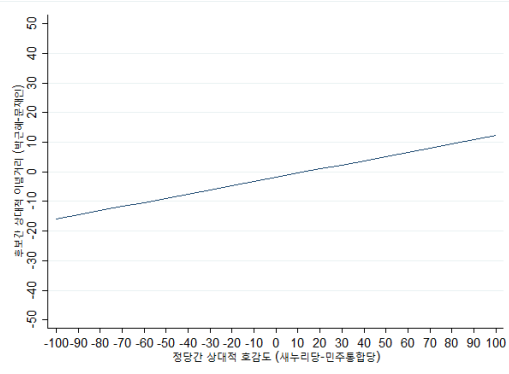
<18대 대통령선거: 정당 이념거리>

<18대 대통령선거: 정당 이념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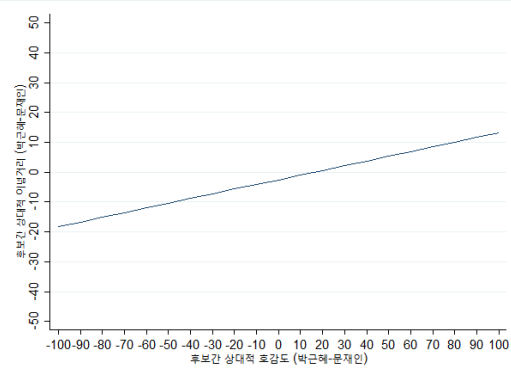


16) 공변하는 바가 큰 변수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대표되는 추정의 효율성(efficiency)에만 관여하는 문제일 뿐, OLS 추정방식(estimation)의 주요 가정들과 관계되는 추정의 불편의성(unbiasedness)과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다(Wooldridge 2016).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추정치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표준오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수값이 영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오히려 이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확고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한편, [표4-6]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조사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이 분석에서는 특히 종속변수의 선거 전 시기($t-1$)의 값을 통제함으로써, 역 인과관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과대추정(overestimation)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선거 전 시기($t-1$)의 이념거리 변수를 통제한 경우, 내생성이 다소 제거됨으로써 통제하지 않은 경우보다 계수값이 감소하였으나(통제 전: 3.459, 통제 후: 2.703), 이 계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01$),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다음의 [그림4-2]의 그래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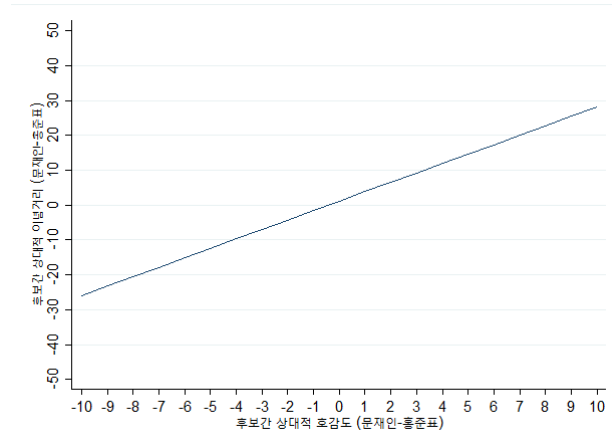
[표4-6]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OLS 회귀분석: 19대 대통령선거

종속변수: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대적 후보 호감도	3.459***	0.269	2.703***	0.282
더불어민주당	7.376*	2.975	3.795	2.947
자유한국당	-10.006**	3.667	-7.781*	3.618
국민의당	7.987*	3.537	4.545	3.524
바른정당	-2.803	4.072	-4.289	3.953
정의당	6.082†	3.667	0.966	3.636
성별(남성=1)	-2.704	1.658	-2.014	1.627
연령	0.003	0.071	0.032	0.070
교육수준	1.366	1.668	0.742	1.664
가구소득	-0.072	0.363	0.010	0.353
인천/경기	-3.769	2.292	-2.868	2.228
대전/세종/충청	-1.505	3.090	-1.115	3.001
광주/전라/전북	-3.303	3.241	-4.023	3.187
대구/경북	-1.888	3.235	0.323	3.186
부산/울산/경남	-1.316	2.858	-1.877	2.773
강원/제주	-0.861	4.625	1.007	4.423
상대적 이념거리(t-1)	-	-	0.265***	0.032
상수	-5.889	7.228	-3.851	7.129
N	1,053		1,001	
R-square	0.3826		0.4388	
adj. R-square	0.3730		0.4291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양측검정)

[그림4-2]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9대 대통령선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위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합리적일 것을 전제로 했던 이념 근접성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당파적·정서적 요인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정당과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이념거리 인식과 호감도의 관계에서 방향성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당 및 후보에 대해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인식하는 합리화하는 과정이,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합리적인 과정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파성과 이념 성향의 조응도가 높아지는 과정은 이러한 당파적 편향에 근거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자신과 정당, 자신과 후보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가 나타내는 차이를 고려하여, 이념거리와 호감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념 거리를 인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당파성의 영향력이 응답자 자신의 이념적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표4-7]과 [그림4-3], 그리고 [표4-8]과 [그림4-4]는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가 중도적인지 혹은 상대적으로 극단적인지를 구분한 집단에 따라, 두 후보에 대한 당파적·정서적 평가가 이념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4-7] 응답자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 효과: 18대 대통령선거

	종속변수: 정당간 상대적 이념거리		종속변수: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대적 정당 호감도	-0.014	0.040	-0.058	0.040
상대적 후보 호감도	-0.004	0.032	-0.018	0.032
이념강도	-0.699†	0.373	-1.118**	0.370
정당호감도×이념강도	0.131***	0.018	0.093***	0.018
후보호감도×이념강도	0.092***	0.016	0.123***	0.016
새누리당	1.745	1.322	2.963*	1.308
민주통합당	-1.416	1.483	-3.835**	1.467
성별(남성=1)	-0.860	0.949	-0.764	0.938
연령	0.114**	0.041	0.103*	0.041
교육수준	-0.255	0.474	-0.314	0.470
가구소득	0.326	0.308	-0.492	0.305
인천/경기	-0.371	1.394	-1.944	1.381
대전/세종/충청	-0.746	1.782	-1.896	1.762
광주/전라/전북	-4.032*	1.818	-5.016*	1.797
대구/경북	-3.475†	1.813	-1.090	1.793
부산/울산/경남	-1.067	1.515	-0.877	1.497
강원/제주	2.755	2.442	1.187	2.414
상수	-7.559*	3.635	-1.372	3.601
N	1,097		1,095	
R-square	0.4905		0.4792	
adj. R-square	0.4824		0.4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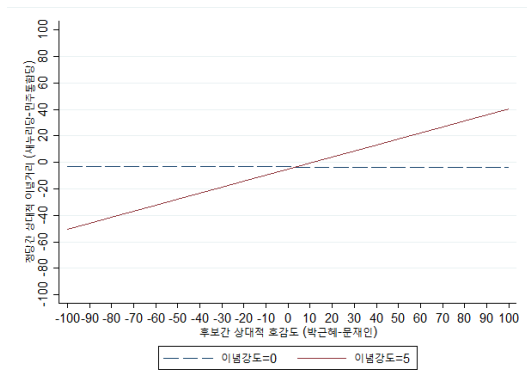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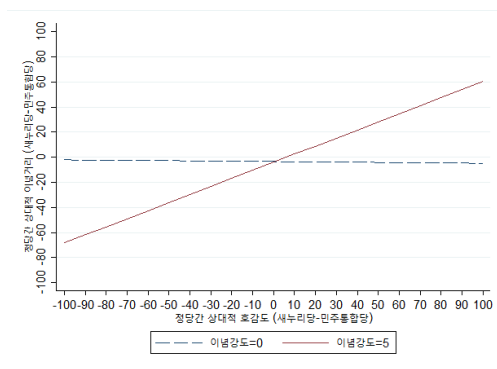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먼저, 18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 [표4-7]을 보면, 두 종속변수에 대해 모두 정당 호감도와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후보 호감도와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양수(+)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모두 $p < 0.001$),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당파적·정서적 평가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단의 [그림4-3]과 같다.

[그림4-3]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8대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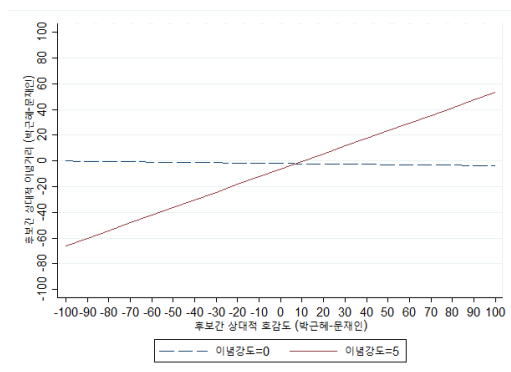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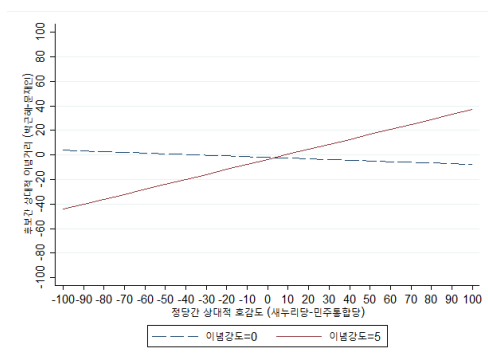
<18대 대통령선거: 정당 이념거리>

<18대 대통령선거: 정당 이념거리>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응답자의 이념이 가장 중도적인 경우, 즉 이념 강도가 가장 약한 경우 (대시선)에는 그래프가 기울기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가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을 인식함에 있어 당파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응답자가 가장 강한 이념적 위치에 있는 경우, 즉 이념 강도가 가장 강한 경우 (실선)에는 그래프가 현저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응답자가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을 인식함에 있어 당파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에 근거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4-8]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이념 근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4-8] 응답자 이념 강도의 상호작용 효과: 19대 대통령선거

종속변수: 후보간 상대적 이념거리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대적 후보 호감도	1.072**	0.318	0.767*	0.318
이념강도	-2.354***	0.646	-2.508***	0.646
후보호감도×이념강도	1.184***	0.097	1.097***	0.098
더불어민주당	7.130*	2.785	4.688†	2.786
자유한국당	-5.082	3.555	-3.041	3.560
국민의당	7.602*	3.291	4.757	3.310
바른정당	-4.636	3.791	-5.564	3.717
정의당	7.320*	3.422	3.653	3.431
성별(남성=1)	-2.246	1.544	-1.488	1.530
연령	-0.019	0.066	0.004	0.066
교육수준	2.166	1.552	1.723	1.566
가구소득	-0.182	0.338	-0.129	0.333
인천/경기	-3.701†	2.131	-3.075	2.093
대전/세종/충청	-1.781	2.874	-1.451	2.818
광주/전라/전북	-1.261	3.018	-2.521	2.997
대구/경북	-1.029	3.009	0.800	2.992
부산/울산/경남	-1.197	2.658	-1.530	2.605
강원/제주	-4.721	4.318	-3.267	4.176
상대적 이념거리(t-1)	-	-	0.185***	0.030
상수	-0.163	6.774	0.846	6.748
N	1,053		1,001	
R-square	0.4671		0.5059	
adj. R-square	0.4579		0.4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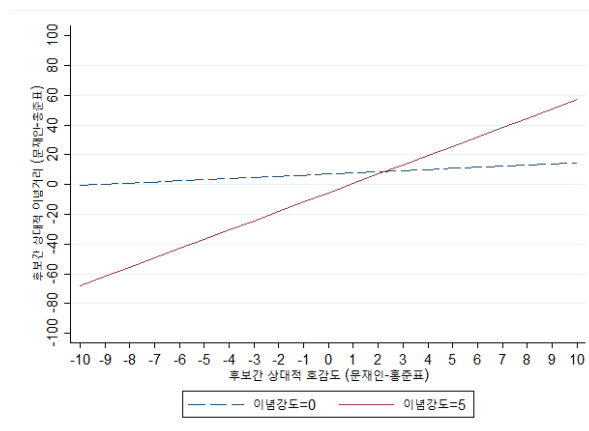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양측검정)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선거 전 시점(t-1)의 값을 통제하였음에도, 후보호감도×이념강도의 상호작용항이 여전히 양수(+)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냈다($p < 0.001$). 이는 18대

대통령선거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응답자의 이념적 위치에 따라 호감도가 이념거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등화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하단의 [그림4-4]와 같다.

[그림4-4] 이념거리 인식에 대한 예측값: 19대 대선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념거리>



가장 중도적인 이념적 위치에서부터 두 후보에 대한 이념적 거리를 계산하는 응답자들의 그래프(대시선)는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은 두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 호감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념적으로 가장 극단의 위치에서부터 두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계산하는 응답자들, 즉 응답자의 이념 강도가 가장 큰 경우(실선)에는 그래프의 변화량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이념 위치에 있는 응답자들은 정서적인 호감도가 높을 때 정당 및 후보와의 이념적 근접성을 가깝게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궁극적으로, 유권자는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이념적 근접성을 인식하는 과정에 호감도로 대표되는 당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온

가운데, 유권자의 속성에 따라 인식에 개입하는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이 서로 차등화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념적으로 중도의 위치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념적 거리를 인식하는 바가 크지 않지만, 극단의 이념적 위치에 있는 응답자들은 그들의 강한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판단함에 있어 당파적이고 정서적인 기반에 의존하는 정도가 확연히 크다는 것이다.

제 5 절 소결

본 연구는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와 정당 및 후보의 이념적 위치와의 거리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당파적·정서적 요인이 개입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념거리 인식과 당파적·정서적 요인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당파성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과정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이념과 당파성의 방향성 문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념이 당파적 고려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포착하는 것은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의 조응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정파적 갈등의 심화와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되어 왔던 정당 및 후보자와의 이념거리 인식과, 당파적·정서적 속성을 띠고 있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보다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인식하게 되는지, 혹은 이념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선거전·선거후 조사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양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차-지연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정파적 속성을 띤 호감도 변수가 보다 안정적인 반면, 이념거리 인식 변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인과관계의 양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두 가능한 가운데,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는 합리적인 과정보다,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이념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당파적 편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위의 결과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는 인과관계의 양 방향성과 내생성으로 인한 과대추정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선거 전 시기의 종속변수의 값을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당파적·정서적 요인은 응답자의

이념거리 인식에 여전히 통계적으로 강하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자신의 이념적 위치가 중도적인지 혹은 극단적인지에 따라, 그들의 판단에 개입하는 정서적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중도적인 유권자의 경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정파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후보들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극단적인 이념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들의 강한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지닐수록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인식했다. 본 장의 결과는 유권자의 인식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의 이념적 판단에 당파적·정서적 요인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에 따라 이들의 인식과 당파성의 관계가 나타내는 강도는 차등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유권자의 당파성은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권자의 이념 인식은 당파적 편향성을 띤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파간 갈등과 양극화는 당파성과 이념 성향 사이의 조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해되고 있는데, 양극화에 대한 이론들은 유권자들이 그들의 이념적 성향에 조응하는 정당을 찾아가게 됨으로써 이러한 조응도가 높아져 각 정당이 이념적으로 균질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하는 기존 연구들은 당파성과 이념 성향 간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의 태도에 주목하였고, 이념 성향 또한 이러한 당파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성이 당파성과 이념 성향 간의 조응

도를 증가시켜 그 집합적인 결과물로서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제 5 장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제 1 절 유권자의 정부 신뢰와 당파적 편향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던 유권자의 정책 선호와 이념 성향은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유권자의 정책 선호는 그들의 당파성에 조응하는 방향으로의 일관성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당파적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 선호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발견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또한, 집합적 차원에서 당파성과 이념 성향의 조응도가 높아짐으로써 귀결되는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닌 상대적 당파성에 따라 상대적 이념 거리를 인식하게 되는 미시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러한 당파적 유권자들은 선거로 당선된 정부 여당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대의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신뢰는 정부의 정책적 성과 혹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등에 대한 평가의 총체이므로(Hetherington 1998; Miller 1974; Citrin 1974), 특히 임기의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회고적 투표 선택(retrospective voting)을 추동하는 기능을 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회고적 투표는 유권자들이 현직자의 성과에 대한 상벌로 작동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는데(Fiorina 1981; Key

1966),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거가 정치권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선호와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Fearon 1999; Ferejohn 1986). 따라서 다수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경험적 분석들을 수행해 왔다(금현섭·백승주 2015; 김지영·김경아 2018; 박종민·배정현 2016; 신상준·이숙종 2016; 이우진·하솔잎 2016; 이지호·이현우 2015; 전대성 외 2013 등).

그런데 본 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정부 신뢰와 그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이 당파적 편향성을 떨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합적인 유권자들의 분포 상에서는 여전히 무당파 유권자와 중도 이념의 유권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유권자 차원의 대립이 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은 양극화를 정파적 유권자들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으로 개념화 하고 있으며, 특히 정파적 유권자들이 서로 상대 정파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을 나타냄으로써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들이 있다(Abramowitz and Webster 2016; Iyengar et al. 2012; Mason 2015).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반감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신뢰와 관련된 질문을 촉발한다. 즉, 상대 정파에 대한 반감은 특히 특정 유권자의 이념적·정파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부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부 신뢰는 제도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인식되기보다는 현직 정권에 대한 평가로서 이 자체가 이념적이고 정파적인 속성을 띤다(Keele 2005). 정부와의 당파적 성향이 일치하는 유권자들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보다 높게 형성하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와는 다른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은 정권에 대해 낮은 신뢰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당파적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부 신뢰의 차이는 당파적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닌 정치적 성향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더욱 심화되어, 정부 정책의 성과 등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에 관계없이 정파성에 근거하여 정부를 평가하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형성하게 되면서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당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의 태도가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회고적 투표의 과정에서,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은 그들의 정당 선호가 선행적으로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투표 선택에 대해 당파성이 정부 신뢰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거나, 혹은 정부 신뢰의 정도에 관계없이 자신의 당파적 선호에 일치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되어, 투표 선택에 미치는 정부 신뢰의 영향력이 유권자들에게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직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유리된 채 유권자의 당파성에 주로 근거한 투표 선택은 회고적 투표가 가진 기능을 퇴색시켜, 이 또한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요컨대, 앞서 살펴본 정책 선호와 이념 성향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해 보내는 유권자들의 신뢰 혹은 불신 또한 유권자들의 당파성에 따라 양극화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신뢰는 유권자의 양극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당파성과 현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결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집합적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양극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은 정부 신뢰가 가지는 정파적 속성을 포착하고자,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신뢰가 높을 경우 여당에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회고적 투표 행태는 정파성을 가지지 않는 유권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다. 유권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당파성에 근거하여 형성된다면, 특히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에게서는 정부 신뢰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투표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의 당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혹은 그러한 정부신뢰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정파성이 정부 신뢰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장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가 지방선거에서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당파성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파적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태도와 행태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정부 신뢰에 따른 회고적 투표와 당파적 편향

1. 대의민주주의에서의 회고적 투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는 유권자가 국가의 경제적 성과 혹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Fiorina 1981; Key 1966). 일찍이 키(Key 1966)는 집합 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회고적 투표 행태 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피오리나(Fiorina 1981)는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이는 이러한 회고적 투표행태를 밝혀낸 바 있다.

이러한 회고적 투표는 유권자가 현직자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과 처벌(reward and punishment)”을 가하는 “제재 모델(sanctioning model)”을 그 바탕으로 한다(Barro 1973; Ferejohn 1986; Fiorina 1981; Key 1966; Kinder and Kiewiet 1979). 구체적으로, 현직 정부 여당의 경제적 성과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여당 및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이는 유권자들이 여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직 정부 여당의 부정적인 실적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여당에 반하는 투표 선택, 즉 야당 및 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회고적 평가를 기준으로 한 투표 선택은 현직자의 성과에 대한 상벌의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정당과 정치 엘리트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의 선호와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유인을 가지도록 한다(Fearon 1999; Ferejohn 1986). 따라서 회고적 투표는 선거를 통한 대

의민주주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제가 된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혹은 한국의 지방선거(local election)와 같이 현 정부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정치적 책임의 소재와 귀속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어 정부 여당의 공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의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고적 투표행태가 보다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Abramowitz 1985; Arceneaux 2005; Born 1990; Feigert and Norris 1990; Kernell 1977; Mann and Wolfinger 1980; Piereson 1975; Tufte 1975). 이에 더하여, 중간선거는 국가의 중앙 권력의 소재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므로, 유권자들은 투표 선택에 있어 가지게 되는 부담이 비교적 적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표 선택이 이루어지기에 보다 용이하다(Buchanan and Tullock 1962; 강원택 2004). 이렇듯,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표 선택을 현저하게 이끌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같은 기능을 한다. 특히, 한국 선거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상정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더욱 명확하게 관찰될 수 있다(강신구 2014). 이에 미국의 중간선거와 같이, 한국에서 또한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처럼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회고적 평가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추동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힌 다수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가상준 2008; 강원택 1999; 강원택 2004; 강원택 2008; 김진하 2010; 배은진·엄기홍 2016; 오현주 외 2014; 이내영·정한울 2007; 조진만 2005; 조진만 외 2006).

이러한 회고적 투표행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bramowitz 1985; Fiorina 1981; Kinder and Kiewiet 1981; Kramer 1971; Lewis-Beck and

Stegmaier 2000; Norpoth 1996). 이에 더하여, 국회의원선거 및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투표 선택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 또한 발견된다(Abramowitz 1985; Born 1990; Cover 1986; Kernell 1977). 위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표 선택이 이루어지기에 보다 용이한 중간선거 혹은 지방선거에서는 현직자의 성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고적 평가가 투표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부 신뢰와 회고적 투표

한편, 본 장에서는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선택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서 정부 신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부 신뢰가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헤더링튼(Hetherington 1998)은 정부의 성과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정부 신뢰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밀러(Miller 1974)는 정부의 운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 시행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시트린(Citrin 1974), 그리고 시트린과 그린(Citrin and Green 1986)의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 신뢰의 결정요인으로서 고려되는 그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존 연구들은 정부 신뢰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로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정부 신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와 관련되는 동시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대, 정부 신뢰는 유권자들의 당파성 혹은 이념을 넘어서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권자가 자신과 정파적, 이념적 성향이 상이한 정부에 대해서도 그들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Hetherington and Rudolph 2015; 하상웅 2016). 이에 헤더링튼과 루돌프(Hetherington and Rudolph 2015)는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념적 희생(ideological sacrifice)”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정부 신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초당파적 합의를 촉진하며, 나아가 국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의 경우 또한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이념적 희생의 태도가 발견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금현섭·백승주(2010)의 연구는 정부 신뢰가 유권자의 이념 성향을 넘어서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부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직 정부가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부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책임을 지는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 Schattschneider 1958)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가지는 정부 신뢰는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 반면, 정부 불신은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신뢰는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 회고적 투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직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높은 정부 신뢰를 가진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높은 확률로 여당 소속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며, 정부 불신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부 여당에 반하는 선택, 즉 야당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헤더링튼(Hetherington 1999)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며, 그 이유로 정부 신뢰가 일종의 회고적 평가(simple retrospective evaluation)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정치 과정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인 동시에,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고적 투표는 정부로 하여금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국정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유인을 가지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 신뢰는 정치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헤더링튼(Hetherington 1999)의 연구를 예외로 한 채,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이 아니라 투표 참여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주로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투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Almond and Verba 1963; Cox 2003). 이렇게 정부 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정부 신뢰를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규범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들은 정부 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¹⁷⁾ 밀러 외(Miller et al. 1979)와 콕스(Cox 2003)는 미국에서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트린(Citrin 1974),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은 정부 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팀폰(Timpone 1998)은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높아지면 이들은 오히려 투표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덜 인식하게 되어 투표 참여가 저해된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정부 신뢰의 영향력에 대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본 장은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

17) 앞서 언급한 헤더링튼(Hetherington 1999)의 연구는 정부 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각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가 아닌 투표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여 정부 신뢰의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에게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개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직 정부에 대한 평가와 보다 가깝기 때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일, 정부 신뢰가 제도에 대한 신뢰라면 기존 연구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 정치 참여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반면, 정부 신뢰가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는 경우는 선거에서 경쟁하는 모든 정당을 포괄하여 특정한 선택의 대상을 나타내지 않아 정파적 방향성이 희석된 투표 참여에 대해서 정부 신뢰의 영향력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쇄됨으로써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신뢰가 현직 정부 여당을 그 대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정부 신뢰가 증가하면 여당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미칠 것인 반면, 정부 신뢰가 감소할수록 여당에 대해 반하는 정치적 태도, 즉 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여당과 야당으로 그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투표 선택에서 그 영향력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본 장은 정부 신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투표 선택을 결정 짓도록 하는, 즉 회고적 투표 행태를 이끌어내어 상벌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인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요컨대, 정부 신뢰는 현직의 정부 여당의 공과(功過)에 대한 하나의 평가 지표가 되는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장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가 임기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정부라는 대상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의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본 장에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서로 다른 정파가 집권하는 중에 치러진 선거이므로, 회고적 투표 행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좋은 비교의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졌으며,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후 1년여 만에 치러진 선거로서, 서로 다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가

져오는 차이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장은 정부 신뢰가 단순히 제도에 대한 신뢰, 따라서 탈정치적이고 정파성이 희석된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유권자의 태도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선택에 미치는 정부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장은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3.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장은 정부 신뢰가 보다 명확한 대상을 가지는 개념인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즉, 유권자가 정부를 보다 신뢰할수록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임을 보이고자 하며, 정부 신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이므로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회고적 투표 선택과 보다 조응하는 정치적 태도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회고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국가 경제의 성과 및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회고적 투표 행태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정부 및 정당들로 하여금 반응성과 책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정부 여당은 유권자들의 초당파적 신뢰를 얻기 위해 국정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러한 회고적 투표의 과정은 합리적인 유권자와 함께 객관적인 정치적 정보가 주어지는 환경을 그 전제로 한다(길정아·하상웅 2019).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 신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 신

뢰가 이렇게 정부 여당을 그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는 인식이라면, 유권자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결과가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political predispositions)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와 관련하여 그들의 당파성과 같은 정치적 정향에 따른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부 신뢰와 투표 선택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부 신뢰가 편향될 가능성을 살펴보면,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우선적으로 당파성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혹은 당파성이 정부 신뢰보다 우세한 영향력을 가질 경우,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유권자에게서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 신뢰 및 회고적 투표 선택과 관련하여 당파적 편향의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과 선택에 있어 자신의 정당 선호에 따른 당파적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미 기존 연구에서 밝혀져 왔고(Bartels 2002; Goren 2002; Marsh and Tilley 2010; Rudolph 2003; 길정아·하상웅 2019; 김성연 2015; 오현주 외 2014), 특히 이러한 정부 신뢰 또한 당파성을 띠는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키일(Keele 2005)은 당파적인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일 때 보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였다. 루돌프와 에반스(Rudolph and Evans 2005)는 정부 신뢰가 정부의 지출을 지지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개입하여 그 영향이 유권자마다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하상웅(2016)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부에 보내는 신뢰는 증가하였으나,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행정부를 이끌 때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 및 성과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념과 정당을 초월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정파적 갈등이 심해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두고 유권자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연 재해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 정부의 책임성과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사안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에 당파적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Achen and Bartels 2016; Healy et al. 2014; Malhotra 2008; Malhotra and Kuo 2009). 이는 결국, 특히 당파성을 띤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zing voters; ; Achen and Bartels 2016; Lodge and Taber 2013)”의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대해 정부 신뢰가 회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가운데,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정부 신뢰를 편향되게 가짐으로써 이러한 관계는 유권자들에게 있어 차등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띤다는 것이다. 정당에 대한 선호와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당파적 편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택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유권자 차원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에서 나타나는 회고적 투표 행태는 정치권의 공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반영한다. 합리적인 유권자들을 상정한 정치적 환경 하에서 정부 여당의 공과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회고적 투표의 과정이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적인 원리와 상응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작동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길정아·하상응 2019). 그러나 당파적 태도에 따라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에게 있어, 정부 신뢰는 이들의 당파적 태도에 의해 선행적으로 결정되거나, 혹은 정부의 성과에 대해 가지게 되는 평가에 관계없이 이들은 선거에서 자신의 당파

성에 일치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유권자의 당파성에 따라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편향되게 형성된다는 것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파가 집권했을 때 유권자들은 정부의 성과에 관계 없이 무조건적인 불신을 형성하여 유권자들 사이의 당파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가져온다.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이나 그 성과, 혹은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정치적 갈등의 책임 소재에 대한 평가로서의 회고적 투표 과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정부 신뢰와 회고적 투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은 유권자들 사이의 당파적 대립을 양극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본 장은 유권자가 정부를 보다 신뢰할수록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할 것임을 먼저 논증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유권자의 정당 선호, 특히 정당 호감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¹⁸⁾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에 대한 당파적 선호가 무차별한 유권자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정부를 신뢰할수록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할 것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 신뢰가 높은 유권자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회고적 투표 행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권자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된 선호를 가지는 경우,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거나, 혹은 정부 신뢰의 정도에 관계 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 후보를 높은 확률로 선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요컨대, 정부 신뢰와 투표 선택의 관계, 그리고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들의 정당 호감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정부 신뢰가 지닌 정치적 속성, 나아가 정부 신뢰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포착하게 함으로써, 정부 신뢰와 회고적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유권자의 양극화의 메커니즘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8) 오현주 외(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태도로서 정당일체감보다 정당 호감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으로 인한 회고적 평가의 차별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 호감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본 장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신뢰와 영향력이 응답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정부 신뢰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증할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응답자의 정부 신뢰가 증가할수록,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2] 여당과 야당에 대해 무차별한 선호를 가진 응답자들은, 지방선거에서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가설3] 여당이나 야당에 대한 편향적 선호가 강할수록, 지방선거에서 정부 신뢰가 여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다.

제 3 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위에 제시한 연구 질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2018년 지방선거 사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 후보 선택이다.¹⁹⁾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양당을 중심으로 한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었으므로, 새누리당 소속 후보=1,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0으로 코딩하였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한 두 개의 정당과 기타 정당이 경쟁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1,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2, 그리고 기타 후보=3으로 값을 부여하여,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구성된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독립변수는 정부 신뢰로, 응답자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2014년의 조사에서는 신뢰가 매우 낮은 0점부터 보통인 50점을 거쳐 가장 높은 신뢰를 의미하는 100점의 범위로 구성되었다. 2018년의 조사에서 정부 신뢰 변수는 가장 낮은 0점부터 보통인 5점을 거쳐 가장 높은 10점의 범위를 갖는다. 다음으로,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서 정당 호감도를 조작화 하였는데, 이는 주요 정당에 대해 응답자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를 가장 부정적인 0에서부터 가장 긍정적인 100까지로 나타내도록 한 감정 온도계(feeling thermometer)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두 개의 정당이 경쟁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호감도 변수로서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감도의 편차를 구하여, -100점에서부터 +10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된다. 다수의

19)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선출하는 다수의 투표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치적 중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오현주 외(2014)와 배은진·엄기홍(2016) 또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정당이 경쟁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한 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문항을 통해 세 개의 정당 호감도 변수를 측정하였으며, 각 정당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경우는 0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경우 50점,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호감도를 가진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²⁰⁾ 이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 신뢰와 정당 호감도 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을 추가적으로 조작화 하였다. 따라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는 정부 신뢰×정당 호감도 편차라는 한 개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되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부 신뢰×더불어민주당 호감도, 정부 신뢰×자유한국당 호감도, 그리고 정부 신뢰×바른미래당 호감도 세 개의 상호작용항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2014년 지방선거), 지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2018년 지방선거),²¹⁾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일체감(2014년: 3개의 가변수, 2018년: 4개의 가변수)과 이념 성향(3개의 가변수),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역(7개의 가변수)이라는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고, 이들은 경험적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코딩하였다. 각 변수의 조작화 방식은 [표5-1]과 [표5-2]에,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은 [표5-3] 및 [표5-4]에 제시하였다.

20) 2018년 지방선거 데이터에는 이 세 정당에 대한 호감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1) 지방선거에서 회고적 투표행태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서 지난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배은진·엄기홍 2016)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오현주 외 2014)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2014년 설문조사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문항만이, 2018년 설문조사의 경우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문항만이 포함되어 있다.

[표5-1] 변수의 조작화 방식: 2014년 지방선거

주요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선택	새누리당 후보=1, 새정치민주연합 후보=0
독립변수	
정부신뢰	가장 낮은 신뢰=0, 보통=50, 가장 높은 신뢰=100
정당 호감도 편차	새누리당 대비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높은 호감도=-100, 무차별=0, 새정치민주연합 대비 새누리당에 가장 높은 호감도=+100
상호작용항	정부신뢰×정당호감도
통제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2, 대체로 잘하고 있다=3, 매우 잘하고 있다=4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일체감, 무당파 3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무당파)
이념성향	진보 이념, 중도, 보수 이념 3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중도)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최소 19세, 최대 85세
교육수준	무학=0,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전문대학 졸업=4, 4년제 대학교 졸업=5, 석사 졸업=6, 박사 졸업=7
가구소득	최소 200만원 미만, 최대 850만원 이상의 순서형 범주 변수
거주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제주 7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서울)

[표5-2] 변수의 조작화 방식: 2018년 지방선거

주요 변수	조작화
종속변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선택	더불어민주당 후보=1, 자유한국당 후보=2, 기타정당 및 무소속 후보=3
독립변수	
정부 신뢰	매우 낮음=0, 보통=5, 매우 높음=10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가장 낮은 호감도=0, 가장 높은 호감도=100
자유한국당 호감도	가장 낮은 호감도=0, 가장 높은 호감도=100
바른미래당 호감도	가장 낮은 호감도=0, 가장 높은 호감도=100
상호작용항	정부 신뢰×더불어민주당 호감도, 정부 신뢰×자유한국당, 정부 신뢰×바른미래당 3개의 상호작용항
통제변수	
지난 1년간의 국가경제 평가	나빠졌다=1, 이전과 비슷하다=2, 좋아졌다=3
정당일체감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기타 정당일체감, 무당파 4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무당파)
이념성향	진보 이념, 중도, 보수 이념 3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중도)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최소 19세, 최대 85세
교육수준	무학=1, 초등학교 졸업=2, 중학교 졸업=3, 고등학교 졸업=4, 대학교 졸업=5, 대학원 졸업=6
가구소득	최소 100만원 미만, 최대 1,000만원 이상의 범주형 변수
거주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제주 7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서울)

[표5-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014년 지방선거

주요 변수	사례수	평균(점)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투표선택	849	100.00	-	-	-
새누리당 후보	473	55.71	-	-	-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376	44.29	-	-	-
정부 신뢰	1,209	45.51	20.41	100	0
정당 호감도 편차	1,208	4.73	31.55	100	-100

[표5-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2018년 지방선거

주요 변수	사례수	평균(점)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투표선택	2,377	100.00	-	-	-
더불어민주당 후보	1,521	63.99	-	-	-
자유한국당 후보	610	25.66	-	-	-
기타 후보	246	10.35	-	-	-
정부 신뢰	3,006	4.80	2.18	10	0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3,006	48.26	25.91	100	0
자유한국당 호감도	3,006	19.34	23.17	100	0
바른미래당 호감도	3,006	28.82	22.38	100	0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이며, 2014년의 경우 2개의 범주, 2018년의 경우는 3개의 범주를 가지기 때문에 각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유권자의 정당 호감도가 가지는 상호작용 효과를 포착하기 위하여 분석 모형에 위에서 조작화 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2014년 지방선거]

$$\ln\left(\frac{p(y=\text{새누리당 후보 선택})}{1-p(y=\text{새누리당 후보 선택})}\right)$$

$$= \alpha + \beta_1 \times \text{정부신뢰} + \beta_2 \times \text{정당호감도 편차} + \beta_3 \times \text{정부신뢰} \times \text{정당호감도 편차} + \sum \gamma_j \times \text{Control}_j$$

[2018년 지방선거]

$$\ln\left(\frac{p(y=k)}{p(y=\text{자유한국당 후보 선택})}\right), k=\text{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 기타 후보 선택}$$

$$= \alpha_k + \beta_{1k} \times \text{정부신뢰} + \beta_{2k} \times \text{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beta_{3k} \times \text{정부신뢰} \times \text{더불어민주당 호감도} + \beta_{4k} \times \text{자유한국당 호감도} + \beta_{5k} \times \text{정부신뢰} \times \text{자유한국당 호감도} + \beta_{6k} \times \text{바른미래당 호감도} + \beta_{7k} \times \text{정부신뢰} \times \text{바른미래당 호감도} + \sum \gamma_{jk} \times \text{Control}_j$$

위의 식에서 α 는 상수(constant)를, 각 β 는 투표 선택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를, 그리고 각 γ 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특히, 위의 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4년 지방선거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β_3 를, 2018년 지방선거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β_{3k} 와 β_{5k} , 그리고 β_{7k} 라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세 가지를 추정하였는데, 이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이들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증감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예를 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정당호감도=-100)의 경우에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_1-100\times\beta_3$ 으로 계산되며,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경우(정당호감도=0)의 경우에는 $\beta_1+0\times\beta_3=\beta_1$,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장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정당호감도=100)의 경우는 응답자의 정부 신뢰 변수가 투표 선택에 대해 $\beta_1+100\times\beta_3$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회귀계수의 선형 결합(linear combination)의 나타내는 영향력은 다음의 [표5-5]와 [표5-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5-5] 회귀계수의 해석: 2014년 지방선거

		Coef.	새누리당 후보 선택에 대한 정부 신뢰 변수의 영향력
정당호감도 편차=-100	새정치민주연합 편향	$\beta_1-100\times\beta_3$	영향력을 확신할 수 없음
정당호감도 편차=0	선호 무차별	$\beta_1+0\times\beta_3$	(+)
정당호감도 편차=100	새누리당 편향	$\beta_1+100\times\beta_3$	영향력을 확신할 수 없음

[표5-6] 회귀계수의 해석: 2018년 지방선거

		Coef.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에 대한 정부 신뢰 변수의 영향력
더불어민주당 호감도=0 자유한국당 호감도=0	선호 무차별	$\beta_{1k}+0\times\beta_{3k}+0\times\beta_{5k}$	(+)
더불어민주당 호감도=0 자유한국당 호감도=100	자유한국당 편향	$\beta_{1k}+0\times\beta_{3k}+100\times\beta_{5k}$	영향력을 확신할 수 없음
더불어민주당 호감도=100 자유한국당 호감도=0	더불어민주당 편향	$\beta_{1k}+100\times\beta_{3k}+0\times\beta_{5k}$	영향력을 확신할 수 없음
더불어민주당 호감도=100 자유한국당 호감도=100	선호 무차별	$\beta_{1k}+100\times\beta_{3k}+100\times\beta_{5k}$	(+)

제 4 절 분석 결과

1. 정부 신뢰, 정당 호감도와 투표 선택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투표 선택에 따른 정부 신뢰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5-7]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정부 신뢰 평균은 52.324였으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정부 신뢰 평균은 38.189로, 이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10.719$, $p=0.0000$). 한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정부 신뢰 평균은 5.507이었으며, 가장 주요한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정부 신뢰 평균은 3.649고, 기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정부 신뢰 평균은 4.720으로 두 개의 주요한 정당을 선택한 응답자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8년의 경우 또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84.18$, $p=0.0000$). 이러한 결과는 지방선거의 맥락에서 정부 신뢰가 응답자들의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5-7] 투표 선택에 따른 정부 신뢰 평균

2014년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 투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투표	전체		t
	정부 신뢰	52.324	38.189	46.057		10.719 ($p=0.0000$)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	자유한국당 후보 투표	기타 후보 투표	전체	F
	정부 신뢰	5.507	3.649	4.720	4.949	184.18 ($p=0.0000$)

한편, 하단의 [표5-8]은 응답자의 정부 신뢰 정도와 주요한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상대적 선호도와 정부 신뢰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0.3527$, $p=0.0000$). 한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응답자들의 더불어민주당 호감도와 정부 신뢰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r=0.5148$, $p=0.0000$), 자유한국당 호감도와 정부 신뢰의 상관관계는 부(-)의 부호를 나타냈다($r=-0.1848$, $p=0.0000$). 바른미래당 호감도와 정부 신뢰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r=-0.0239$, $p=0.1911$). 이러한 결과는 정부 신뢰가 응답자의 당파성과 공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신뢰와 여당 호감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 신뢰의 주요한 평가 대상이 정부 여당이라는 기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8] 피어슨 상관계수

2014년 지방선거	정당 호감도 편차와 정부 신뢰		
	0.3527 ($p=0.0000$)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호감도와 정부신뢰	자유한국당 호감도와 정부신뢰	바른미래당 호감도와 정부신뢰
	0.5148 ($p=0.0000$)	-0.1848 ($p=0.0000$)	-0.0239 ($p=0.1911$)

결국,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 신뢰 자체 및 투표에 대한 정부 신뢰의 영향력이 당파적 고려 하에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을 수행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두 개의 정당이 경쟁했으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두 개의 주요한 정당 및 기타 정당이 유의미하게 경쟁했으므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2. 2014년 지방선거

[표5-9]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후보 선택을 종속변수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정부신뢰×정당호감도 편차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표5-9] 투표 선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2014년 지방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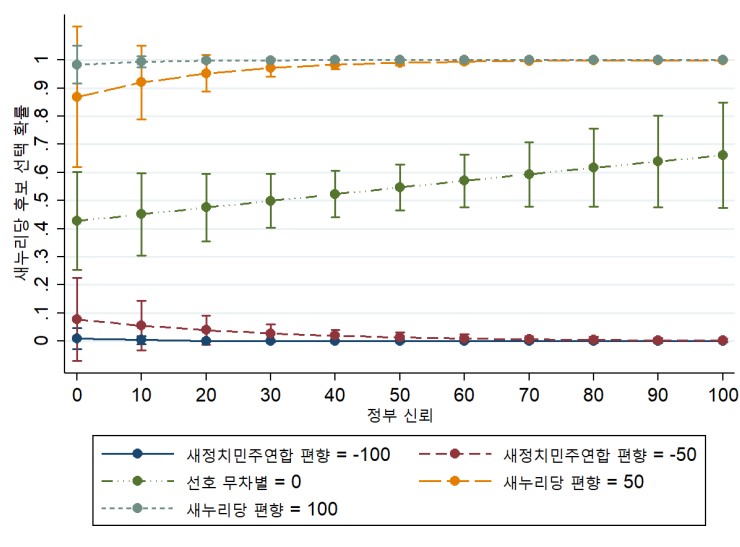
	기본 모형		상호작용 모형	
	Coef.	Std. Err.	Coef.	Std. Err.
정부 신뢰	0.009	0.007	0.010	0.007
정당호감도 편차	0.083***	0.011	0.044*	0.020
정부신뢰×정당호감도 편차	-	-	0.001*	0.000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758**	0.222	0.798***	0.222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0.589	0.387	0.529	0.391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일체감	-0.521	0.426	-0.537	0.426
진보 이념	-0.726*	0.317	-0.721*	0.317
보수 이념	0.716*	0.317	0.745*	0.321
성별(남성=1)	-0.015	0.257	-0.017	0.258
연령	0.029**	0.010	0.028**	0.011
교육수준	0.084	0.117	0.088	0.117
가구소득	-0.002	0.041	-0.006	0.041
인천/경기	1.036**	0.362	1.083**	0.369
대전/세종/충청	0.731†	0.439	0.811†	0.441
광주/전라	-1.121†	0.632	-1.120†	0.651
부산/울산/경남	2.193***	0.573	2.211***	0.570
대구/경북	1.525**	0.463	1.582**	0.468
강원/제주	1.253†	0.656	1.279†	0.662
상수	-4.793***	1.172	-4.966***	1.183
N	827		827	
Pseudo-R ²	0.6371		0.6404	

*** p<0.001,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위의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5-1]과 같다. 이 그래프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시키고, 정당 호감도 편차 변수의 값에 따라 집단을 나눈 뒤 정부 신뢰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예측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 선호가 무차별한 응답자들의 경우, 그래프가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 대해 보다 신뢰할수록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 중 한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들에게서는 그래프가 0에 가까운 기울기를 나타냈고, 따라서 정부 신뢰 변수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새누리당에게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들은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와는 무관하게 새누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였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편향되게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정부신뢰의 정도와 관계없이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 투표 선택 예측확률: 2014년 지방선거



요컨대, 지방선거의 맥락에서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신뢰 변수는 특정 정당에게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부 신뢰가 응답자의 당파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 2018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선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5-10]과 [표5-1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 모형([표5-10])을 분석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통계적 검정([표5-11]과 [표5-12])을 실시한 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표5-13])을 분석하여 정부 신뢰와 당파성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5-10] 투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2018년 지방선거 (기본 모형)

	자유한국당 대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		자유한국당 대비 기타 후보 선택	
	Coef.	Std. Err.	Coef.	Std. Err.
정부 신뢰	0.101*	0.046	0.072	0.060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0.046***	0.005	0.017**	0.006
자유한국당 호감도	-0.043***	0.005	-0.044***	0.006
바른정당 호감도	-0.004	0.005	0.020	0.006
국가경제평가	0.417**	0.160	0.092	0.216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0.114	0.262	-0.783*	0.372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1.323**	0.482	-0.632	0.583
기타 정당일체감	0.217	0.273	1.186***	0.309
진보 이념	0.526*	0.212	0.491†	0.282
보수 이념	-0.708**	0.218	-0.388	0.293
성별(남성=1)	0.265	0.169	0.232	0.220
연령	-0.024***	0.007	0.004	0.008
교육수준	-0.177	0.122	-0.100	0.157
가구소득	-0.001	0.037	-0.018	0.047
인천/경기	-1.063***	0.253	-2.540***	0.310
대전/세종/충청	-0.624†	0.323	-2.747***	0.511
광주/전라	2.359**	0.845	2.297**	0.847
부산/울산/경남	-0.880**	0.294	-2.908***	0.438
대구/경북	-1.490***	0.327	-2.663***	0.435
강원/제주	0.090	0.496	0.039	0.514
상수	1.442†	0.778	0.121	0.989
N = 1,810				
Pseudo-R ² = 0.4395				

*** p<0.001,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위의 [표5-10]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통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가정, 즉 종속변수

를 구성하고 있는 셋 이상의 명목적 선택지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검정하였다. 이 IIA 가정에 대한 스몰-샤오 검정 (Small-Hsiao test)의 결과는 세 범주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5-11]).²²⁾ 그리고 각 범주마다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범주를 통합할 수 있다는 영가설을 검정하는 왈드 검정(Wald test)의 결과는 세 범주의 모든 조합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다([표5-12]). 따라서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5-11] 스몰-샤오 검정(Small-Hsiao test, n=1,810)

1차 스몰-샤오 검정	χ^2	자유도	p-value
더불어민주당	20.189	21	0.509
자유한국당	22.190	21	0.389
기타	19.317	21	0.565
2차 스몰-샤오 검정	χ^2	자유도	p-value
더불어민주당	17.163	21	0.701
자유한국당	17.650	21	0.671
기타	20.677	21	0.479

[표5-12] 왈드 검정(Wald test, n=1,810)

범주	χ^2	자유도	p-value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425.079	20	0.000
더불어민주당 + 기타	212.747	20	0.000
자유한국당 + 기타	209.170	20	0.000

22) 스몰-샤오(Small-Hsiao) 검정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IIA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의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MaFadden et al. 1977)이 가지는 점근적 바이어스(asymptotic bias)를 해결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으로, 데이터의 샘플을 무작위적으로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mall and Hsiao 1985). 따라서 검정의 결과는 매번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스몰-샤오 검정을 수행하였고, 두 개의 검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5-13]과 같다. 정부신뢰×더불어민주당 호감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의 부호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그리고 정부신뢰×자유한국당 호감도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의 부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그러나 정부신뢰×바른정당 호감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2018년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정부 신뢰와 상호작용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13] 투표 선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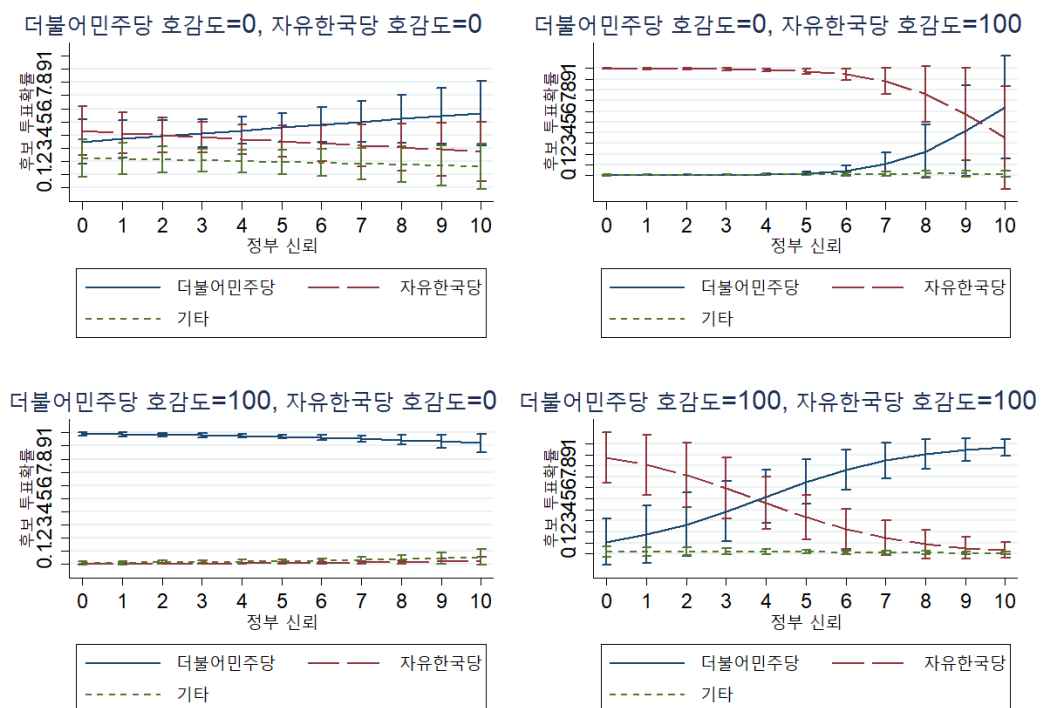
2018년 지방선거 (상호작용 모형)

	자유한국당 대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택		자유한국당 대비 기타 후보 선택	
	Coef.	Std. Err.	Coef.	Std. Err.
정부 신뢰	0.121	0.084	0.073	0.109
더불어민주당 호감도	0.064***	0.010	0.022**	0.011
정부 신뢰×더불어민주당 호감도	-0.004*	0.002	-0.001	0.002
자유한국당 호감도	-0.082***	0.012	-0.054***	0.013
정부 신뢰×자유한국당 호감도	0.008***	0.002	0.003	0.003
바른정당 호감도	-0.001	0.011	0.030	0.011
정부 신뢰×바른정당 호감도	-0.001	0.002	-0.002	0.002
국가경제평가	0.422**	0.160	0.091	0.218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0.071	0.267	-0.792*	0.381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1.366**	0.483	-0.652	0.585
기타 정당일체감	0.225	0.278	1.165***	0.314
진보 이념	0.578**	0.215	0.553†	0.284
보수 이념	-0.700**	0.222	-0.403	0.296
성별(남성=1)	0.288†	0.171	0.239	0.221
연령	-0.024***	0.007	0.004	0.009
교육수준	-0.204	0.124	-0.132	0.158
가구소득	0.007	0.038	-0.012	0.047
인천/경기	-1.120***	0.259	-2.576***	0.313
대전/세종/충청	-0.633**	0.330	-2.771***	0.514
광주/전라	2.456***	0.897	2.404***	0.894
부산/울산/경남	-0.886**	0.300	-2.950**	0.445
대구/경북	-1.548†	0.331	-2.707***	0.435
강원/제주	0.047	0.505	0.030	0.518
상수	1.444	0.866	0.252	1.078
N = 1,810				
Pseudo-R ² = 0.4461				

*** p<0.001, ** p<0.01, * p<0.05, † p<0.1 (양측검정)

앞서 살펴본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정부신뢰라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가 각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여 [그림5-2]에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 때, 정당 호감도가 변화함에 따라 정부신뢰가 투표선택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호감도와 자유한국당 호감도의 값에 따라 그래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특히 특정한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와 선호가 무차별한 응답자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다른 변수들은 모두 각각의 평균값에 고정하였다.

[그림5-2] 투표 선택 예측확률: 2018년 지방선거



[그림5-2]에서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싫어하는 정도가 가장 강한 응답자들의 투표 선택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두 정당에 대해 무차별한 선호를 지닌 응답자들로, 이들의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5% 유의수준에서 신뢰구간이 서로 겹치므로, 같은 정부 신뢰의 값 상에서 세 개의 범주 중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이는 선거에서 경쟁하는 두 개의 주요 정당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 강한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크지 않을 수 있어, 정부 신뢰가 세 정당에 대한 선택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가져올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의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장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응답자들의 투표 선택 확률이다. 이 응답자들은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부 신뢰가 높을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95% 유의수준에서 신뢰구간이 크게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이들이 정부 신뢰가 높은 경우, 이들은 일종의 부조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의 응답자들의 투표 선택의 확률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신뢰구간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편향되게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그래프는 좌측 하단에 나타나 있다.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이 응답자들은 정부 신뢰의 정도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경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응답자 집단은 일관된 선호를 가진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정당 선호의 영향력으로 인한 투표 선택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당 선호의 영향력으로 인해 정부 신뢰는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정당 선호에 기반하여 형성되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두 정당 모두에게 동시에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지는 응답자들은 무차별한 선호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대해 현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 행태는 이들 응답자 집단에서 보다 명확하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가 제시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정부 신뢰가 당파적 편향성의 영향 하에 있다는 가설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당파적 선호에 있어 무차별한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의 맥락에 있어 정부를 신뢰할수록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파적으로 편향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와 관계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높은 확률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는 유권자들이 정부 신뢰보다 당파적 선호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당파적 고려 하에 있다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경험적 근거라는 것이다.

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유권자의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정부 신뢰는 현직 정부 여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총체로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유권자의 당파성이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가지는 정부 신뢰가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차등화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 신뢰가 당파적 고려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권의 이념적·정파적 성향이 서로 다른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는 것은 정부 신뢰가 정파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에도 적절한 사례가 된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신뢰는 주요한 정당들에 대한 호감도와 공변하는 바가 큰, 정파성을 가진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부 신뢰는 각각 2014년과 2018년 당시의 서로 다른 여당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규범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부 신뢰는 제도적 차원에서 개념화 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능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유권자들이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 기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파가 집권하였는지에 따라 유권자가 정부에 대해 보내는 신뢰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있어 정부 신뢰가 제도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현직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로 국한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속성을 가지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유권자가 형성하는 정부 신뢰와 이것이 추동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정치적 속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누리당이 집권하여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가 집권했던 2014년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진보 정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특히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에 대해 무차별한 선호를 나타내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신뢰는 모두 해당 선거에서의 여당 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두 시기에 정권의 정파적 속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2014년에는 새누리당 소속 후보, 그리고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의 대상이 정부 여당으로 인식되는 만큼, 유권자들에게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시 집권하고 있는 현직 정부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당파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그들이 정부를 신뢰하는지와 관계없이 지방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무차별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가 높아질수록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하였던 반면, 특정한 정당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의 정도와 관계없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소속 후보를 거의 전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주된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두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가 무차별한 유권자들은 정부 신뢰에 영향을 받아 후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특정한 정당에 편향된 유권자는 높은 비율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였다.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정부 신뢰보다 당파적 태도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당파적 고려 하에 있다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경험적 근거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 신뢰,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이 본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현직자의 공과에 대한 상벌로서 기능할 것이 기대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의 당파성에 따라 결정 이어지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본 장이 제시한 비교 분석의 경험적 결과들은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는 현직 정부 여당의 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넘어서서

그들의 투표 선택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규범적·이론적으로 객관적인 속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그를 바탕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부 신뢰의 형성이 당파적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 보내는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이 정부가 시행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이나 그 성과 혹은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정치적 갈등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의 당파성에 따라 형성되어, 유권자들 사이에 첨예한 찬반의 대립이 상존하게 되고 유권자들의 당파적 대립이 양극화된 형태로 표출될 우려를 가져온다. 또한 회고적 투표 선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현직 정부의 성과에 따라 유권자가 상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선거의 기능을 퇴색시킬 우려 또한 제기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장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이 초래하는 이러한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 당파성을 넘어서서 유권자들의 합의를 제고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선거가 정치권으로 하여금 자정 노력과 건설적인 경쟁 구도의 형성을 하게 하는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미시적 관점을 통해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당파적 편향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파적 유권자들이 갈등의 확장 내에서 정파적 태도의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당파적 편향성(partisan bias)이 양극화의 기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분포 및 비율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적 태도를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다양한 갈등이 누적되고 중첩되어 일원화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갈등의 확장(conflict extension)의 상황에서, 당파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강한 당파성을 지닌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편향성 및 상대 정파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과정 때문이다. 양극화를 논의하는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를 집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유권자의 지지 연합의 변화와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와 이념 사이에서 나타나는 조응도의 증가라는 양극화의 현상을 양극화의 원인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미시적인(individual-level)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태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을 지적함으로써, 이들의 어떠한 특성이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이고 개인 수준의 차원에서의 양극화에 주목하여 이를 초래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가 이념과 정책 선호에 있어서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닌, “합리화하는 유권자”임을 지목하여, 이들의 이념과 정책 선호가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 요컨대,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으로서 이러한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으로 인해 정당 태도와 이념, 그리고 정

책 선호에서의 조용도가 증가하고 당파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파적 유권자들이 편향된(partisan-biased)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일관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념과 정책 선호를 분석함에 있어 유권자들의 인지적 자원과 정치 지식을 강조했던 이론들은 합리적인 유권자를 가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의 주장은 인지적 자원을 갖춘 유권자들에게서 이러한 일관된 선호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강한 일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당파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정치적 동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권자의 정책 선호에서 나타나는 강한 일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당파성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정치적 동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관된 선호가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증 과정을 거쳐, 이것이 당파적인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당파성을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이념적 성향과 정책 선호의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과 그로 인한 강한 정치적 태도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임을 주장하였다.

둘째,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위치와 정당 및 후보의 이념적 위치와의 거리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인 과정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정서적 요인이 개입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념거리 인식과 정서적 요인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와,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 과정에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이념이 당파적 고려에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포착하는 것은 유권자 차원에서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의 조용도가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정파적 갈등의 심화와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합리적일 것으로 기대되어 왔던 정당 및 후보자와의 이념거리 인식과, 정서적 속성을 띠고 있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이념적으로 가까운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는 합리적인 과정보다,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 이념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당파적 편향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적 이념거리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에도 주목하였다. 중도적인 유권자의 경우,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정파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를 인식함에 있어 후보들에 대한 정서적 평가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극단적인 이념 위치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들의 강한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를 지닐수록 그 후보와의 이념적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지닌 후보에 대해서는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인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권자의 인식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의 이념적 판단에 정서적 요인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에 따라 이들의 인식과 정서의 관계가 나타내는 강도는 차등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유권자의 당파성은 유권자의 이념적 위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권자의 이념 인식은 당파적 편향성을 띤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파간 갈등과 양극화의 기저에는 당파성과 이념 성향 사이의 조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념의 당파적 편향성이 양자간의 조응도를 증가시켜 양극화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가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편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정부 신뢰가 지방선거에서의 회고적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권자의 당파적 선호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

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속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던 정부 신뢰 및 그를 기반으로 한 회고적 투표 선택이 당파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 당파적 고려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시행을 둘러싸고 정파간의 대립을 상존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당파적 편향의 태도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회고적 투표 선택이 가진 기능을 퇴색시켜,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반응성이 퇴색될 우려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당파적 유권자들의 편향성을 밝힘과 동시에, 이것이 대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집합적인 차원에서 양극화를 기술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양극화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적인 차원 외에도, 본 연구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적인 요인에 대해 지목하였다. 기성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철회하는 무당파층 유권자들의 증가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지표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정치적인 자원을 지니지 않고 정치와는 유리된 유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무당파 유권자들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능동적 유권자임이 밝혀져 왔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양극화로부터 위기를 겪고 있다는 학계 및 언론계의 지적과 같이, 오히려 당파적인 유권자들이 보이는 편향성과 인식의 양극화가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선거의 기능을 퇴색시킴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극화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권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그 본질적이고 규범적인 합의에 기반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3-57.
- 강신구. 2013. “한국인 이념 인식의 단기 변동성: 18대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1-33.
- _____. 2014.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OUGHTOPIA』 29권 2호, 65-95.
-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지방적 행사 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79-114.
- _____. 2003.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1호, 5-30.
- _____.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10권 제1호, 145-168.
- _____.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193-217.
- _____. 2008.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제14권 제1호, 31-58.
- _____. 2011a.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의 실패와 정당 재편의 좌절.” 강원택·장덕진 엮음.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파주: 한울아카데미, 15-39.
- _____. 2011b.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3호, 99-129.
- _____. 2012. “정파적 지지와 인지적 동원.”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파주: 나남출판, 205-229.
- _____. 2017. “사회적 이슈와 정치 갈등: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이재열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서울: 오름, 147-177.
- _____. 2018. “한국 정당 정치 70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 전개.”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2호, 5-31.
- _____. 2019.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분절 문제와 해소 방안: 이념갈등.” 강원택·김왕배·김원섭·방민호·배은경·이대환·한준 지음. *막힌 사회와 그 비상구들*. 파주: 아시아, 317-359.
-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7집 제1호, 205-240.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201-228.
- _____. 2015.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3권 제1호, 1-33.
- 길정아·하상웅. 2019.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25권 제1호, 46-78.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제13권 2호, 6-32.
- 김성연. 2015.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459-491.
- _____. 2017.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148-177.
- 김윤실·윤종빈. 2014. “한국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16대·17대·18대 대선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2호, 119-141.
- 김장수. 200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 기제와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4호, 145-168.
- 김지영·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405-425.
- 김진하. 2010.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6·2 지방선거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5-32.
- 류재성. 2012. “정치이념의 정책선택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53-86.

-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 정당학회보』 제11권 제3호, 127-154.
- 박원호. 201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정책선호, 그리고 후보자 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파주: 나남출판, 35-62.
- _____. 2013. “무당파의 선택: 2012년의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거 대선*.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33-155.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115-143.
-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5호, 119-142.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제17권 제2호, 117-142.
- 박찬욱. 2009. 사회균열과 투표선택: 지역, 세대, 이념의 영향”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181-203.
- 박찬욱·김경미·이승민.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념 정향이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박찬욱 편.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 서울: 생각의 나무, 191-248.
- 배은진·엄기홍. 2016.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경제투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한 경험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2호, 77-98.
- 백준기·조정관·조성대. 2003.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선거.” 『국가전략』 제9권 4호, 139-168.
- 소순창·현근. 2006.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무당파층”과 정당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47-75.

- 송진미. 2019.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8집 제1호, 109-146.
- 송진미·박원호. 2014.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 5-31.
- 신상준·이숙중.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0권 제2호, 1~37.
- 오현주·길정아. 2013. “유권자의 이념과 투표선택: 보수의 결집과 진보의 분열.”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출판, 185-217.
- 오현주·송진미·길정아·강원택. 2014. “정당 호감도와 회고적 평가: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3호, 69-97.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2호, 251-287.
- 이내영·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1호, 31-55.
- 이내영·허석재. 2010. “합리적인 유권자인가, 합리화하는 유권자인가?: 17대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이념과 후보선택.”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2호, 45-67.
- 이성우. 2011.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당파적 배열.”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3호, 109-138.
- 이우진·하솔잎. 2016. “정부신뢰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응용경제』 제18권 제3호, 81-104.
- 이재묵. 2014. “엘리트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 투표 참여 및 정치 관심도: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20권 제1호, 145-168.
- 이정복. 2011.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진. 2007.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미국 및 유럽사례와의 비교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109-138.

- 이지호·이현우. 2016. “정부신뢰의 한국적 의미와 측정: 반응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3호, 1-28.
- 임현진. 2010. *한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백산서당.
- 장기영·박지영. 2018.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이념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 정당지지자의 ‘투사효과’ 비교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1호, 77-102.
- 장승진. 2013. “민주통합당은 좌클릭 때문에 패배하였는가?: 제18대 대선에서의 이념투표.” 『의정연구』 제19권 제2호, 73-98.
- _____. 2015.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 25-52.
-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2호, 181-206.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제33권 3호, 143-180.
- 정진민. 2010.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 1-22.
- 정진민·길정아. 2014. “18대 대선에선 나타난 한국 무당파 유권자의 특성과 행태: 인지적 동원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0권 3호, 135-162.
- 조성대. 2004. “4·15 총선과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의정연구』 제10권 제2호, 209-235.
- _____. 2007. “양극화 시대 미국정치의 이념적 재편성과 대중의 정당일체감: 1972~2004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4호, 193-213.

- _____.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169-198.
- 조진만. 2005. “민주화 이후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95-122.
- 조진만·최준영·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75-98.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375-394.
- 하상응. 2016. “양극화,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치의 위기.” 『의정연구』 제22권 제1호, 247-254.
-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4호, 105-126.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3권 제1호, 65-93.

Abramowitz, Alan I. 1985. “Economic Conditions, Presidential Popularity, and Voting Behavior in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7. no. 1, 31-43.

_____. 2010. *The Disappearing Center: Engaged Citizens, Polarizat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_____. 2013. *The Polarized Public?: Why American Government is so Dysfunctional*. Boston : Pearson.

Abramowitz, Alan I., and Kyle L. Saunders. 1998.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0. no. 3, 634-652.

-
- . 2008. "Is Polarization a Myth?"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542–555.
- Abramowitz, Alan, and Steven Webster. 2016. "The Rise of Negative Partisanship and the Nationalization of U.S. Elections in the 21st century." *Electoral Studies* vol. 41, 12–22.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16.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dams, James, Erik Engstrom, Danielle Joeston, Walt Stone, Jon Rogowski, and Boris Shor. 2017. "Do Moderate Voters Weigh Candidates' Ideologies?: Voters' Decision Rules in the 2010 Congressional Elections." *Political Behavior* vol. 39, 205–227.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nduiza, Eva, Aina Gallego, and Jordi Muñoz. 2013. "Turning a Blind Eye: Experimental Evidence of Partisan Bias in Attitudes toward Corrup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6. no. 12, 1664–1692.
- Arceneaux, Kevin. 2005. "Does Federalism Weaken Democratic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vol. 35. no. 2, 297–311.
- Barabas, Jason, Jennifer Jerit, William Pollock, and Carlisle Rainey. 2004. "The Question(s) of Political Knowled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8. no. 4, 840–855.
- Bardes, Barbara A., and Robert W. Oldendick. 2012. *Public Opinion: Measuring the American Mind*. Lanham: Rowman & Littlefield.
- Barro, Robert J. 1973. "The Control of Politicians: An Economic

- Model.” *Public Choice* vol. 14. no. 1, 19–42.
- Bartels, Larry M. 2000. “Partisanship and Voting Behavior, 1952–199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4. no. 1, 35–50.
- _____.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vol. 24. no. 2, 117–150.
- Bellucci, Paolo. 2014.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Blame Attribution for the Economic Crisis in the 2013 Italian National Election.” *Journal of Elections, Public Opinion & Parties* vol. 24. no. 2, 243–263.
- Bennett, Stephen E. 1995 “Americans’ Knowledge of Ideology, 1980–1992.”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 23. no. 3, 259–278.
- Bisgaard, Martin. 2015. “Bias will Find a Way: Economic Perceptions, Attributions of Blame, and Partisan–Motivated Reasoning during Crisi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7. No. 3, 849–860.
- Born, Richard. 1990. “Surge and Decline, Negative Voting, and the Midterm Loss Phenomenon: A Simultaneous Choic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3, 615–645.
-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6. no. 2, 450–458.
- Brooks, Clem, Paul Nieuwbeerta, and Jeff Manza. 2006. “Cleavage–Based Voting Behavior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Evidence from Six Postwar Democrac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35. no. 1, 88–128.
- Buchanan, James M.,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 Consen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ullock, John G. 2009. "Partisan Bias and the Bayesian Ideal in the Study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1. no. 3, 1109–1124.
- Campbell, Angus, Gerald Gurin, and Warren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and Sons.
- Carlisle, Rodney P. 2005. *Encyclopedia of Politics: The Left and the Right. Volume 1: The Left*. Thousand Oaks: Sage Reference.
-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1980. "The Two Faces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1, 78–91.
-
- _____. 1989. *Issue 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rsey, Thomas M., and Geoffrey C. Layman. 2006. "Changing Sides or Changing Minds? Party Ident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2, 464–477.
- Citrin, Jack.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no. 3, 973–988.
- Citrin, Jack, and Donald 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6. no. 4, 431–453.
- Claggett, William J. M., and Byron E. Shafer. 2010. *The American Public Mind: The Issues Structure of Mass Politics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Terry N., and Seymour M. Lipset 1991. "Are Social Classes Dying?" *International Sociology* vol. 6. no. 4, 397-410.
- Conover, Pamela J., and Stanley Feldman. 198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5. no.4, 617-645.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The Free Press, 206-261.
- Cover, Albert D. 1986. "Presidential Evaluations and Voting for Congr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0. No. 4, 786-801.
- Cox, Michaelene. 2003. "When Trust Matters: Explaining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41. no. 4, 757-770.
- Crewe, Ivor. 1993. "Voting and the Electorate." in Dunleavy, Patrick, Andrew Gamble, Ian Holliday, and Gillian Peele. eds.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4. London: Palgrave Macmillan, 92-122.
- Dalton, Russell J.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6, 264-284.
- _____. 2007. "Partisan Mobilization, Cognitive Mobilization and the Changing Americ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vol. 26. no. 2, 274-286.
- _____. 2012. "Apartisans and the Changing Germ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vol. 31, 35-45.
- _____. 2013. *The Apartisan American*. Los Angeles: Sage.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nzau, Arthur T., and Douglass C. North. 1994. "Shared Mental Model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Kyklos* vol. 47. no. 1, 3–31.
- Dinas, Elias, Erin Hartman, and Joost van Spanje. 2016. "Dead Man Walking: The Affective Roots of Issue Proximity between Voters and Parties." *Political Behavior* vol. 38. no. 3, 659–687.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Duckitt, John. 2006. "Differential Effects of Right 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on Outgroup Attitudes and Their Mediation by Threat from and Competitiveness to Out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2. no. 5, 684–696.
- Duckitt, John, Claire Wagner, Ilouize Du Plessis, and Ingrid Birum. 2002. "The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Prejudice: Testing a Dual Proces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3. no. 1, 75–93.
- Ellis, Christopher, and James Stimson. 2012. *Ideology in Americ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elow, James M., and Melvin J.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Introdu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1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New York: Routledge.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 *The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 1999. *The End of Class Politics? Class Voting in Comparative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 and Robert Andersen. 2006.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8. no. 1, 194-207.
- Fearon, James D. 1999.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the Control of Politicians: Selecting Good Types versus Sanctioning Poor Performance." in Przeworsky, Adam, Susan C. Stokes, and Bernard Manin. eds.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5-97.
- Federico, Christopher, and Monica C. Schneider 2007. "Political Expertise and the Use of Ideology: Moderating Effects of Evaluative Motiv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1. no. 2, 221-252.
- Feigert, Frank B., and Pippa. Norris. 1990. "Do By-Elections Constitute Referenda? A Four-Country Comparison."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15. no. 2, 183-200.
- Feldman, Stanley. 1988. "Structure and Consistency in Public Opinion: the Role of Core Beliefs and Val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2. no. 2, 416-440.
- _____. 2003. "Values,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Attitudes." in Huddy, Leonie, Robert Jervis, and David O. Sears. eds.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77-508.
- Feldman, Stanley, and Christopher Johnston. 2014.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Implications of Structural Complexity." *Political Psychology* vol. 35. no. 3, 337-358.
- Feldman, Stanley, and Pamela J. Conover. 1983. "Candidates, Issues

- and Voters: The Role of Inference in Political Percepti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5. no. 4, 810–839.
- Ferejohn, John. 1986. “Incumbent Performance and Electoral Control.” *Public Choice* vol. 50. no. 1, 5–25.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 Press.
- Fiorina, Morris P., and Samuel J. Abrams. 2008.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1, 563–588.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0. no. 2, 556–560.
-
2010.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New York: Pearson Longman.
- Finkel, Steven E. 1995. *Causal Analysis with Panel Data*. Thousand Oaks: Sage.
- Fleisher, Richard, and Jon R. Bond. 2001. “Evidence of Increasing Polarization among Ordinary Citizens.” in Cohen, Jeffrey E, Richard Fleisher, and Paul Kantor. eds. *American Political Parties: Decline or Resurgence*. Washington, DC: CQ Press, 55–77.
- Franklin, Charles H., and John E. Jackson. 1983. “The Dynamics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7. no. 4, 957–973.
- Free, Lloyd A., and Hadley Cantril 1967. *Political Beliefs of Americans: A Study of Public Opinion*.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Fuchs, Dieter, and Hans-Dieter Klingemann. 1990. “The Left-Right

- Schema.” in Jennings, M. Kent, and Jan W. van Deth. eds. *Continuities in Political Action: A Longitudinal Study of Political Orientations in Three Western Democracies*.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3–234.
- Galston, William A. and Pietro S. Nivola. 2006. “Delineating the Problem.” in Nivola, Pietro S. and David W. Brady. eds. *Red and Blue Nation?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merica’s Polarized Politic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47.
- Gerring, John. 1997. “Ideology: A Definitional Analysi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0. no. 4, 957–994.
- Goren, Paul. 2002. “Character Weakness, Partisan Bias, and Presidential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3, 627–641.
- _____. 2004. “Political Sophistication and Policy Reasoning: A Reconsid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3, 462–478.
- Green, Donald P., Bradley Palmquist, and Eric Schickler. 2002.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eene, Steven. 1999. “Understanding Party Identification: A Social Identity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2, 393–403.
- _____. 2004. “Social Identity Theory and Party Identific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vol. 85. no. 1, 136–153.
- Haidt, Jonathan. 2012. *The Righteous Mind: Why Good People are Divided by Politics and Religion*. New York : Pantheon Book.
- Hamill, Ruth, and Milton Lodge. 1986. “Cognitive Consequences of

- Political Sophistication.” in Lau, Richard R., and David O. Sears. eds. *Political Cognition: the 19th Annual Carnegie Symposium on Cogni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sication, 69–93.
- Hamill, Ruth, Milton Lodge, and Frederick Blake. 1985. “The Breadth, Depth, and Utility of Class, Partisan, and Ideological Schem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9. no. 4, 850–870.
- Hartz, Louis. 1955.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Revolu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Healy, Andrew, Alexander G. Kuo, and Neil Malhotra. 2014. “Partisan Bias in Blame Attribution: When Does it Occur?” *Journal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vol. 1. no. 2, 144–158.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4, 791–808.
- _____.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ial Vote, 1968–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2, 311–326.
- _____.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619–631.
- Hetherington, Marc J., and Thomas J. Rudolph. 2015. *Why Washington Won’t Work: Polarization, Political Trust, and the Governing Cri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nich, Melvin, and Michael C. Munger. 1994. *Ideology and the Theory of Public Choic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yengar, Shanto,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6. No. 3, 405-431.
- Jacoby, William G. 1986. "Levels of Conceptualization and Reliance on the 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The Journal of Politics* vol. 48. no. 2, 423-432.
- _____. 1988. "The Sources of Liberal-Conservative Thinking: Education and Conceptualization." *Political Behavior* vol. 10. no. 4, 316-332.
- _____. 1991. "Ideological Identification and Issue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1, 178-205.
- _____. 1995. "The Structure of Ideological Thinking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9. no. 2, 314-335.
- Jerit, Jennifer, and Jason Barabas. 2012. "Partisan Perceptual Bias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4. no. 3, 672-684.
- Jessee, Stephen A. 2010. "Partisan Bias, Political Information and Spatial Voting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2, 327-340.
- Joesten, Danielle A., and Walter J. Stone. 2014. "Reassessing Proximity Voting: Expertise, Party, and Choice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740-753.
- Jost, John T., Brian A. Nosek, and Samuel D. Gosling.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3. no. 2, 126-136.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and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307-337.
- Keele, Luke. 2005. "The Authorities Really Do Matter: Party Control and Trust in Governmen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7. no. 3, 873-886.
-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A. Orr, Mark C.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1992.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1. no. 1, 44-66.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1979. "Economic Discontent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Grievances and Collective Economic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3. no. 3, 495-527.
-
- .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1. No. 2, 129-161.
- Knight, Kathleen. 1999. "Liberalism and Conservatism." in Robinson, John P., Phillip R. Shaver, and Lawrence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59-158.

- Knutsen, Oddbjørn. 2006. *Class Voting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Longitudinal Study*. New York: Lexington Books.
-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1, 131-143.
- Krosnick, Jon A., and Michael A. Milburn. 1990.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Political Opinionation." *Social Cognition* vol. 8. no. 1, 49-72.
- Kunda, Ziva.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8. no. 3, 480-498.
- Lau, Richard R., and David P. Redlawsk. 1997. "Voting Correctl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1. no. 3, 585-598.
- _____. 200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gnitive Heuristics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5. no. 4, 951-971.
- Layman, Geoffrey C., and Thomas M.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4, 786-802.
- Levendusky, Matthew S. 2009a. *The Partisan Sort: How Liberals Became Democrats and Conservatives Became Republic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9b. "The Microfoundations of Mass Polarization." *Political Analysis* vol. 17. no. 2, 162-176.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 Political Science* vol. 3, 183–219.
- Lipset, Seymour M.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_____. 2001. “The Decline of Class Ideologies: The End of Political Exceptionalism.” in Clark, Terry N., and Seymour M. Lipset. eds.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71–320.
- Lipset, Seymour M., and Earl Raab. 1978. “The Message of Proposition 13.” *Commentary* vol. 66. no. 3, 42.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64.
- Lodge, Milton, and Charles S. Taber. 2000. “The Automaticity of Affect for Political Leaders, Groups, and Issues: An Experimental Test of the Hot Cognition Hypothesis.” *Political Psychology* vol. 26. no. 3, 455–482.
- _____. 2013. *The Rationalizing Vot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dge, Milton, Kathleen M. McGraw, and Patrick Stroh. 1989. “An Impression-Driven Model of Candidate Evalu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2, 399–419.
- Lodge, Milton, and Ruth Hamill. 1986. “A Partisan Schema for Political Information Process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0. no. 2, 505–519.
- Lupia, Arthur, and Mathew D. McCubbins.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skin, Robert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4, 856-899.
- _____. 1990. "Explaining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Behavior* vol. 12. no. 4, 331 - 361.
- Luttbeg, Norman R., and Michael M. Gant. 1985. "The Failure of Liberal/Conservative Ideology as a Cognitive Structur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no. 1, 80-93.
- Macdonald, Kenneth, and Anthony Heath. 1997. "Pooling Cross-Sections: A Comment on Price and Sanders." *Political Studies* vol. 45. no. 5, 928-941.
- Maggiotto, Michael A. and James E. Piereson. 1977. "Partisan Identification and Electoral Choice: The Hostility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1. no. 4, 745-767.
- Mainwaring, Scott. 1999. *Rethinking Party Systems in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lhotra, Neil. 2008. "Partisan Polarization and Blame Attribution in a Federal System: the Case of Hurricane Katrina."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vol. 38. no. 4, 651-670.
- Malhotra, Neil, and Alexander G. Kuo. 2009. "Emotions as Moderators of Information Cue Use: Citizen Attitudes toward Hurricane Katrina." *American Politics Research* vol. 37. no. 2, 301-326.
- Mann, Thomas E., and Raymond E. Wolfinger. 1980. "Candidates and Parti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4. no. 3, 617-632.
- Markus, Gregory B. 1982. "Political Attitudes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3, 538-560.
- Markus, Gregory B., and Philip E. Converse. 1979. "A Dynamic

- Simultaneous Equation Model of Electoral Cho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4, 1055–1070.
- Marsh, Michael, and James Tilley. 2010. “The Attribution of Credit and Blame to Governments and Its Impact on Vote Cho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0. No. 1, 115–134.
- Martinez, Michael D. 1988. “Political Involvement and the Projection Process.” *Political Behavior* vol. 10. no. 2, 151–167
- Mason, Lilliana.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1, 128–145.
- Mayer, William G. 1992. *The Changing American Mind: How and Why American Public Opinion Changed between 1960 and 1988*.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cCarty, Nolan, Keith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IT Press.
- McClosky, Herbert, and John Zaller. 1984.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cFadden, Daniel, Kenneth Train, and William B. Tye. 1977. “An Application of Diagnostic Tests for the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Property of the Multinomial Logit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vol. 637, 39–45.
- McGraw, Kathleen M., and Neil Pinney. 1990. “The Effects of General and Domain-Specific Expertise on Political Memory and Judgment.” *Social Cognition* vol. 8. no. 1, 9–30.
- Miller, Arthur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no. 3, 951–972.

- Miller, Arthur H., Edie Goldenberg, and Lutz Erbring. 1979. "Type-Set Politics: Impact of Newspapers on Public Conf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1, 67-84.
- Miller, Arthur H., Warren E. Miller, Alden S. Raine, and Thad A. Brown. 1976. "A Majority Party in Disarray: Policy Polarization in the 1972 Ele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0. no. 3, 753-778.
- Miller, Dale T., and Michael Ross.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2. no. 2, 213-225.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n, Woojin. 2005. "Decomposition of Regional Voting in South Korea: Ideological Conflict and Regional Benefits." *Party Politics* vol. 11. no. 5, 579-599.
- Nawara, Steven P. 2015. "Who is Responsible, the Incumbent or the Former President? Motivated Reasoning in Responsibility Attribu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45. no. 1, 110-131.
- Nie, Norman H., John R. Petrocik, and Sidney Verba. 1976.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uwbeerta, Paul, and Wout Ultee. 1999. "Class Voting in Western Industrial Countries, 1945-1990: Systematizing and Testing Explana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vol. 35. no. 1, 123-160.
- Norpoth, Helmut. 1996. "Presidents and the Prospective Voter." *The Journal of Politics* vol. 58. no. 3, 776-792.

-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ne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eson, James E.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9. no. 4, 683-694.
- Popkin, Samuel L. 1994.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1, 93-121.
- Rae, Douglas W., and Michael Taylor. 1970.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thbun, Brian C. 2007. "Hierarchy and Community at Home and Abroad Evidence of a Common Structure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 American Eli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3, 379-407.
- Redlawsk, David P.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Testing the Effects of Motivated Reasoning on Political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4. no. 4, 1021-1044.
- Rosenstone, Steven J., and Mark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Rudolph, Thomas J. 2003. "Who's Responsible for the Economy? The Formation and Consequence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4, 698–713.
- Rudolph, Thomas J., and Jillian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9. no. 3, 660–671.
- Schattschneider, Elmer E. 1958.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 _____.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ears, David O., Carl P. Hensler, and Leslie K. Speer. 1979.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elf-Interest or Symbolic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3. no. 2, 369–384.
- Sears, David O., and Jack Citrin. 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fer, Byron E., and William J. M. Claggett. 1995. *The Two Majorities: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hils, Edward A. 1968.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y*.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 Simas, Elizabeth N. 2013. “Proximity Voting in the 2010 US House Elections.” *Electoral Studies* vol. 32. no. 4, 708–717.
- Simon, Herbert A. 1985. “Human Nature in Politics: The Dialogue of Psychology with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9. no. 2, 293–304.
- Small, Kenneth A., and Cheng Hsiao. 1985. “Multinomial Logit Specification Tes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26. no. 3, 619–627.
- Sniderman, Paul M., Richard A. Brody, and Phillip E. Tetlock. 1991.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berg, David I., and Myung Shin. 2006. "Tensions in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in Transition: from Entourage to Ideology?" *Asian Survey* vol. 46. no. 4, 517-537.
- Stimson, James. 2004. *Tides of Cons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kes, Donald E.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7. no. 2, 368-377.
- Sundquist, James L. 198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 Taber, Charles S., and Milton Lodge.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755-569.
- Tausanovitch, Chris, and Christopher Warshaw. 2018. "Does the Ideological Proximity Between Candidates and Voters Affect Voting in U.S. House Elections?" *Political Behavior* vol. 40, 223-245.
- Taylor, Donald M., and Janet R. Doria. 1981.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13. no. 2, 201-211.
- Tilley, James, and Sara B. Hobolt. 2011. "Is the Government to Blame? An Experimental Test of How Partisanship Shapes Perceptions of Performance and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3. no. 2, 316-330.
- Timpona, Richard J. 1998. "Structure, Behavior, and Voter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no. 1, 145-158.
- Tufte, Edward R.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s of Midterm

-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no. 3, 812-826.
- Weber, Christopher R., and Christopher M. Federico. 2013. “Moral Foundations and Heterogeneity in Ideological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vol. 34. no.1, 107-126.
- Weisberg, Herbert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vol. 2. no. 1, 33-60.
- Wooldridge, Jeffrey M. 2016.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6th edition. Boston: Cengage Learning.
- Wyckoff, Mikel L. 1980. “Belief System Constraint and Policy Voting: A Test of the Unidimensional Consistency Model.” *Political Behavior* vol. 2. no. 2, 115-146.
- Zaller, John. 1990. “Political Awareness, Elite Opinion Leadership, and the Mass Survey Response.” *Social Cognition* vol. 8. no. 1, 125-153.
- _____.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동아일보. 2011/12/03. “[2012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 <3>한국 정치 뭐가 문제기에?: 정당학회 회원 21명의 진단과 분석.”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11203/42330583/1>

검색일 2019/03/25

문화일보. 2018/11/01. “갈등·분열·양극화… ‘共存의 길’을 묻다: 최장집·윤평중 교수에게 듣는 ‘진단과 해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0101033330130001>

(검색일 2019/03/16)

시사위크. 2019/03/21. “한국당, 바른정당 출신 흔들어 보수재편 노리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43>
(검색일 2019/03/22)

시사인. 2011/09/29. “대한민국 최대정파, 무당파를 주목하라.”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209>
(검색일 2019/03/18)

Pew Research Center. 2014/06/11. “Democrats and Republicans More
Ideologically Divided than in the Past.”
[http://www.people-press.org/2014/06/12/section-1-growing-ideological-
consistency/pp-2014-06-12-polarization-1-01/](http://www.people-press.org/2014/06/12/section-1-growing-ideological-consistency/pp-2014-06-12-polarization-1-01/)
(검색일 2019/04/24)

Abstract

Partisan Bias in the Korean Electorate: The Microfoundation of Mass Polarization

Jung-ah Gil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microfoundation of mass polarization. In particular, it shows that partisan bias leads to growing consistency between voters'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by making them form their attitudes on the basis of their partisan consideration.

Previous theories have been presenting the aggregate-level evidences of growing consistency between voters' partisan preferences and political attitudes and claiming that ideological realignment and/or partisan sorting were revealed by bringing voter's party loyalties into line with their ideology/policy preferences. Therefore, they theorize that mass polarization arises from partisans' political attitudes moving toward their partisanship. This process assumes "rational voters" who can have their rational political attitudes.

This aggregate-level perspective, however, tends to overlook the mechanism behind polarization how the consistency between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grows. To be more specific, previous studies pay little attention to political properties of voters' decision making because they deduce individual political attitudes from the political phenomenon of aggregate-level.

This study argues that the mass response to the new political issue might be characterized not by the traditional account of "displacement" or the more recent term of "realignment", but by "conflict extension". This conflict extension enhances the existing structure of partisan conflict and plays a role as a political circumstance for partisan voters.

Meanwhile, empirical studies have found voters' partisan bias which hinder them from judging political matters objectively. Partisan voters, therefore, are not rational voters, but "rationalizing voters" who make a political decision based on partisan consideration. So they can show conformable political attitudes such as policy preferences and ideological proximity to their partisan preferenc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tends that partisan-biased attitudes in the circumstance of conflict extension are the key factors to give rise to mass polariz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growing consistency between partisanship and political attitudes. Considering this partisan bias, retrospective voting can hardly act as reward-punishment for the incumbent's political performance to improve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partisan voters have consistent policy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heir partisan preferences. Contrary to the previous researches which understood this consistency in the policy preferences as a rational and desirable property, this study

examines that consistent policy attitudes occurs as a result of voters' partisan bias.

On top of that, partisan voters reveal partisan-biased ideological proximity to the parties and the candidates. This result which is connected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partisan preferences implies that partisan-biased proximity is much more plausible than partisan preferences to the ideologically close party.

To end with, partisan voters expose partisan bias through trust in government and retrospective voting. The findings show that voters who are indifferent to major parties made vote decisions affected by governmental trust, while voters who have lopsided partisan preferences remain unaffected. These results mean that voters' governmental trust and its effect on retrospective vote choice are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Partisan bias which leads to partisan vote choice regardless of voters' trust in government implies that a large portion of voters who do not support the ruling party may practically distrust incumbent govern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s voters' partisan bias, and therefore it leads to mass polarization as the individual-level mechanism. Compared with a considerable body of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mainly described the phenomenon of mass polarization from the aggregate-level,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how partisan bias influences mass polarization with focus on individual-level of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o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points out the fundamental factor which brings about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independents have been known as a sign of the crisis of democracy. Contrary to this statement, this study argues that partisan voters may give rise to the crisis by intensify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undermining the function of retrospective voting. To sum up, i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mass polarization which stems from partisan bias and its implications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keywords : partisan bias, polarization, policy preference,
ideological proximity, trust in government, retrospective voting

Student Number : 2010-30914